



충청남도 저출산 인구정책 수립 기초연구

오 정 아



충청남도 저출산 인구정책 수립 기초연구

오정아 (연구위원)

발 간 사

2024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는, 2020년과 비교하면 0.09명 감소한 것이고, 2014년 1.21명과 비교하면 저출산 현상이 지속됨에 따른 인한 인구 감소의 문제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충청남도는 인구감소와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지역의 인구구조는 빠른 속도로 변화되고 있고, 이는 지역소멸 이슈까지 초래하고 있습니다.

저출산과 인구감소가 지역소멸 위험과 연결되는 상황에서, 충청남도는 이러한 현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선제적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 충남사회서비스원은 충청남도 정책 수립의 객관적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저출산·인구정책 수립 기초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본 연구는 통계자료 분석과 현장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저출산 인구정책에 대한 도민의 인식을 살펴보고, 청년·신혼부부·중장년 등 생애주기별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연구결과는 충청남도의 인구정책 수립 및 중앙정부의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근거기반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수행한 연구원과 관련 부서 공무원, 그리고 관심을 보내주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의 뜻을 전하며, 본 연구결과가 충청남도의 지속가능한 인구정책 수립에 기여하길 기대합니다.

2025년 11월

충남사회서비스원장 김 영 옥

연구요약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 필요성

(1) 충청남도 인구구조의 위기와 청년 기반 약화

- 인구 고령화와 함께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지속적 감소 또한 우려되는 지점임.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및 「충청남도 생산가능인구 현황(2023)」에 따르면, 도내 생산가능인구는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는 지역경제 기반 약화, 지방세수 축소, 공공서비스 유지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도 기초연구는 필수적임. 인구 변화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야 정책의 방향이 명확해지고, 한정된 재정·행정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기 때문임. 이번 기초연구는 단기적인 출산 장려정책에 머무르지 않고, 교육, 주거, 일자리, 문화, 복지 등 사회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통합적으로 고려한 장기적 인구정책 로드맵 수립을 위한 기반자료가 될 것임. 이를 통해 충청남도는 지속가능한 인구구조 회복과 지역균형 발전의 비전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봄

2)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충청남도민의 저출산 및 인구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조사하고, 특히 청년층의 결혼과 출산, 지역사회 내 양육 및 돌봄환경에 대한 인식, 그리고 기존 저출산 정책에 대한 성과와 한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함
- 이를 통해 충청남도의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며, 도민 인식조사 결과를 토대로 향후 ‘충청남도 저출산 대책 5개년 계획(제7차)’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음

2. 충청남도 저출산 인구정책 인식조사

□ 조사개요

1) 조사대상 및 방법

- 충청남도의 저출산 인구정책에 대한 인식조사를 위해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19세부터 49세도민 44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음. 조사 기간은 25년 5월부터 6월까지 진행되었고, 조사 방법은 온라인 모바일 조사를 진행하였음

2) 분석방법

- 본 연구는 SPSS 26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성별, 연령, 직업, 거주지, 혼인상태, 자녀유무,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 인구현황 및 대응에 대한 인식, 가족에 대한 인식 등에 대해 빈도분석을 진행하였음

□ 조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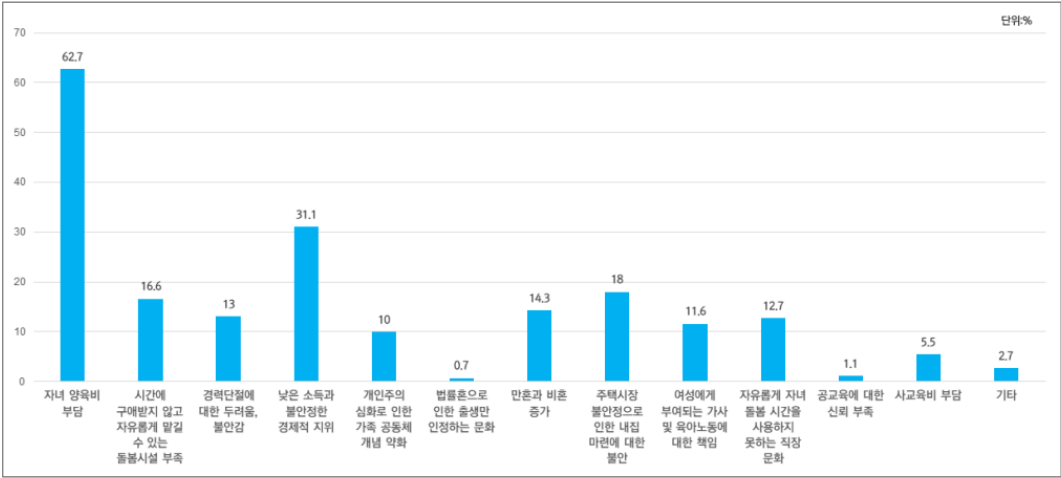
1) 인구학적 특성

- 총 440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55.5%는 남성, 44.5%는 여성으로 구성되었으며, 특히 41-49세 연령층이 36.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2) 저출산 현상에 대한 인식

(1) 저출산 현상 원인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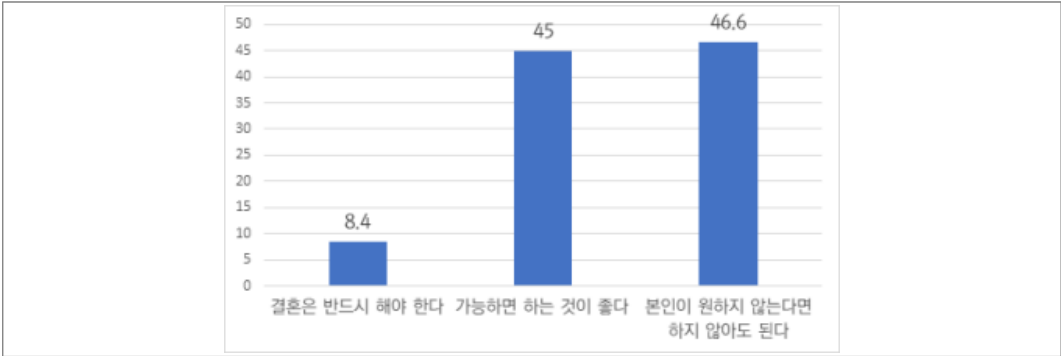
- 전체적으로 응답자들은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으로 자녀 양육비 부담(62.7%)을 꼽았음. 그 다음으로는 낮은 소득과 불안정한 경제적 지위(31.1%), 주택시장 불안으로 인한 미래 불안(18.0%), 마땅히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 서비스 부족(16.6%), 사회 분위기 고착(14.3%) 순으로 나타났음. 반면, 법률혼 이외 결혼의 사회적 인정 부족(0.7%)과 기타 응답(2.7%)은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했음
- 즉, 경제적 부담과 주거·돌봄 불안이 핵심적 원인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제도적·문화적 요인은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1] 저출산 현상의 원인에 대한 인식(다중응답)

(3) 결혼에 대한 인식

○ 조사 결과, 결혼에 대해 “반드시 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의 8.4%에 불과한 반면, “가능하면 하는 것이 좋다”라는 응답은 45.0%,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응답은 46.6%로 나타났다. 이는 결혼을 개인의 선택 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뚜렷하며, 전통적 의미에서의 결혼 의무 인식은 약화되고 있음을 시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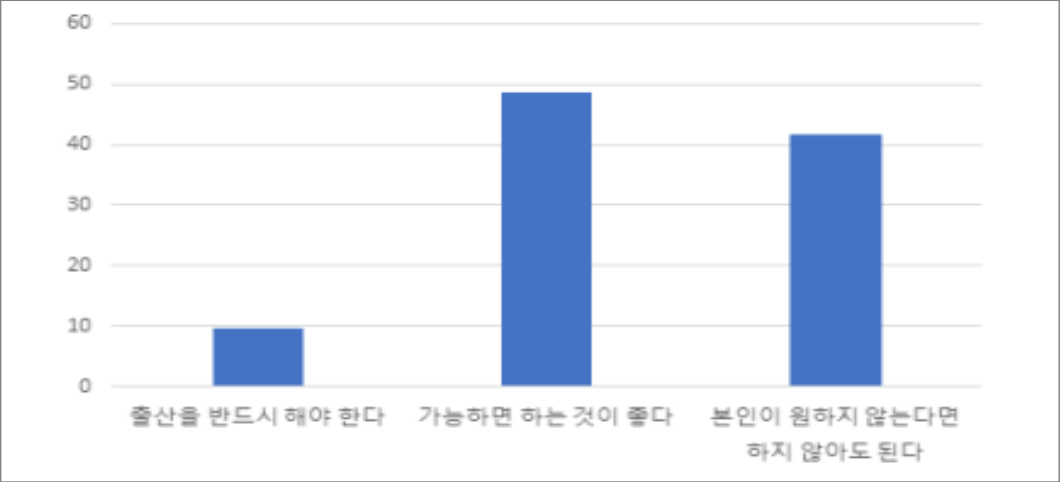


[그림 2] 결혼에 대한 인식(전체)

(4) 출산에 대한 인식

○ 출산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440명 중 “출산은 가능한 한 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한 비율은 48.6%로 가장 높았으며,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면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응답은 41.6%, “출산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응답은 9.8%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출산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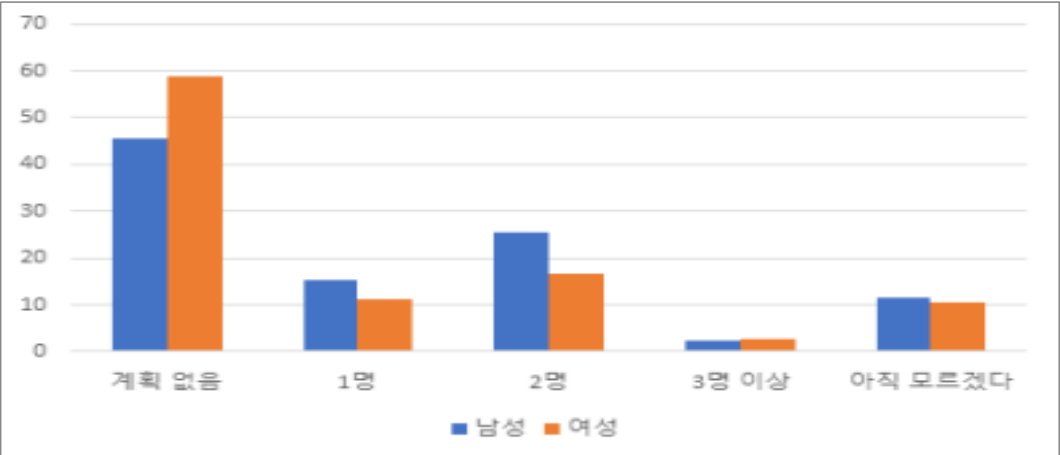
권장하되 강제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며,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는 분위기가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함



[그림 3] 출산에 대한 인식(전체)

○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1.4%가 “출산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반면 1명(13.4%), 2명(21.6%), 3명 이상(2.5%)을 계획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음. 또한 “아직 모르겠다”라는 응답도 11.1%에 달해, 상당수가 출산 여부에 대해 불확실한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이는 충청도민의 출산 의향이 매우 약화되고 있으며, ‘무계획’ 또는 ‘불확실’ 집단이 주를 이루는 특징을 보여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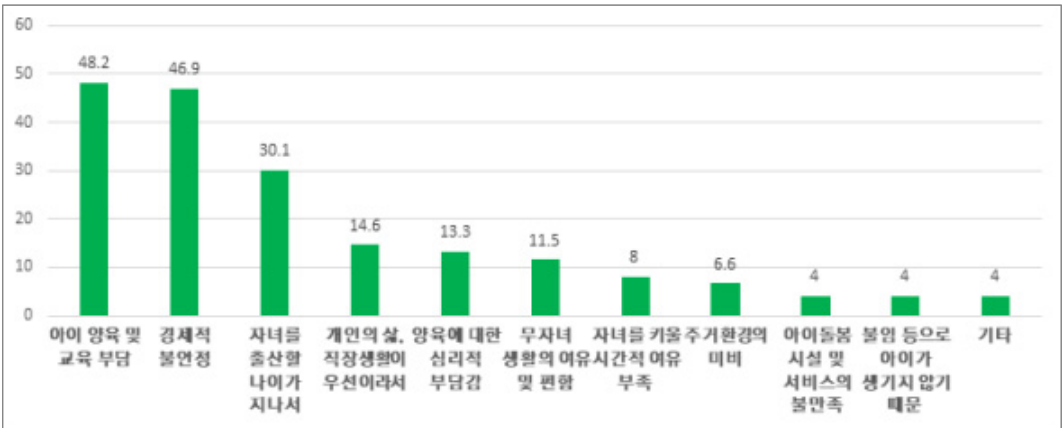
(단위: %)



[그림 4] 자녀출산(추가출산) 계획

○ 자녀출산을 계획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만, 출산을 계획하지 않는 이유를 질문하였음.
그 결과, 출산 계획이 없는 응답자(226명)의 주요 사유는 ‘양육 및 교육 비용 부담 (48.2%)’과 ‘경제적 불안정(46.9%)’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음

(단위: %)



[그림 5] 자녀출산(추가출산) 위험요인

(5)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인식

○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중 ‘대체로 그렇다’(55.9%)와 ‘매우 그렇다’(22.5%)라고 응답한 비율이 78.4%에 달해,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해 비교적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음. 반면, ‘전혀 그렇지 않다’(5.5%)와 ‘별로 그렇지 않다’(16.1%)는 비수용층은 21.6% 수준으로, 대체로 긍정적 태도가 우세하다고 볼 수 있음

[표 1] 다양한 형태(사실혼 포함)의 혼인관계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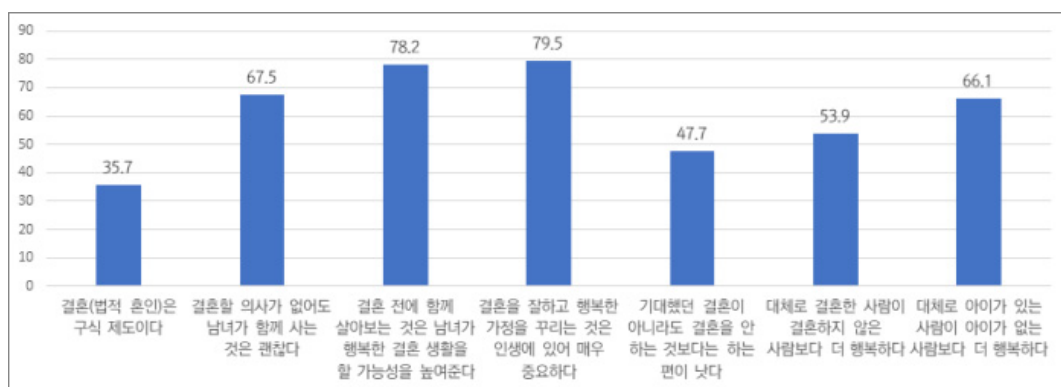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사례수	매우 부정적이다	대체로 부정적이다	대체로 긍정적이다	매우 긍정적이다
전체		440	5.5	16.1	55.9	22.5
성별	남성	244	6.6	14.8	55.3	23.4
	여성	196	4.1	17.9	56.6	21.4
학력	고졸	136	5.1	16.2	52.9	25.7
	대졸	269	5.9	14.9	58.4	20.8
	대학원 이상	35	2.9	25.7	48.6	22.9

구분		사례수	매우 부정적이다	대체로 부정적이다	대체로 긍정적이다	매우 긍정적이다
연령	20-30세	135	3.7	17.8	54.1	24.4
	31-40세	143	8.4	16.8	53.8	21.0
	41-49세	162	4.3	14.2	59.3	22.2
결혼 여부	미혼	203	3.4	17.7	55.2	23.6
	기혼 (사실혼 포함)	232	6.9	14.7	57.3	2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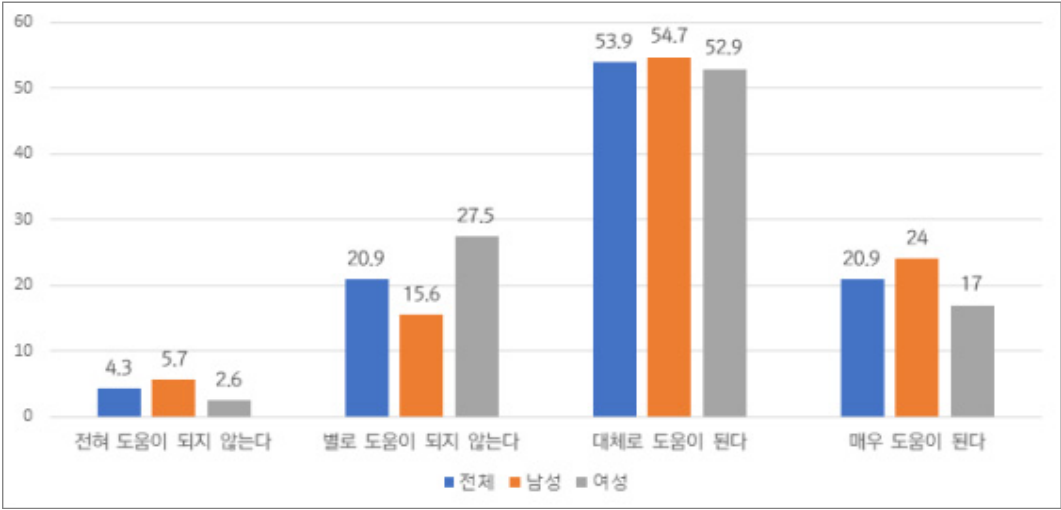
(6) 동거와 프랑스 팩스제도에 대한 인식

- 응답자들은 전반적으로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전통적 관점보다는 개인 선택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음. 결혼은 법적 제도라는 응답이 35.7%에 그쳤으며, 반대로 결혼 의사가 없어도 동거는 괜찮다(67.5%), 결혼 전에 함께 살아보는 것은 바람직하다(78.2%)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음



[그림 6] 결혼과 동거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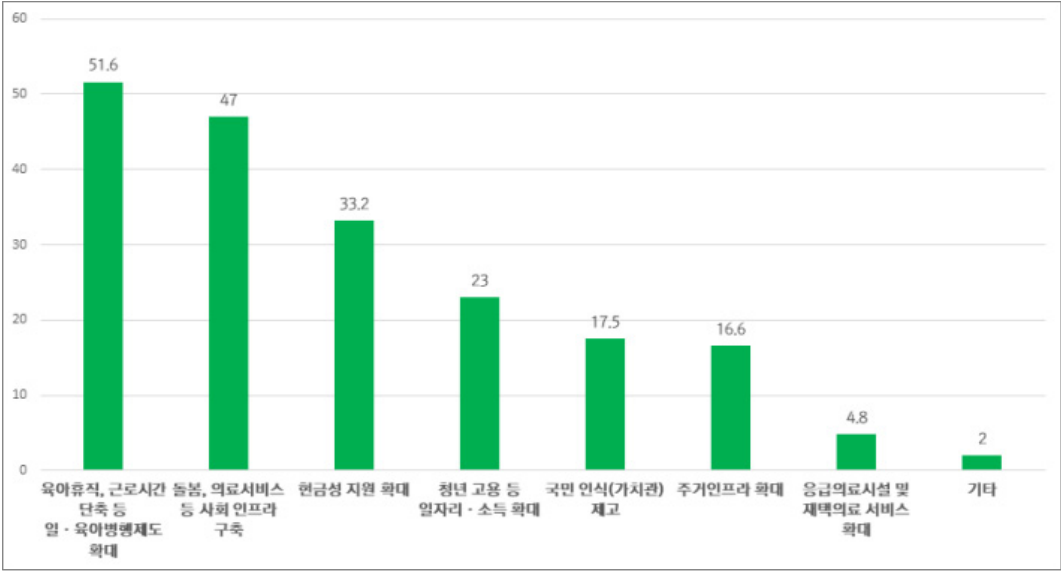
- 프랑스 팩스 제도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중 71.9%가 프랑스의 저출산 정책 국내 도입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음



[그림 7] 저출산 현상 해결의 대안으로 프랑스 팩스제도 도입

(7) 저출산 대응정책

-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중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는 ‘육아휴직·근로시간 단축 등 일·가정 양립 제도 확대’가 전반적으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음. 성별, 연령, 결혼 여부, 자녀 유무, 직업군 등 다양한 집단에서 차이는 있었으나, 가족친화적인 정책에 대한 수요는 전 계층에 걸쳐 공통적으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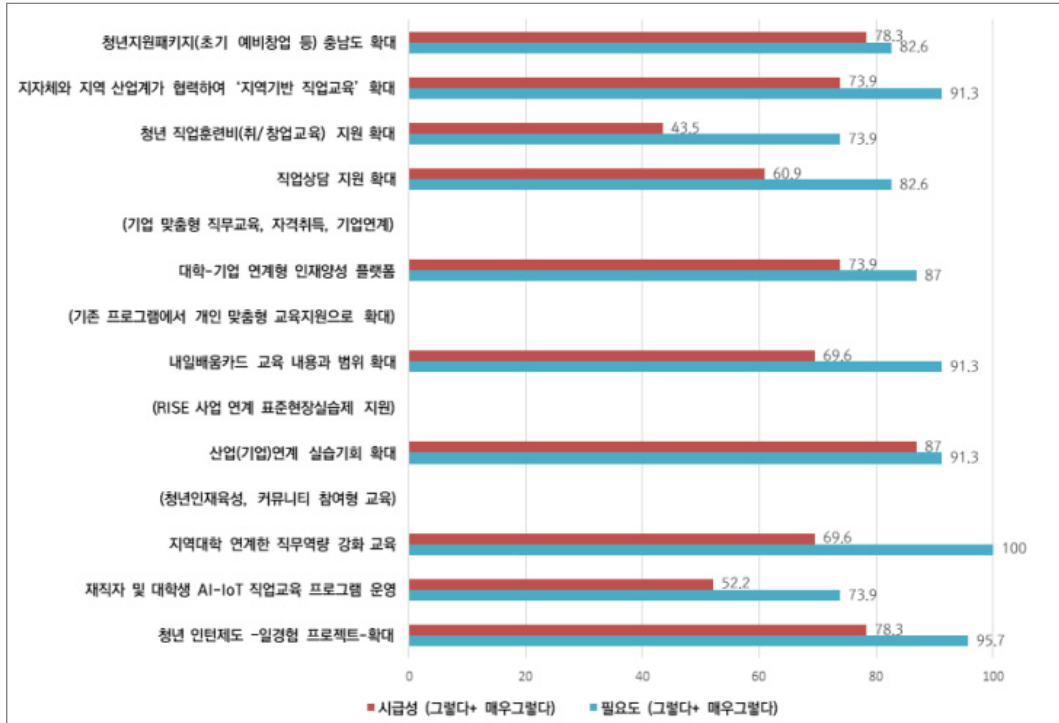


[그림 8] 저출산 대응정책 우선순위

3. 전문가 델파이 조사

- 저출산 인구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 발굴을 위해 인구, 사회복지, 저출산 분야 연구자 등 학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하였음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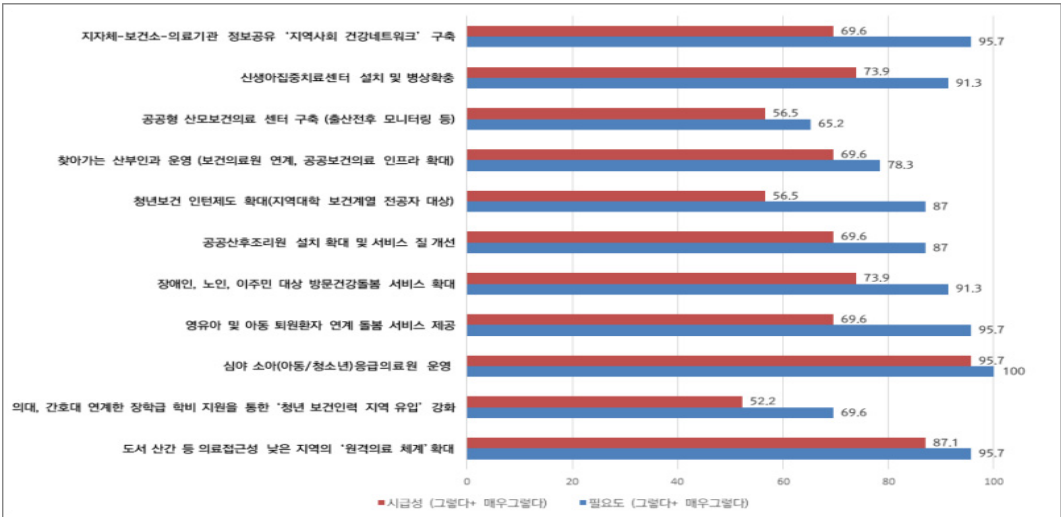


[그림 9] 교육-취·창업정책의 필요도 및 시급성

(1) 보건의료 정책

- 필요도는 대부분 90점 이상으로, 전문가들이 보건의료 분야의 정책 필요성을 매우 높게 인식하고 있음. 특히 산모·소아·청소년 응급의료원 운영(100점) 과 의료취약지역 원격의료 체계 확립(95.7점) 은 필요성과 시급성 모두 최상위권임. 이는 의료 접근성과 돌봄 연계체계 강화가 결혼·출산·정착을 위한 핵심 기반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줌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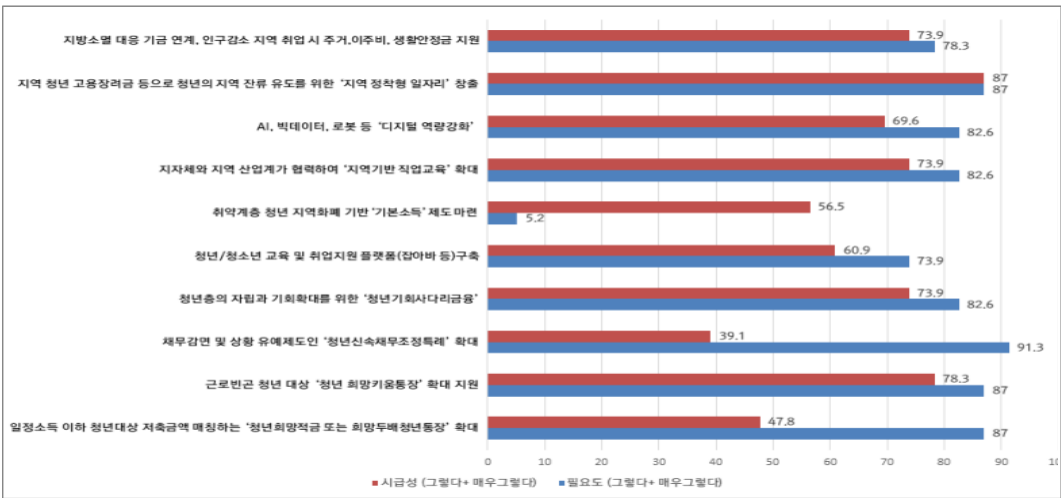


[그림 10] 보건의료정책의 필요도 및 시급성

(2) 소득보장정책

○ 전체 평균 필요도 약 85점 이상, 즉 대부분 정책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공감대가 높음.
그러나 시급성은 과제별로 격차가 크며, 일부 항목(예: 청년 부채경감, 기본소득제)은 시급성 평가가 낮음. 즉, 청년의 경제적 자립 기반은 필요하지만, 재정 여건·정책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단계적 추진이 필요하다는 인식으로 볼 수 있음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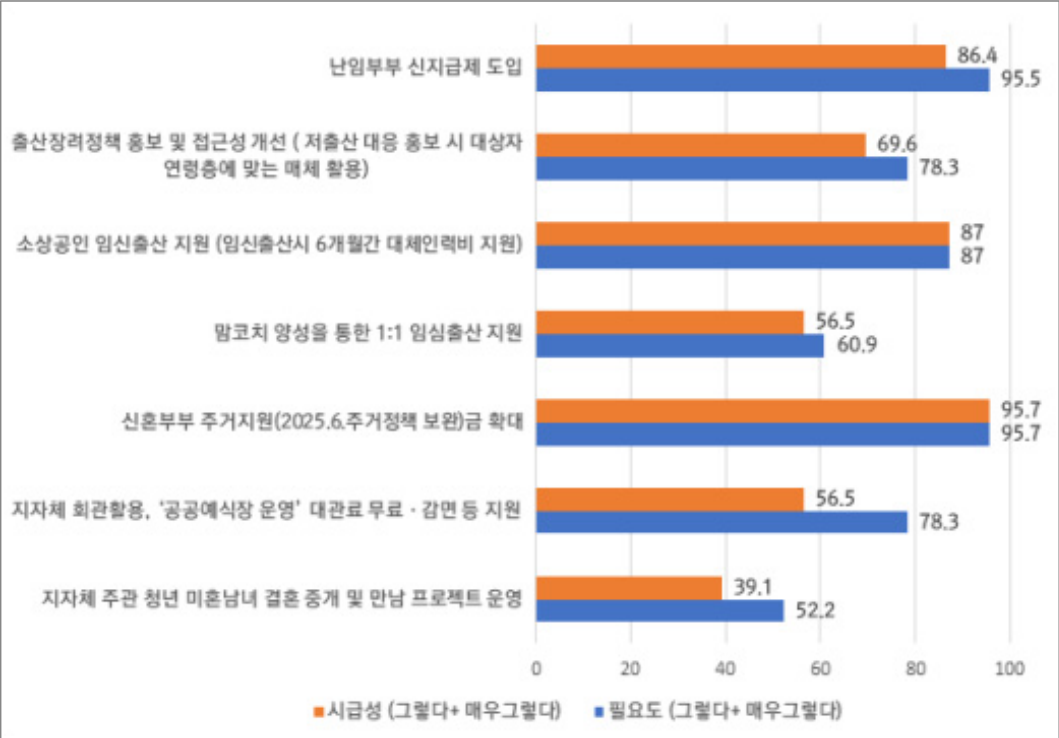


[그림 11] 소득보장정책의 필요도 및 시급성

(3) 결혼·임신·출산정책

○ 결혼·임신·출산 지원정책의 필요도 평균이 80점 이상, 특히 신혼부부 주거지원과 난임부부 지원정책의 필요성과 시급성이 모두 매우 높게 평가되었음. 반면 결혼중개 및 만남 프로그램은 필요도·시급성이 낮아, 정책 실효성에 대한 전문가 회의적 시각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결혼·출산을 경제적 부담 완화와 연결짓는 방향(주거·의료비·보조금 등)이 핵심 트렌드로 확인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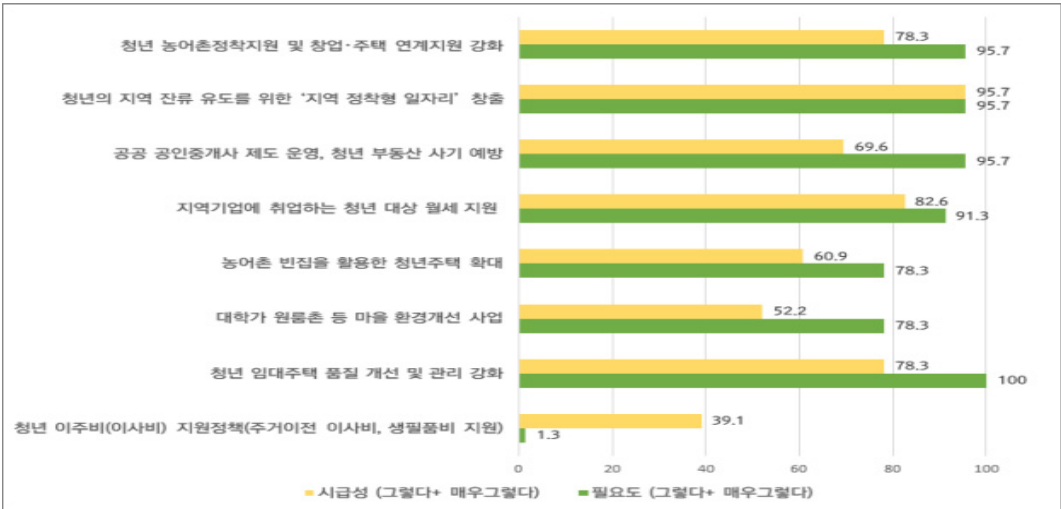


[그림 12] 결혼·임신·출산정책의 필요도 및 시급성

(4) 주거영역 정책

○ 주거영역 정책 조사 결과, '주거비 지원'보다 '주거 안정성·정착성 강화'가 더 중요하게 평가되었음. 특히 단순 이사비 지원(1번)은 거의 불필요로 평가된 반면, 임대주택 품질 개선(2번)과 정착형 일자리 창출(7번)은 매우 높게 평가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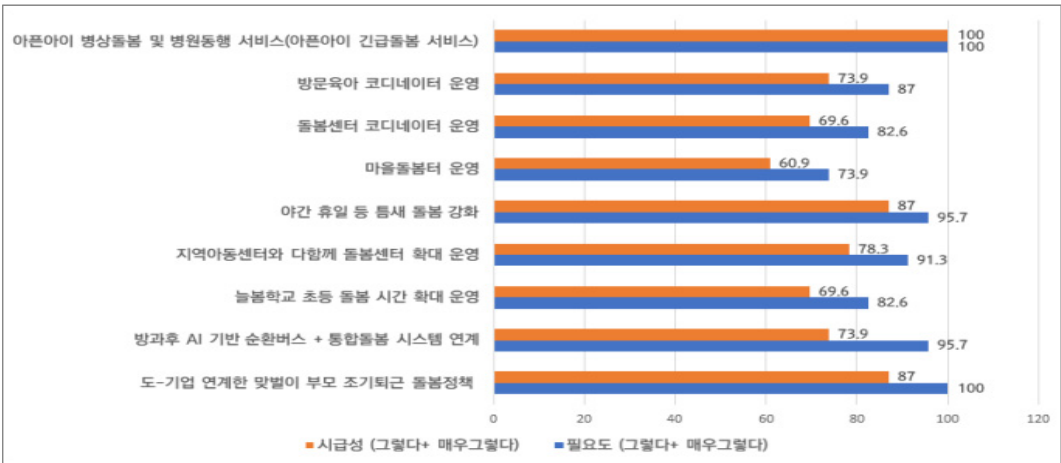


[그림 13] 주거영역 정책의 필요도 및 시급성

(5) 돌봄영역 정책

○ 돌봄영역에서 핵심요소는 “시간적 유연성과 긴급대응 능력”의 돌봄정책임. 특히 야간·휴일·병상 돌봄 서비스는 부모의 근로형태 변화와 가족구조 다양화에 따라 즉시적 정책 개입이 필요한 돌봄 사각지대 해소 과제로 평가됨. 즉, “시간 기반 돌봄” + “긴급 돌봄”이 돌봄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부상됨. 야간·휴일·병상돌봄 등 노동시간 중심 사회의 새로운 돌봄 수요 반영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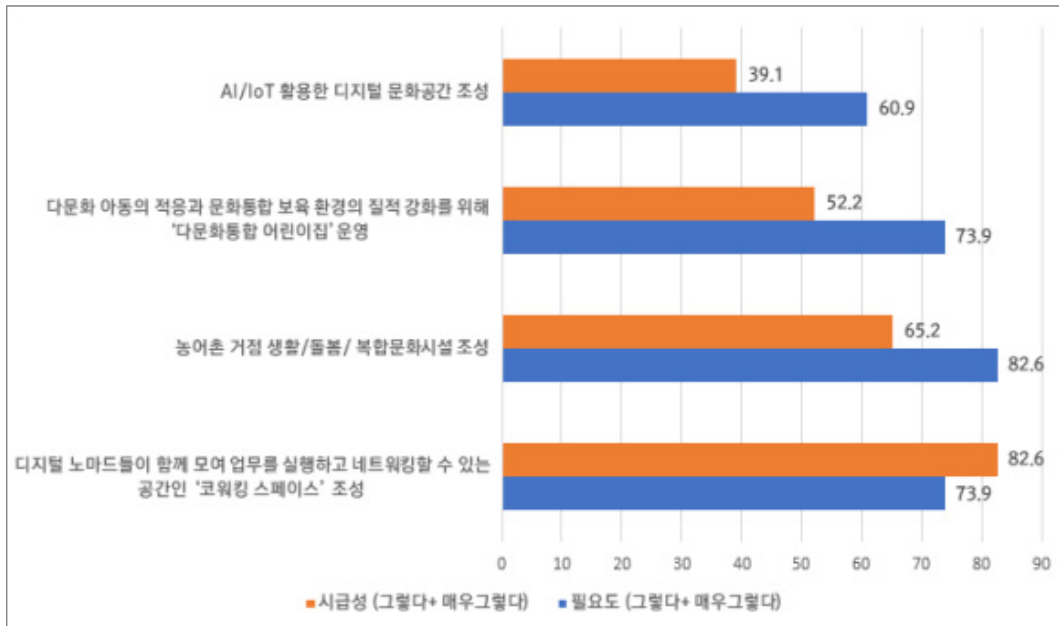


[그림 14] 돌봄영역 정책의 필요도 및 시급성

(6) 문화·여가 정책

- 문화·여가 인프라 정책은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는 보조적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코워킹 스페이스 조성'은 기존 산업·창업정책과의 연계성이 높아 인구유입형 핵심정책으로 의미가 있음. 반면, 첨단기술 기반 문화공간(4번)은 실현 가능성과 지속성이 낮아 우선순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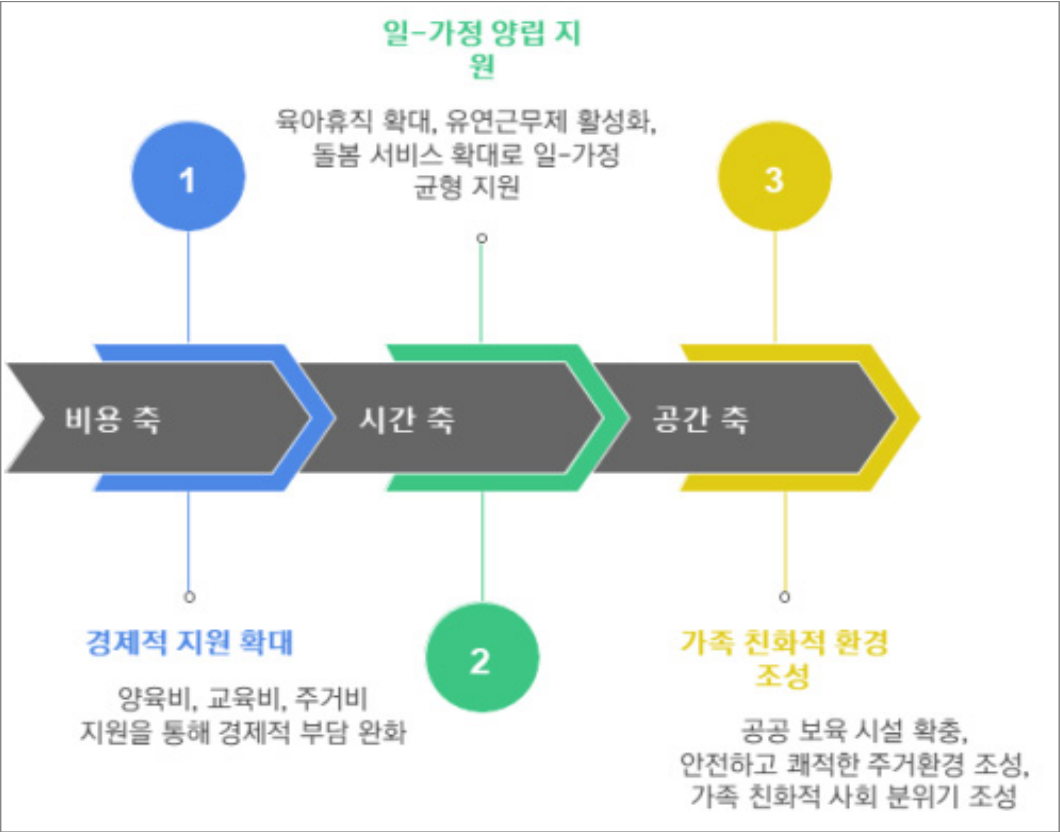
[그림 15] 문화·여가 정책의 필요도 및 시급성

3. 정책 제언

□ 저출산 인구정책 전략 프레임

- 충남도민 대상으로 진행한 인식조사 결과, 전반적으로 저출산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으나, 연령이나 성별에 따라 체감 수준과 정책 요구가 다르게 나타났음. 특히 기혼자, 여성, 자녀 양육자 등은 자녀돌봄과 일 병행의 한계를 호소하였고,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의 시급성도 제기되었음

- 반면, 청년층과 미혼자는 결혼과 출산보다 경제적 기반 마련과 주거 안정을 우선적으로 선호하였음. 이는 충청남도의 저출산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단순히 출생률 상향에 집중하기보다 청년의 ‘경제적 안정 기반 → 돌봄 공공성 강화 → 지역 정착형 삶의 질 개선 → 가족 문화 인식 전환’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프레임에 구축해야 함을 의미함. 이에 저출산 인구 정책 수립을 위한 전략 프레임은 비용·시간·공간 3축 병행으로 도출됨
- 첫째, 비용축(경제적 지원 확대) 은 출산·양육에 드는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데 초점을 둠.
- 둘째, 시간축(일·가정 양립 지원)은 일과 양육의 병행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여건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둠
- 셋째, 공간축(가족친화적 환경 조성) 은 생활권 내에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주거·공동체 환경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함



[그림 16] 충청남도 저출산 인구정책 전략 프레임

□ 전략프레임 기반 핵심과제

- 전문가 델파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략프레임별 추진정책을 필요도와 시급성이 높은 핵심추진군, 필요도는 높지만 시급성은 낮은 중기 개선군, 필요도는 낮지만 시급도는 높은 단기 보완군, 필요도와 시급성이 모두 낮은 장기 검토군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음

1) 필요도와 시급성이 높은 핵심추진 정책

- 정책에 대한 필요도와 시급도가 모두 높은 핵심추진군은 정책 효과성과 긴급성이 모두 높아 즉시 추진이 필요한 정책을 의미함. 비용축인 경제적 지원으로는 ‘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와 ‘청년 이전·이사비 지원’사업이 도출되었음. 시간축인 일·가정 양립지원으로는 ‘도-기업 연계형 돌봄 플랫폼 구축’, ‘야간·휴일 돌봄 서비스 확대’ 등의 사업이 주요 내용으로 도출됨. 마지막 공간축으로 가족친화적 환경조성으로는 ‘산모·소아 공공의료원 운영’와 ‘지역 정착형 일자리·주거 복합단지 조성’사업이 도출됨

[표 2] 델파이 조사 결과 도출된 전략프레임별 핵심추진 정책

구분	정책명	내용 요약	추진 방향
경제적 지원	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	주거·출산 통합 지원, 결혼비용 완화	도비+국비 결합형 단기 핵심사업
	청년이전·이사비 지원	귀향·이주 청년 정착 촉진	인구유입형 생활비 지원
일·가정 양립	도-기업 연계형 돌봄플랫폼 구축	기업-지자체 협약형 돌봄공유 모델	시간권 협약제, 기업인센티브 연계
	야간·휴일 돌봄 서비스 확대	맞벌이·한부모 가정 부담 경감	시군 통합 돌봄센터 확충
공간·인프라	산모·소아 공공의료원 운영	출산·양육 의료안전망 핵심시설	충남권 국립의료원형 모델 구축
	지역 정착형 일자리·주거 복합단지	일자리·주거 복합형 청년정착단지	도심형 시범 + 농촌형 시범 병행

- 이상과 같이 델파이 조사 결과 도출된 핵심추진 정책을 토대로 보다 실효성 있는 사업에 대해 각 영역별로 제안하고자 함. 해당 사업은 위에 도출된 정책을 기반으로 충청도에서 추진 가능한 정책으로 전환하여 제안됨

(1) 일-가정 양립: 시간권 협약제 및 기업 돌봄 인증제도 운영

- 충남도는 저출산 문제는 여성 경력단절과도 연결되어 있음. 즉,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재사회화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낮은 출생률과 인구감소는 해결되기 어려움. 이에 공공·민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근로시간의 유연성 확보하며 돌봄 인프라 접근성 향상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형 일·가정 양립정책이 필요함

[표 3] 시간권 협약제 및 기업 돌봄 인증제도 등에 대한 정책 제언

구분		내용
시간권 협약제 도입	개념	기업과 지방정부가 협약을 통해 근로자의 시간조정권을 보장하고, 근로시간 단축·시차출퇴근·재택근무 등을 제도화
	주요내용	① 참여기업은 시간권제 도입 시 도의 인증 획득 ② 근로자에게 일정 범위 내에서 '자율근무시간권' 부여 ③ 참여기업에는 세제·행정 인센티브 제공
	기대효과	- 근로시간 유연화로 출산·양육기 여성의 경제활동 지속 - 기업의 가족친화 이미지 제고 및 인력유지율 상승
기업 돌봄인증제 신설	개념	가족친화·돌봄친화 경영 실천 기업에 대해 지방정부가 인증을 부여하고, 공공조달·홍보·세제혜택 등 인센티브 제공
	인증기준	① 시간권제 도입 여부 ② 돌봄휴가 및 대체인력 지원 ③ 사내 보육공간 또는 돌봄 연계 서비스 운영 ④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
	추진방식	- 충남도 주관 인증제 운영, 고용노동부 가족친화인증제와 연계 - 시·군 단위의 참여기업 발굴 및 컨설팅 지원
	기대효과	- 민간의 자율적 참여 유도 - 일·가정 양립 문화의 확산 - 지역 내 가족친화기업 생태계 조성
AI기반 돌봄 예약·배정 시스템 구축	개념	AI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돌봄 수요(아동·노인·장애인 등)와 돌봄인력(요양보호사, 방문간호사 등)을 실시간 매칭
	기능구성	① 수요자 앱·웹 접수 ② AI 스케줄링 알고리즘에 의한 배정 ③ 서비스 제공 후 만족도·품질 피드백 반영
	연계방안	- 충남사회서비스원 돌봄인력DB 연동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용센터 등과 데이터 협약
	기대효과	- 행정 효율성 제고 및 인력낭비 최소화 - 긴급돌봄 대응 시간 단축(현재 평균 3일→1일 이내) - 돌봄서비스의 품질·접근성 향상

(2) 가족친화적 환경조성: 공간-인프라 구축 돌봄정책 ‘틈새·응급’우선전환

- 현재 충남도의 돌봄 정책은 시설 중심의 주간 돌봄에는 어느 정도 대응하고 있으나, 정규 시간 외(야간, 휴일)에 발생하는 아픈아이 긴급 의료 돌봄 공백에 취약함. 이는 일하는 부모의 업무 중단과 돌봄의 불안정성을 야기하는 저출산 문제의 핵심 ‘틈새’임. 현재 소아과 야간 및 휴일 진료는 대형 응급실에 집중되어 있음.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달빛병원’이 운영되고 있지만, 이마저 천안에 두 곳, 아산과 공주 등 도시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농어산촌 지역민의 접근성이 낮음
- 이에 일본의 보건소 중심 권역별 심야 소아과 운영 모델을 벤치마킹하여, 야간 및 휴일에도 안정적으로 진료와 연계 돌봄을 제공하는 ‘아동 건강 돌봄 허브’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365일 24시간에 준하는 응급·틈새 의료 돌봄 공백 ZERO를 목표로 ‘돌봄정책 틈새·응급 우선전환’을 제안하고자 함. 일본은 보건소 기반 권역별 거점을 통해 지역 분산형 응급 대응체계를 구축하였음. 이를 벤치마킹하여 충남형 ‘틈새·응급’우선전환 돌봄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표 4] 돌봄정책 ‘틈새·응급’우선전환사업의 핵심전략 : 허브 & 바우처 연계모델

전략구분	정책목표	주요내용
의료거점 구축	권역별 야간·휴일 의료돌봄 허브 지정	• 보건소 주도 하에 지역 병·의원과 협력하여 심야 진료(24시까지) 전담 거점 확보.
돌봄연계 강화	긴급돌봄 패키지 바우처 신설	• 진료와 동시에 병원 동행 및 간병 돌봄이 가능한 전용 바우처를 제공하여 부모의 부담 즉시 해소

2) 필요도는 높고 시급성은 낮은 중기 개선군

- 본 분석에서는 정책의 필요도는 높으나, 상대적으로 시급성이 낮은 과제군을 중심으로 도출하였음. 그 결과, 경제적 지원측에서는 ‘청년 임대주택 품질개선’과 ‘일·생활균형 인증제 도입’이, 일·가정 양립측에서는 ‘청년 인턴제·일경험 확대’와 ‘장애인·노인 방문건강관리’가, 공간·인프라 측에서는 ‘신생아 중증치료센터 설치’와 ‘농촌 청년창업 및 빈집활용’이 주요 정책으로 제시되었음

[표 5] 충남도 저출산 인구정책의 필요도는 높으나 시급성은 낮은 중기개선 추진 정책

구분	정책명	내용 요약	추진 방향
경제적 지원	청년 임대주택 품질개선	주거 품질·관리 개선 중심	중기 예산 반영, 주거복지센터 연계
	일·생활균형 인증제 도입	기업참여형 가족친화 인증제	도-고용부 협력 인증제도 신설
일·가정 양립	청년 인턴제·일경험 확대	고용안정 및 경력단절 예방	도내 기업 협약형 일경험 트랙 구축
	장애인·노인 방문건강관리	가족돌봄 완화형 방문서비스	보건소-복지관 연계형 통합모델
공간·인프라	신생아중증치료센터 설치	고비용 의료시설 구축 필요	중앙정부 공모·국비 확보 필요
	농촌 청년창업 및 빈집활용	농촌정착 및 인구순환형 모델	농촌형 인구활력특화사업과 결합

목 차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내용 및 방법	5

제2장	충청남도 저출산·인구현황	
	1. 저출산 인구변화 추세	13
	2. 인구이동 실태	28
	3. 시사점	33

제3장	국내 저출산 인구정책	
	1. 저출산 인구정책 관련 법 및 제도	37
	2. 국내 저출산 인구정책 사례	48
	3. 시사점	55

제4장	충청남도 저출산 인구정책 인식조사	
	1. 조사개요	59
	2. 조사결과	60
	3. 전문가 델파이 조사	99
	4. 소결	118

제5장	정책 제언	
	1. 저출산 인구정책 전략 프레임	121
	2. 전략프레임 기반 핵심과제	123

참고문헌		142
-------------	--	-----

표 목차

[표 1-1] 연구범위	5
[표 1-2] 1-2차 설문조사 시기 및 대상	7
[표 1-3] 전문가 자문회의 진행	8
[표 1-4] 정책간담회	8
[표 2-1] 인구변화율	13
[표 2-2] 시도별 출생아수 현황	15
[표 2-3] 시도 모의 연령별 합계출산율	19
[표 2-4] 충청남도 시군별 출산율 변화	21
[표 2-5] 주민등록 인구현황(25.6.기준)	23
[표 2-6] 충청남도 시군별 인구현황(25.6.기준)	24
[표 2-7] 등록 외국인 현황(25.6.기준)	25
[표 2-8] 충청남도 연도별 등록외국인 현황	27
[표 2-9] 충청남도 시군구별 인구이동 현황	31
[표 2-10] 충청남도 연령별 인구이동 현황	32
[표 3-1]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주요 내용	38
[표 3-2]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주요 내용	41
[표 3-3] 제1차~제4차 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	43
[표 3-4] 지자체 예식장소 지원사업	49
[표 3-5] 지자체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현황	50
[표 3-6] 타지역 공공임대주택 사례	52
[표 3-7] 지자체 조부모 등 양육수당 사업 현황	52
[표 3-8] 인천시 1억+드림	53
[표 3-9] 전라남도 출생기본수당	54
[표 3-10] 대전시 인구감소 대응 공모사업 주요 내용	55
[표 4-1] 1-2차 설문조사 시기 및 대상	59
[표 4-2] 조사참여자 인구학적 특성	61

[표 4-3] 연령에 따른 성별, 거주지역, 혼인상태, 자녀유무	63
[표 4-4] 연령에 따른 직업, 학력, 소득	64
[표 4-5] 성별, 연령, 거주지역, 혼인상태에 따른 충남 저출산현상의 심각성	65
[표 4-6] 자녀유무, 직업, 학력, 소득에 따른 충남사회 저출산현상의 심각성	66
[표 4-7] 저출산 현상의 원인에 대한 인식(다중응답)	71
[표 4-8] 결혼에 대한 인식	74
[표 4-9] 출산에 대한 인식	76
[표 4-10] 자녀출산(추가출산) 계획	81
[표 4-11] 자녀출산(추가출산) 위험 요인	84
[표 4-12] 다양한 형태(사실혼 포함)의 혼인관계에 대한 의견	85
[표 4-13] 결혼과 동거에 대한인식(대체로 그렇다+매우그렇다)	88
[표 4-14] 저출산 현상 해결의 대안으로 프랑스 팩스제도 도입	91
[표 4-15] 저출산 정책에서 가장 우선적으로고려되어야 할 대상에 대한 인식(다중응답)	94
[표 4-16] 저출산 대응 정책 우선순위	97
[표 4-17] 교육-취·창업 정책의 필요도 및 시급성	100
[표 4-18] 보건의료 정책의 필요도 및 시급성	103
[표 4-19] 소득보장 정책의 필요도 및 시급성	106
[표 4-20] 결혼·임신·출산정책의 필요도 및 시급성	109
[표 4-21] 주거영역 정책의 필요도 및 시급성	111
[표 4-22] 돌봄 정책의 필요도 및 시급성	114
[표 4-23] 문화·여가 정책의 필요도 및 시급성	117
[표 5-1] 충남도민 인식조사 결과 대응전략 프레임 및 정책적 시사점	122
[표 5-2] 델파이 조사 결과 도출된 전략프레임별 핵심추진 정책	124
[표 5-3] 충남형 청년주택 대출이자 선지원 사업	125
[표 5-4] 충남형 청년주택 대출이자 선지원 사업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리스크	125
[표 5-5] 충남형 청년주택 대출이자 선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제어장치(안)	126
[표 5-6] 충남형 청년주택 대출이자 선지원 사업의 이중 트랙 설계방안	126
[표 5-7] 충남형 청년주택 대출이자 선지원 사업 실제 운영시 제어장치	127
[표 5-8] 시간권 협약제 및 기업 돌봄 인증제도 등에 대한 정책 제언	132
[표 5-9] 돌봄정책 '틈새·응급'우선전환사업의 핵심전략 : 허브 & 바우처 연계모델	134
[표 5-10] 돌봄정책 '틈새·응급'우선전환사업의 타당성 및 핵심 추진방안	134
[표 5-11] 충남도 저출산 인구정책의 필요도는 높으나 시급성은 낮은 중기개선 추진 정책	136
[표 5-12] 청년 임대주택 품질 개선사업 추진전략 및 효과	137
[표 5-13] 일-생활 균형 인증제 추진전략 및 효과	138

[표 5-14] 청년 인턴제·일경험 사업 추진전략 및 효과	139
[표 5-15] 중앙정부의 산모 신생아 관련 유사 사업	139
[표 5-16] 신생아 중증치료센터 설치의 추진전략과 기대효과	141

그림 목차

[그림 1-1] 연구수행과정	9
[그림 2-1] 인구동태 건수 추이	14
[그림 2-2] 연령별 여성인구 및 혼인율(2023년)	16
[그림 2-3] 연령별 여성인구 및 출산율(2023년)	17
[그림 2-4] 합계출산율(2024)	18
[그림 2-5] 충청남도 연도별 등록외국인 현황	27
[그림 2-6] 전국 인구이동 현황	28
[그림 2-7] 2023-2025년 전국 인구이동 현황	29
[그림 2-8] 2023-2025년 전국 인구이동 현황 저자 재구성	29
[그림 2-9] 시군구별 순이동률	30
[그림 3-1] 출생아 수 및 출산율 변동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시기	42
[그림 4-1] 조사 참여자 일반적 특성	62
[그림 4-2] 저출산 현상의 원인에 대한 인식(다중응답)	68
[그림 4-3] 성별에 따른 저출산 현상의 원인에 대한 인식(다중응답)	69
[그림 4-4] 연령에 따른 저출산 현상의 원인에 대한 인식(다중응답)	70
[그림 4-5] 결혼에 대한 인식(전체)	73
[그림 4-6] 성별에 따른 결혼에 대한 인식	74
[그림 4-7] 출산에 대한 인식(전체)	77
[그림 4-8] 성별에 따른 출산 인식	78
[그림 4-9] 자녀 수에 따른 출산 인식	78
[그림 4-10] 소득에 따른 출산 인식	79
[그림 4-11] 자녀출산(추가출산) 계획	81
[그림 4-12] 자녀출산(추가출산) 위험요인	83
[그림 4-13] 결혼과 동거에 대한 인식	90
[그림 4-14] 성별에 따른 결혼과 동거에 대한 인식	90
[그림 4-15] 저출산 현상 해결의 대안으로 프랑스 팩스제도 도입	92

[그림 4-16] 저출산 대응정책 우선순위	96
[그림 4-17] 교육-취·창업정책의 필요도 및 시급성	99
[그림 4-18] 보건의료정책의 필요도 및 시급성	102
[그림 4-19] 소득보장정책의 필요도 및 시급성	105
[그림 4-20] 결혼·임신·출산정책의 필요도 및 시급성	108
[그림 4-21] 주거영역 정책의 필요도 및 시급성	110
[그림 4-22] 돌봄영역 정책의 필요도 및 시급성	113
[그림 4-23] 문화·여가 정책의 필요도 및 시급성	116
 [그림 5-1] 충청남도 저출산 인구정책 전략 프레임	 122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방법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 필요성

(1) 국가 차원의 정책 한계와 지역 대응의 시급성

- 우리 사회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속도로 저출산·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단순한 인구 감소를 넘어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러한 인구변화는 경제성장 둔화, 생산가능인구 감소, 사회복지 지출 증가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국회예산정책처, 2023)
- 충청남도 또한 이 같은 구조적 위기를 고스란히 경험하고 있으며, 특히 젊은층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및 인접 대도시로의 인구 유출이 지역의 고령화 속도를 가속화시키고 있음.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충청남도 청년층의 타지역 유출은 지속적인 추세이며, 이는 교육·일자리·문화 인프라 부족 등 지역 경쟁력 저하와 밀접하게 연관됨
- 일시적으로는 천안, 아산, 내포신도시 등 혁신도시 및 산업단지 개발을 통해 인구 유입 효과가 일부 나타나고 있으나, 이 같은 개발은 도내 특정 지역에 인구가 집중되는 반면, 농산어촌 지역은 더욱 인구가 감소하는 양상을 초래하고 있음. 이로 인해 지역 간 인구 불균형 심화와 일부 지역의 과밀화 문제라는 또 다른 사회적 과제도 발생하고 있음(충청남도 시군별 인구현황 자료, 2024).
- 한편,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외국인 주민의 유입도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 내 노동력 확보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외국인 가구의 정주·적응·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통합과 정책 대응이 미흡한 상황임(통계청, 2023. 외국인 주민 현황 통계). 향후 충청남도의 다문화 인구 구성 비중이 증가할 가능성을 고려할 때, 포용적 인구정책 설계가 요구됨
- 이와 같은 문제의식 속에서 정부는 2000년대 중반부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저출산 대응을 국가 중점과제로 추진해왔음.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약 500조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나, 출산율은 여전히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정책 효과는 제한적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됨(국회예산정책처, 2023)

- 최근, 혼인 건수와 출생아 수가 소폭 반등하며 전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일부 제기되고 있지만, 이는 일시적 현상에 불과할 수 있으며, 출산·혼인 행태가 계층·성별에 따라 이질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앙정부의 일률적 접근만으로는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데 분명한 한계가 존재함. 따라서 충청남도는 인구정책 수립에 있어 지역 고유의 인구구조, 인식, 정책 수요, 그리고 사회경제적 격차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맞춤형 전략이 필요함

(2) 충청남도 인구구조의 위기와 청년 기반 약화

- 충청남도는 최근 지속적인 출생아 수 감소와 합계출산율 하락으로 인해 인구 재생산력이 심각하게 약화되고 있음. 통계청의 「인구동향조사(연간 출생통계)」에 따르면, 도내 연간 출생아 수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미래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직결됨. 이러한 흐름은 충청남도 지역 경제의 활력 저하와 지방소멸 위험 심화로 이어질 수 있음(통계청, 2024. 인구동향조사)
- 합계출산율 또한 전국 평균과 유사하거나 낮은 수준으로 하락하고 있음. 합계출산율은 한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자녀 수를 의미하는데, 충청남도의 수치는 2022년 기준 0.85명으로, 전국 평균(0.78명)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음(통계청, 2023. 인구동향조사). 이는 비혼·만혼·출산기피 현상의 확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지역 단위에서 그 원인을 심층 분석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충남은 전국 평균보다 빠른 고령화 속도를 보이고 있음. 2022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20.6%에 도달하였으며, 중위연령 또한 2013년 40.6세에서 2022년 46.2세로 5.6세 상승하였다(통계청, 2023. 장래인구추계). 특히 농어촌 지역의 고령화는 더욱 심화되어 노인 부양 부담 증가, 의료 및 복지 수요 확대, 사회복지 지출 급증 등 다양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음
-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및 「충청남도 생산가능인구 현황(2023)」을 보면, 도내 생산가능인구는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지역경제 기반 약화, 지방세수 축소, 공공서비스 유지의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음
- 충청남도는 현재 청년층(19~39세)의 인구 비중이 약 25%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나, 출산율 저하와 함께 청년층의 외부 유출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청년 인구 기반의 약화가 뚜렷함. 이와 함께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중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도내 인구 구조는 '유소년 인구 감소 → 생산가능인구 감소 → 고령인구 증가'의 구조로, 이른바 '역사다리형 인구구조'로 전환되고 있음

-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는 도내 9개 시군이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되는 현실과 맞물려, 저출산 및 인구정책이 단순한 출산 장려 수준을 넘어,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생존 전략으로서 접근되어야 함을 보여줌(충남고용정보원, 2023)

2)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충청남도의 저출산과 인구정책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자 함. 이를 토대로, 충청남도의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또한 도민 인식조사 결과는 향후 ‘충청남도 저출산 대책 5개년 계획(제7차)’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임

2.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 연구기간은 2025. 2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진행됨

[표 1-1] 연구범위

구분	내용
연구범위	시간적 범위: 2025년 2월~11월
	공간적 범위: 충청남도 전체

- 문헌연구 및 행정자료 분석
 - 충남도 저출산 및 인구현황
 - 국내외 저출산 정책
- 실태조사
 - 저출산 및 인구정책 관련 실태조사
 - 전문가 델파이 조사
 - 정책 제언

○ 전문가 자문회의 및 정책 간담회 운영

- 설문조사지 개발 및 정책발굴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운영
- 학계 및 실천현장 전문가, 연구자 등 연계하여 '충남도 저출산 인구정책' 간담회 운영

2) 연구방법

(1) 문헌 연구 및 행정자료 분석

○ 저출산 인구정책 관련 제도 검토

- 「제1차-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충청남도 인구정책 기본계획(2023-2027)」, 「충청남도 민선 8기 정책», 「이재명 정부의 저출산 정책」 등 검토
-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인구감소지역 특별법», 「충청남도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인구정책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조례», 「충청남도 지역 균형발전 지원 조례」

○ 선행연구 고찰

- 제1차-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통계청(2024) 인구현황 및 혼인·이혼 통계, 이태열 (2024), 함선유 등(2023), 김문길 등(2023), 박윤경 등(2022) 등 저출산 인구정책 관련 선행연구 검토

○ 국내 저출산 인구정책에 대한 사례조사

- 국내 타지역 저출산 인구정책에 대한 사례조사(각 지자체 홈페이지 등)

(2) 충청남도 저출산 인구정책에 대한 실태조사

○ 설문조사 조사

- 조사대상: 충청남도 15개 시군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49세 이하 도민 440명
- 조사방법: 설문지 개발 후 온·오프라인 병행 조사 방식 적용
- 주요 내용: 일반적 특성, 건강 및 생활만족도,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 저출산 정책에 대한 인식, 가족에 대한 가치관, 일-생활균형, 아동 돌봄-가족지원, 출산지원정책 등

[표 1-2] 1-2차 설문조사 시기 및 대상

조사영역	세부항목
일반적 특성	• 성별, 연령, 거주지, 혼인상태, 가구구성, 교육수준, 직업, 소득
주관적 건강상태 및 행복감	• 주관적 건강에 대한 인식 • 행복감 등
저출산 및 가족에 대한 전반적 인식	•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 • 자녀에 대한 가치관 • 재출산에 대한 인식 • 자녀 현황 및 계획 •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인식
인구현황 및 대응에 대한 인식	• 인구감소에 대한 인식 • 인구감소 해결을 위한 정책에 대한 인식
저출산 인구감소 극복을 위한 정책 요구도	• 교육 및 일자리 정책 • 보건의료정책 • 결혼과 출산에 대한 정책 • 공동체 관련 정책

○ 전문가 델파이 조사

- 조사대상: 사회복지학, 인구학, 가족학 학계전문가, 사회복지정책 수행 현장 전문가 30명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진행함
- 조사방법: 교육 및 취창업, 보건의료, 소득보장, 결혼·임신·출산, 주거, 돌봄, 문화 여가인프라 등 각 영역별 조사를 진행하였고, 각 영역별 사업에 대한 세부 의견을 받아 결과에 반영함

(3) 전문가 자문회의

- 충청남도 저출산 인구정책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지 개발 및 정책발굴을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를 진행함

[표 1-3] 전문가 자문회의 진행

내용	자문
충남도 저출산 인구정책 설문조사지 문항개발	• 학계, 현장 전문가 자문회의 • 저출산 및 인구정책 관련 연구자 자문회의 진행
타지역 저출산 정책의 충남도 적용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저출산 인구정책관련 심층면접지 개발	
충남도 저출산 및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정책 발굴	

(4) 정책간담회

- 충남도 지역소멸과 인구감소 문제 대응 및 정책발굴을 위한 간담회 추진
- 인구감소-지역소멸 위기와 대안의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추진함

[표 1-4] 정책간담회

내용	자문
사회보장 데이터 기반 자녀출산 현황과 실태	• 중앙연구기관-학회-충남도 연구기관과 연계하여 정책간담회 추진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과 정책 요구도	
인구감소에 따른 충남 농촌마을 무거주화 실태 및 시사점	

3) 연구과정

○ 연구 수행 절차는 아래 그림과 같음

단계	주요 내용	
연구계획 수립	연구 착수	• 문헌고찰 • 착수연구심의
↓		
연구 구체화	문헌연구 및 행정자료 분석	• 저출산 관련 법 및 제도 검토 • 국내외 저출산 정책 검토 • 충남도 인구현황 분석 • 전문가 자문회의
↓		
조사 및 중간심의	설문조사 및 전문가 자문회의	• 설문조사 문항개발 • 설문조사 진행 및 자료 코딩 • 설문조사 결과 분석 • 전문가 자문회의
	심층면접 및 중간심의	• 심층면접 구조화된 질문지 개발 • 심층면접 진행 및 코딩 • 기본과제 중간심의 • 심층면접 결과분석
↓		
최종보고 및 보고서 발간	정책도출 및 정책간담회	• 정책간담회 추진 • 충남도 저출산 인구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 발굴
	최종심의 및 보고서 발간	• 최종 연구심의 자료 제출 • 최종심의 결과 반영 보고서 수정·보완 • 보고서 발간

[그림 1-1] 연구수행과정

제2장

충청남도 저출산·인구현황

1. 저출산 인구변화 추세
2. 인구이동 실태
3. 시사점

제2장 충청남도 저출산·인구현황

1. 저출산 인구변화 추세

1) 인구규모

- 2025년 4월 기준 전체 혼인건수는 18,921명으로 전년대비 4.9% 증가한 반면, 이혼건수는 7,299건으로 전년대비 5.2% 감소하였음. 또한 출생아수는 20,717명으로 전년 대비 8.7% 증가추이를 보였고, 사망자 수는 28,785명으로 0.8% 증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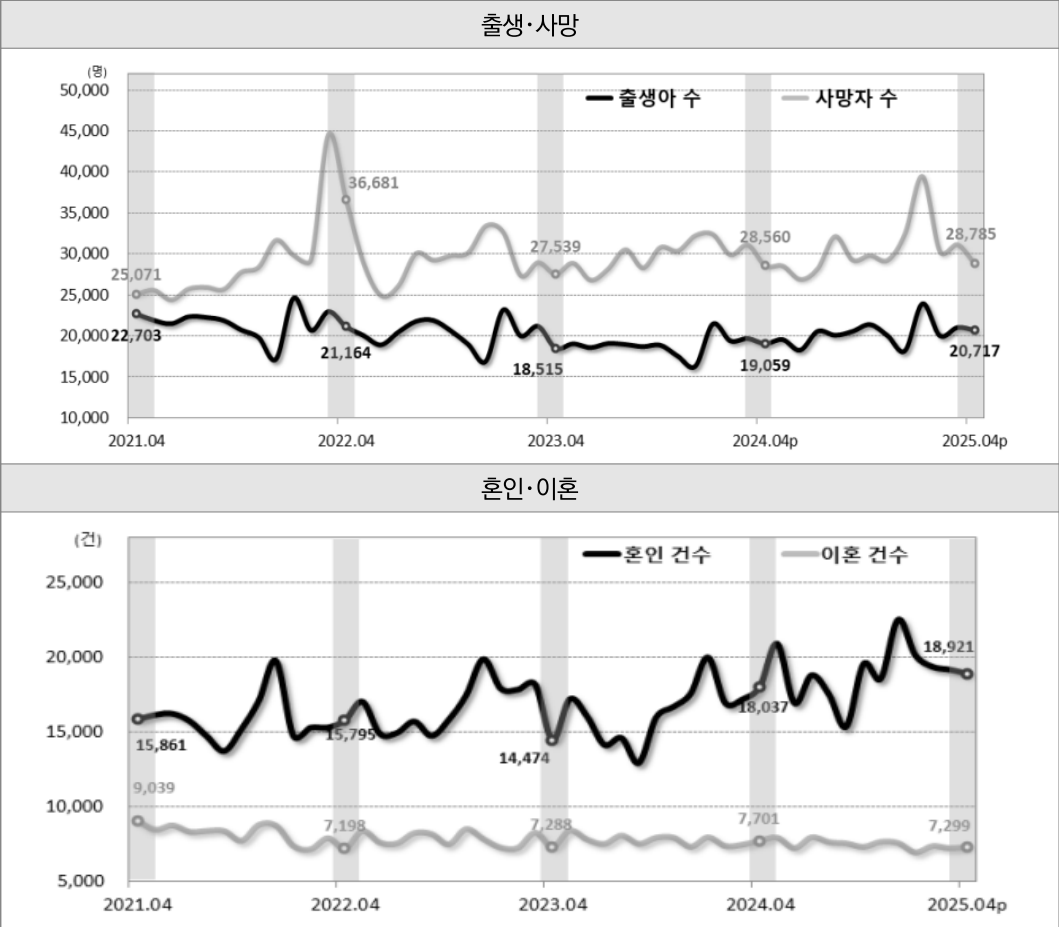
[표 2-1] 인구변화율

(단위: 명(건), 인구 1천 명당 명(건), %)

	출생아 수		사망자 수		자연증가		혼인 건수		이혼 건수	
		조출생률		조사망률		자연증가율		조혼인율		조이혼율
2024.4p	19,059	4.6	28,560	6.8	-9,501	-2.3	18,037	4.3	7,701	1.8
2025.4p	20,717	4.9	28,785	6.9	-8,068	-1.9	18,921	4.5	7,299	1.7
증감	1,658	0.4	225	0.0	1,434	0.3	884	0.2	-402	-0.1
증감률	8.7	-	0.8	-	-	-	4.9	-	-5.2	-

자료: 통계청(2025.4.기준). 2025년 4월 인구동향 재인용

- 2021년부터 2025년 4월까지의 출생아 수 추이를 살펴보면, 2021년 약 22,703명에서 2023년 18,515명으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다가, 2025년 4월에는 20,717명으로 소폭 반등하는 회복 조짐이 관찰됨
- 반면, 사망자 수는 전 기간 동안 출생아 수를 상회하며 인구 자연감소가 지속되고 있음. 2021년 25,071명 수준이던 사망자 수는, 2022년 코로나19 유행기에 36,681명으로 급증한 뒤, 2024년 4월에는 28,785명으로 다소 감소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자 수는 여전히 출생아 수를 크게 웃돌고 있어, 우리 사회가 구조적인 인구 자연감소 국면에 진입했음을 보여줌



자료: 통계청(2025.4.) 2025년 4월 인구동향 재인용

[그림 2-1] 인구동태 건수 추이

2)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1) 전국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 2023년 전국 출생아 수는 총 230,028명이었으며, 2024년에는 238,343명으로 다소 증가 하였음. 특히 2025년 4월 기준 월별 출생아 수는 20,717명으로 전년 동월(19,059명) 대비 1,658명 증가, 출생률도 4.6%에서 4.9%로 상승하여, 전국적으로 출생아 수 반등 조짐이 관찰되고 있음
- 2025년 1~4월 누계 출생아 수는 85,739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7.7% 증가한 수치로, 충청남도의 경우, 2024년 4월 출생아 수는 890명, 출생률은 4.4%였으며, 2025년 4월에는

950명, 출생률은 4.7%로 소폭 상승하였음. 2025년 1~4월 충남의 출생아 수는 3,474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6.8% 증가하여 전국 평균과 유사한 수준의 반등세를 보였음

- 이는 충남의 저출산 국면이 다소 완화될 가능성을 시사하지만, 여전히 출산을 자체는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정책적 대응의 지속과 보완이 요구되는 상황임
- 지역별로 살펴보면, 2025년 1~4월 출생아 수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13.3%)이며, 전북(10.5%), 대구(9.2%), 광주(9.2%), 경기(9.1%)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며, 일부 비수도권 광역시에서도 출산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줌
- 반면, 부산(4.0%)과 대전(4.3%), 전북(4.3%), 그리고 전남(4.3%) 등의 출생률은 상대적으로 낮았음. 결과적으로, 충청남도의 출생률은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하였으나, 출산을 자체는 지속적으로 낮은 상태에 머물러 있어 이러한 반등을 그간의 성과로 평가하는 것은 지양해야함

[표 2-2] 시도별 출생아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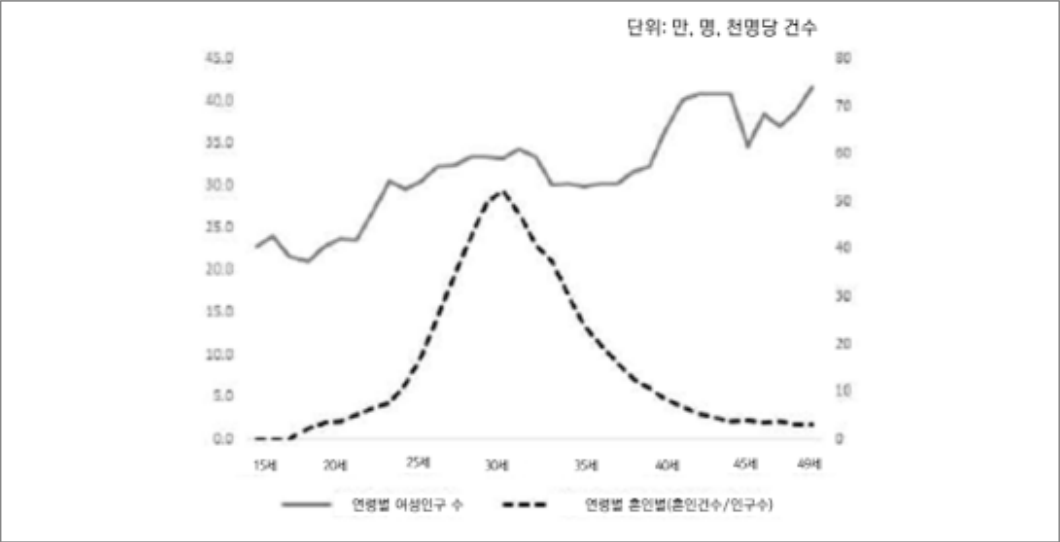
(단위: 명, 인구 1천 명당 명, %)

	2024년p	2024년p			2025년p			
		4월	조출생률	1~4월	4월	조출생률	1~4월	
							누계	전년 누계비
전 국	238,343	19,059	4.6	79,627	20,717	4.9	85,739	7.7
서 울	41,553	3,378	4.4	13,964	3,819	5.0	15,437	10.5
부 산	13,063	1,071	4.0	4,343	1,123	4.2	4,681	7.8
대 구	10,112	804	4.2	3,355	889	4.6	3,734	11.3
인 천	15,242	1,169	4.8	4,856	1,374	5.5	5,590	15.1
광 주	6,043	462	4.0	2,061	508	4.4	2,166	5.1
대 전	7,257	578	4.9	2,444	619	5.3	2,554	4.5
울 산	5,287	422	4.7	1,771	433	4.8	1,855	4.7
세 종	2,900	211	6.6	978	238	7.4	1,023	4.6
경 기	71,300	5,754	5.2	23,667	6,103	5.4	25,587	8.1
강 원	6,597	527	4.2	2,322	541	4.4	2,259	-2.7
충 북	7,541	586	4.5	2,503	669	5.1	2,763	10.4

	2024년p	2024년p			2025년p			
		4월	조출생률	1~4월	4월	조출생률	1~4월	
							누계	전년 누계비
총 남	9,861	792	4.5	3,274	815	4.7	3,480	6.3
전 북	6,784	506	3.5	2,259	536	3.8	2,337	3.5
전 남	8,226	653	4.4	2,748	721	4.9	2,952	7.4
경 북	10,341	840	4.0	3,518	871	4.2	3,531	0.4
경 남	13,076	1,036	3.9	4,476	1,195	4.5	4,670	4.3
제 주	3,162	268	4.9	1,088	263	4.8	1,120	3.0

자료: 통계청(2025.4.) 2025년 4월 인구동향 재인용

- 최근, 혼인건수와 출생아 수가 증가추이를 보이면서 저출산 국면의 전환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음. 혼인의 경우 인구가 증가한 90년대생이 30세 전후의 연령대에 진입하고 혼인율 자체도 개선되면서 최근의 상승세가 나타난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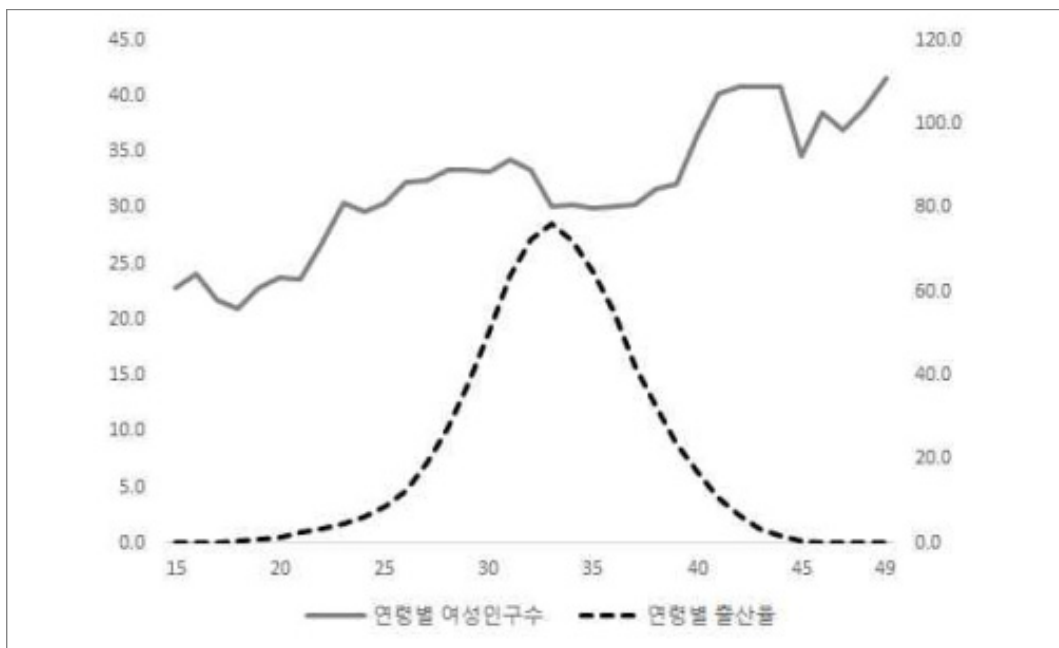
자료: 이태열(2024). 최근 혼인 및 출생아 수 증가 특징. KIRI 리포트 재인용

[그림 2-2] 연령별 여성인구 및 혼인율(2023년)

- 출산율은 현재 30대 초중반(30~34세)에 집중되고 있음. 연령별 출산율(점선)은 20대 후반

부터 급격히 상승하여 30~34세 구간에서 최고치를 기록한 후, 이후 연령대에서는 급격히 하락하는 양상을 보임. 이는 오늘날 출산이 특정 연령대에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주며, 출산의 연령 편중 현상을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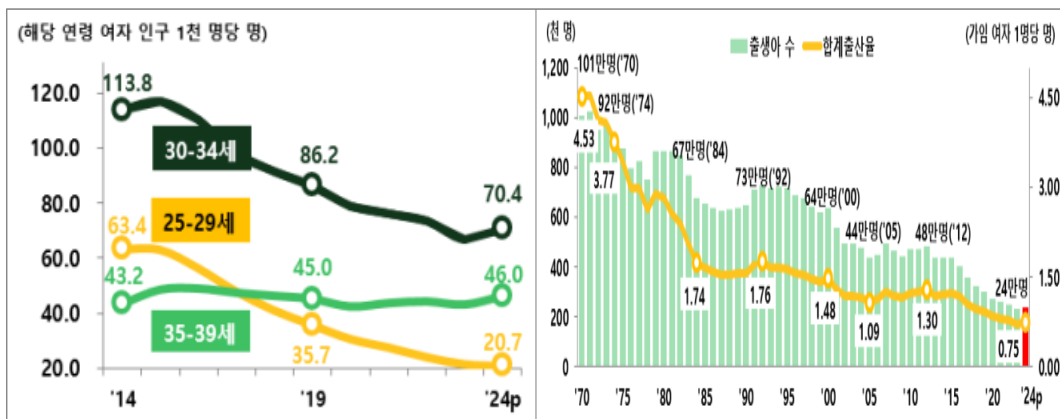
- 반면, 20대 초반이나 40대 이상에서는 출산율이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출산 가능성이 제한적이다. 주목할 점은, 여성 인구 분포(실선)는 20대부터 40대까지 상대적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고, 특히 30대 후반~40대 후반까지 여성 인구가 유지되거나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임. 하지만 이 연령대는 출산율이 현저히 낮은 구간으로, 실제 출산 기여도는 제한적임
- 이처럼 출산율이 높은 연령대와 여성 인구가 많은 연령대 간의 비대칭 구조는 중요한 함의를 지님. 출산율이 가장 높은 30~34세 연령대는 여성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 35세 이후 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급감함. 이로 인해 출산 가능성과 인구 구조 간의 미스매치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곧 전체 출산력의 구조적 약화로 이어질 수 있음
- 따라서 현재 출산이 집중된 연령대(30~34세)의 여성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면, 출산율 반등은 단기적으로도 구조적으로도 제한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시급함



자료: 이태열(2024). 최근 혼인 및 출생아 수 증가 특징. KIRI 리포트 재인용

[그림 2-3] 연령별 여성인구 및 출산율(2023년)

- 2024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전년(0.72명) 대비 소폭(0.03명)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역대 최저 수준에 근접한 매우 낮은 수치로 평가됨. 출생아 수 역시 24만 명으로, 역대 최저였던 2023년(23만 명)에 비해 다소 회복되었으나, 장기적인 감소세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 조출생률(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은 2024년 기준 4.7명으로 전년 대비 0.2명 증가하였으나, 이 역시 전체적으로 극단적인 저출산 국면이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함
- 출산 연령별 추이를 보면, 30~34세 여성의 출산율은 2014년 113.8명에서 2024년 70.4명으로 감소하였으나, 2024년에는 소폭 반등하였음
- 반면, 25~29세 여성의 출산율은 2014년 63.4명에서 2024년 20.7명으로 하락하여, 청년층의 출산 기피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음. 여기서 주목할 점은, 35~39세 여성의 출산율이 2014년 43.2명에서 2024년 46.0명으로 소폭 증가한 점인데, 이는 30대 후반 여성의 출산 비중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줌
- 이러한 변화는 출산 연령 고령화, 청년층의 혼인·출산 지연, 전반적인 출산 건수의 지속적 감소라는 세 가지 축에서 저출산 문제의 복합성을 설명함. 따라서 출산 장려 정책은 단일한 접근이 아닌, 연령대별로 차별화된 전략이 요구됨
- 20~30대 초반 청년층의 결혼·출산 유인 강화와 함께, 30대 후반 이상 고령 임신부에 대한 의료·양육 지원 확대가 병행되어야 하며, 이러한 정책은 단기 성과보다는 구조적 인구 위기 대응의 관점에서 설계되어야 함



자료: 통계청(2025). 2024년 출생, 사망통계 보도자료

[그림 2-4] 합계출산율(2024)

- 2023년 기준, 출산연령을 보면, 30~34세에 집중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출산 연령의 고령화 현상이 점차 심화되고 있음. 그러나 지역별로 출산 집중 연령대에 차이가 존재하고, 이는 지역사회 환경과 문화, 정주 여건의 차이를 반영함
- 가장 대표적으로 출산 연령이 낮은 지역은 경상북도로 확인됨. 경상북도는 25~29세 연령대의 출산 비중이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는 지역으로, 출산이 비교적 젊은 연령층에 집중되고 있음. 이는 조기 결혼과 출산 문화가 일정 부분 유지되고 있으며, 전통적 가족 형태와 농어촌 중심의 정주문화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일부 농촌 지역에서는 20대 후반의 출산 비율이 30~34세를 상회하거나 유사한 수준을 보이기도 함
- 반면, 출산 연령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특별시로, 서울은 출산 집중 연령이 35~39세까지 상승한 대표적 고령출산 지역으로, 30~34세가 여전히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20대 출산 비율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 충청남도는 전국 평균 대비 소폭 고령화된 양상을 보이고 있음. 전국적으로 출산이 30~34세에 집중되는 가운데, 충청남도 역시 30대 초중반 여성의 출산 비중이 가장 높고, 35~39세 비중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양상을 보임. 특히 충남의 경우 수도권과 대도시보다는 상대적으로 25~29세 출산 비율이 높게 나타나지만, 동시에 35세 이상 고령 출산 비중도 전국 평균 수준 또는 그 이상을 기록하는 이중적 출산 연령 구조를 보임
- 충청남도는 출산 연령이 낮은 경북·전남 등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출산 연령이 높은 지역에 해당함. 충청남도는 보육 및 양육 인프라의 확충과 함께, 고령 임신부를 위한 의료 지원 체계 강화가 동시에 요구되며, 도시-농촌 간 출산 연령 구조의 차이를 반영한 맞춤형 인구정책 설계가 필요함

[표 2-3] 시도 모의 연령별 합계출산율

구분	합계 출산율	모의 연령별 출산율 (15-19세)	출산연령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전국	0.721	0.3	3.8	21.4	66.7	43.0	7.9	0.2
서울특별시	0.552	0.2	1.3	8.5	47.3	43.1	8.7	0.2
부산광역시	0.664	0.4	2.9	17.4	62.3	41.2	7.5	0.2
대구광역시	0.702	0.3	3.2	20.5	66.6	41.3	6.9	0.2
인천광역시	0.694	0.4	4.1	22.2	62.2	41.4	7.8	0.1

구분	합계 출산율	모의 연령별 출산율 (15-19세)	출산연령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광주광역시	0.706	0.2	4.1	23.5	66.1	39.0	6.5	0.1
대전광역시	0.787	0.6	3.9	24.6	74.8	44.4	7.7	0.2
울산광역시	0.814	0.4	4.4	31.0	82.7	37.8	5.9	0.1
세종특별자치시	0.971	0.3	3.2	36.3	98.3	49.9	7.2	0.1
경기도	0.766	0.3	3.8	22.6	71.9	45.4	8.3	0.2
강원특별자치도	0.893	0.8	6.3	37.0	80.5	44.6	8.4	0.2
충청북도	0.886	0.7	6.5	36.3	81.7	43.6	7.6	0.1
충청남도	0.842	0.4	7.2	36.2	77.4	39.4	7.1	0.3
전라북도	0.780	0.6	5.2	29.0	72.6	39.6	7.2	0.2
전라남도	0.972	0.7	8.4	37.6	91.0	46.5	8.3	0.2
경상북도	0.860	0.5	5.7	33.4	80.5	43.2	7.7	0.1
경상남도	0.799	0.2	5.1	30.5	77.2	38.9	6.8	0.1
제주특별자치도	0.827	0.5	5.8	32.0	72.7	43.4	10.0	0.3

자료: 통계청(2025. 7.인출). 2023년 시도 합계출산율(모의 연령별 출산율)

(2) 충청남도 시군별 출산율

- 충청남도의 전체 출생아 수는 2019년 13,228명에서 2023년 9,436명으로, 5년간 약 28.7% 감소하였음. 이는 충남 지역의 저출산 현상이 빠르게 심화되고 있으며, 전반적인 인구 재생산 기반이 약화되고 있음을 의미함

가. 도시지역: 출생아 수는 많지만 감소 추세 지속

- 천안시는 충남 내 출생아 수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2019년 4,834명에서 2023년 3,485명으로 감소하였음. 젊은 인구 비중이 높고 인구 자체가 크다는 이점에도 불구하고, 출산 감소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은 저출산 문제가 구조적임을 시사함
- 아산시는 2019년 2,362명에서 2023년 1,930명으로 감소했으며, 2022년 일시적 반등(1,851명) 이후 소폭 증가했다가 다시 감소추이를 보임. 산업단지와 신도시 개발에 따른 젊은층 유입 효과가 감소폭을 일정 부분 완화했을 가능성이 있음

- 당진시(1,247명 → 817명)와 서산시(1,193명 → 858명) 역시 산업 기반이 강한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출생아 수는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임

나. 내포신도시권: 효과 지연 또는 지역별 격차 존재

- 홍성군(574명 → 388명)은 내포신도시 유입 효과에도 불구하고 출생아 수가 지속 감소 중이며, 예산군(296명 → 280명)**은 2022년 212명에서 2023년 280명으로 상대적으로 큰 반등을 보였음. 그러나 이러한 반등이 일시적 현상인지, 신도시 정주 효과에 따른 구조적 변화인지는 아직 판단이 어려움. 두 지역은 젊은 인구 유입에 따른 기대효과가 당장의 출생 증가로 이어지지 않음을 시사함

다. 중소도시: 지속적인 감소, 고령화 영향 뚜렷

- 공주시(548명 → 327명), 보령시(461명 → 290명), 논산시(607명 → 382명), 계룡시(223명 → 184명)는 모두 출생아 수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인구 고령화가 진행 중인 지역일수록 감소폭이 큼. 계룡시는 군사 도시라는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예외는 아니었음

라. 군 단위 농촌지역: 심각한 감소, 인구 소멸 위기 가속화

- 금산군(207명 → 104명), 부여군(186명 → 94명), 서천군(169명 → 99명), 청양군(104명 → 64명), 태안군(217명 → 134명) 등은 출생아 수가 100명 이하로 진입하거나 진입이 임박한 상태임. 이들 지역은 젊은층의 지속적 유출, 높은 고령화율, 출산 기반 미약 등으로 인해 인구 재생산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에 근접해 있으며, 지방 소멸 위험이 실질적으로 도래하고 있음을 보여줌

[표 2-4] 충청남도 시군별 출산율 변화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충청남도	13228	11950	10984	10221	9436
천안시	4834	4646	4409	3899	3485
공주시	548	454	373	343	327
보령시	461	407	368	359	290
아산시	2362	1969	1810	1851	1930
서산시	1193	1106	1031	1036	858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논산시	607	488	454	402	382
계룡시	223	183	169	181	184
당진시	1247	1058	953	888	817
금산군	207	185	149	132	104
부여군	186	167	129	133	94
서천군	169	170	160	133	99
청양군	104	92	90	76	64
홍성군	574	560	508	407	388
예산군	296	247	206	212	280
태안군	217	218	175	169	134

자료: 통계청(2023 기준), 인구동향조사. 2025.6. 저자 작성

3) 지역별 인구격차

(1) 전국 인구현황

- 2025년 6월 기준 주민등록인구 현황에 따르면, 지역 간 인구 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특히, 수도권에 인구가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현상이 두드러짐. 즉, 국민 절반 이상이 수도권이라는 좁은 지역에 몰려 살고 있음
 - 경기도는 1,371만 명 이상의 인구를 보유한 단일 광역자치단체로, 전국 인구의 약 26.8%를 차지하며 수도권 집중 현상의 핵심 지역으로 자리함
 - 여기에 서울특별시(932만 명)와 인천광역시(303만 명)를 더한 수도권 전체 인구는 약 2,607만 명으로, 이는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약 51%에 해당함
- 이러한 수도권 집중 현상은 지방의 인구 유출과 활력 저하, 수도권의 과밀화 문제 심화: 주거난, 교통 혼잡, 환경 악화 등 국가적 차원의 지역 불균형 고착화하는 문제를 갖고 있음. 결과적으로, 인구 구조의 공간적 불균형은 지역 간 격차 확대는 물론, 국가 전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중대한 구조적 문제로 작용됨
- 충청남도는 약 213만 명의 인구를 보유하며, 지방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중상위권에 해당함. 그러나 경기도(1,300만 명 이상), 서울특별시(900만 명 이상)와 비교하면 상당한 인구 격차가 존재함

- 이러한 격차는 충청남도를 포함한 대부분의 지방이 수도권의 강력한 인구 흡인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구조적 현실을 반영하는 것임. 따라서 앞으로는 단순한 인구 증가를 목표로 하기보다는, 인구 감소 속도 완화, 젊은 세대의 유입과 정착 지원, 지역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인구 전략 수립에 중점을 두는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임
- 또한 호남권과 일부 영남권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 현상이 특히 뚜렷하게 나타나는 지역임. 이로 인해 다음과 같은 구조적 악순환에 직면하고 있음. 즉, 생산가능인구 감소 → 세수 기반 약화 → 사회서비스 유지의 어려움 → 지역 자생력 저하로 연결되는데, 이러한 흐름은 해당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인구 구조 문제로 작용됨

[표 2-5] 주민등록 인구현황(25.6.기준)

행정구역별	계 (명)	남 (명)	여 (명)
전국	51,164,582	25,467,115	25,697,467
서울특별시	9,325,616	4,497,354	4,828,262
부산광역시	3,252,830	1,582,043	1,670,787
대구광역시	2,357,052	1,155,353	1,201,699
인천광역시	3,039,450	1,518,758	1,520,692
광주광역시	1,399,082	690,429	708,653
대전광역시	1,439,764	717,456	722,308
울산광역시	1,093,665	563,241	530,424
세종특별자치시	392,223	195,248	196,975
경기도	13,711,404	6,888,166	6,823,238
강원특별자치도	1,510,615	759,478	751,137
충청북도	1,591,045	810,526	780,519
충청남도	2,135,890	1,096,214	1,039,676
전북특별자치도	1,730,258	862,137	868,121
전라남도	1,783,484	900,655	882,829
경상북도	2,519,474	1,275,311	1,244,163
경상남도	3,216,105	1,621,572	1,594,533
제주특별자치도	666,625	333,174	333,451

자료: 통계청(2025), 주민등록 인구(시도). 2025.6.기준. 2025. 7. 14. 저자 직접인출 및 작성

(2) 충청남도 인구현황

- 도내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은 천안시(661,967명)로, 충남 전체 인구의 약 31%를 차지하며 압도적인 규모를 보임. 그 다음은 아산시(357,122명)로, 두 도시가 충청남도 인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함
- 인구가 가장 적은 지역은 청양군(29,332명)이며, 계룡시(46,093명)도 상대적으로 인구 규모가 작은 편에 속함. 대부분의 시군에서 남성 인구가 여성 인구보다 많거나 비슷한 수준을 보이지만, 예외적으로 공주시는 여성(50,505명)이 남성(50,209명)보다 소폭 더 많으나, 격차는 크지 않음. 부여군은 남성(29,360명)과 여성(29,514명) 인구가 거의 동일해 성비가 매우 균형적인 편임
- 충남 인구는 천안시와 아산시에 집중되어 있으며, 지역 간 인구 편차가 크다는 점이 뚜렷하게 나타남. 성별로는 남초 경향이 우세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성비 균형 또는 여초 현상도 확인됨. 이러한 분포는 지역별 인구 구조 분석 및 정책 설계 시 중요한 참고 지표로 활용될 수 있음

[표 2-6] 충청남도 시군별 인구현황(25.6.기준)

행정구역별	계 (명)	남 (명)	여 (명)
충청남도	2,135,890	1,096,214	1,039,676
천안시	661,967	339,539	322,428
공주시	100,714	50,209	50,505
보령시	92,746	46,946	45,800
아산시	357,122	186,232	170,890
서산시	173,253	90,837	82,416
논산시	107,525	53,918	53,607
계룡시	46,093	22,977	23,116
당진시	172,524	92,571	79,953
금산군	49,340	25,054	24,286
부여군	58,874	29,360	29,514
서천군	47,705	23,673	24,032
청양군	29,332	15,013	14,319
홍성군	100,164	50,084	50,080
예산군	78,761	39,553	39,208
태안군	59,770	30,248	29,522

자료: 통계청(2025), 주민등록 인구(시도). 2025.6.기준. 2025. 7. 14. 저자 직접인출 및 작성

(3) 등록외국인 현황

가. 전국 등록외국인 현황

- 2023년 기준, 등록 외국인 인구는 총 1,348,626명이며, 이 중 상당수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음. 외국인 인구 분포는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지역 간 불균형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산업 구조, 일자리 기회, 생활 인프라 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됨
- 경기도는 425,629명(전국 대비 31.5%)으로 전국에서 외국인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임. 이는 산업단지 밀집, 풍부한 일자리, 우수한 생활 인프라 등이 주요 유입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됨. 서울특별시 252,765명(18.7%)으로 두 번째로 많으며, 경기도와 서울을 합치면 전국 외국인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셈임
- 인천광역시(81,056명), 충청남도(85,215명), 경상남도(69,025명), 라남도(49,610명), 부산광역시(49,900명), 전경상북도(48,211명), 대구광역시(30,356명) 등 주요 광역시들도 외국인 인구 비율이 낮지 않으나, 이는 경기도의 20% 수준에 불과하며, 수도권과는 절대적인 격차를 보임. 즉, 수도권(경기·서울·인천)은 외국인 인구가 집중된 대표적 지역이며, 외국인 등록에서도 수도권 편중 현상이 매우 뚜렷하게 나타남
- 연도별로는 2019~2021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외국인 등록 인구가 감소하였지만, 2022~2023년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와 입국 제한 해제 등의 영향으로 외국인 인구가 다시 증가세로 전환되었음

[표 2-7] 등록 외국인 현황(25.6.기준)

행정구역별(1)	2019	2020	2021	2022	2023
전국	1,271,807	1,145,540	1,093,891	1,189,585	1,348,626
서울특별시	281,876	242,623	226,569	239,297	252,765
부산광역시	45,999	40,366	39,420	42,863	49,090
대구광역시	30,191	27,798	27,230	29,568	33,305
인천광역시	72,259	67,648	66,364	71,849	81,016
광주광역시	23,825	21,323	20,934	22,967	25,348
대전광역시	19,109	16,895	17,292	20,594	23,384
울산광역시	20,450	17,884	16,827	18,379	23,620
세종특별자치시	5,700	5,076	4,884	5,336	5,786

행정구역별(1)	2019	2020	2021	2022	2023
경기도	414,318	380,144	360,412	382,865	425,629
강원특별자치도	19,069	17,332	17,384	20,472	23,484
충청북도	40,714	37,060	36,045	41,270	48,866
충청남도	70,675	64,546	62,578	71,159	85,215
전북특별자치도	33,074	31,288	30,331	34,941	40,215
전라남도	34,638	32,906	32,656	38,988	49,110
경상북도	58,119	52,469	51,100	57,055	67,025
경상남도	76,123	67,239	63,148	70,390	89,312
제주특별자치도	25,668	22,943	20,717	21,592	25,456

자료: 통계청(2025), 주민등록 인구(시도). 2025.6.기준. 2025. 7. 14. 저자 직접인출 및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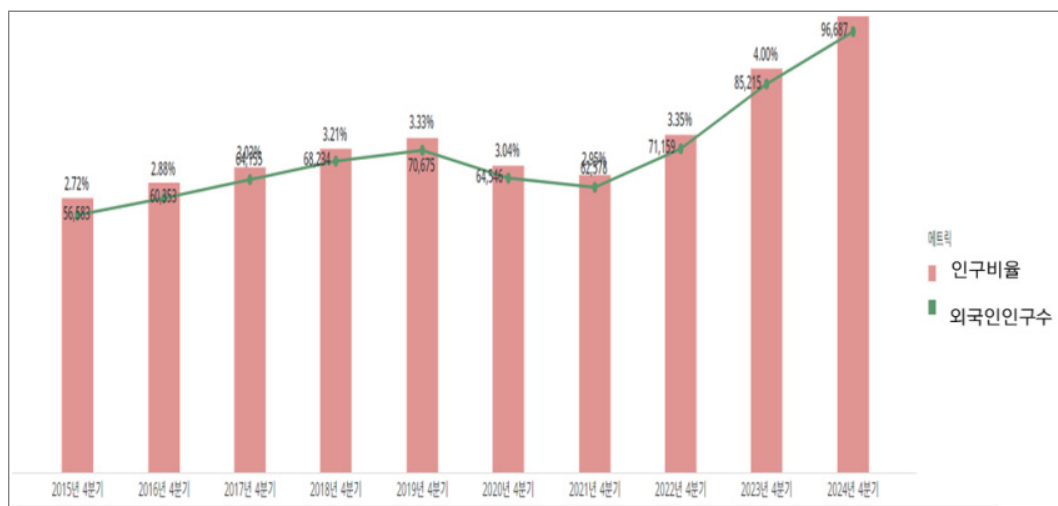
나. 충청남도 시군 등록외국인 현황

- 충청남도 내 외국인 인구는 최근 10년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며, 지역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 또한 점차 확대되고 있음. 2015년 4분기 56,583명에서 시작하여 2024년 4분기에는 96,987명으로 크게 증가하였음. 특히 2021년 4분기에 일시적인 감소(62,653명)를 보였지만, 2022년 4분기(71,159명)부터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 인구 대비 외국인 비율의 변동을 보면, 외국인 인구 증가와 함께 인구 대비 비율도 전반적으로 상승했음. 2015년 4분기 2.72%에서 시작하여 2019년 4분기에는 3.33%로 최고점을 기록했음. 2020년 4분기(3.04%)와 2021년 4분기(2.95%)에는 일시적으로 비율이 감소했으나, 이는 외국인 인구의 감소 추이와 일치함
- 이후 2022년 4분기 3.35%, 2023년 4분기 4.00%로 다시 상승했으며, 2024년 4분기에는 4.50%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외국인 인구 증가 속도가 전체 인구 증가 속도보다 빠르거나, 또는 전체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와 맞물려 외국인 인구 비중이 더욱 커지고 있음을 시사함

[표 2-8] 충청남도 연도별 등록외국인 현황

연분기	인구대비비율	외국인인구수
2015년 4분기	2.72%	56583
2016년 4분기	2.88%	60353
2017년 4분기	3.03%	64155
2018년 4분기	3.21%	68234
2019년 4분기	3.33%	70675
2020년 4분기	3.04%	64546
2021년 4분기	2.95%	62578
2022년 4분기	3.35%	71159
2023년 4분기	4.00%	85215
2024년 4분기	4.53%	96987

자료: 충청남도(2025) 데이터 올담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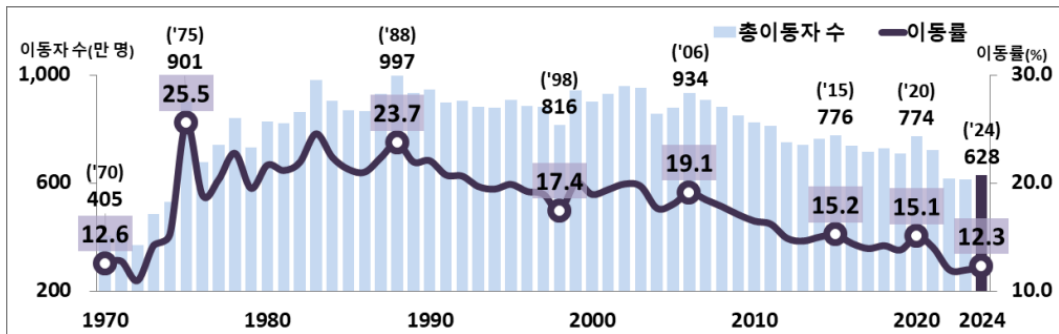
자료: 충청남도(2025) 데이터 올담 재인용

[그림 2-5] 충청남도 연도별 등록외국인 현황

2. 인구이동 실태

1) 전국 인구이동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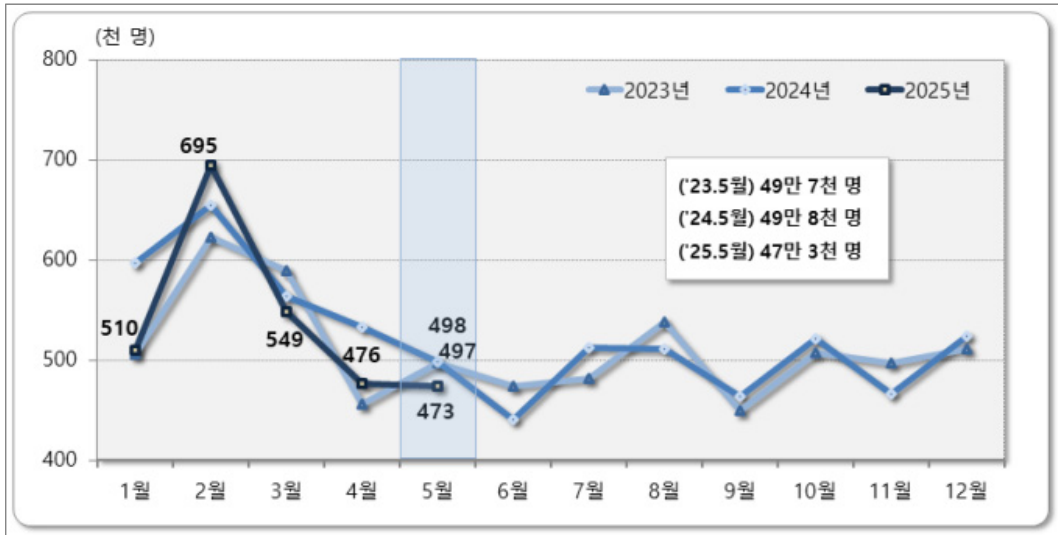
- 충남 사회의 인구 이동은 시대적 변화를 따라 다른 양상을 보임. 1970~1980년대 산업화 및 도시화 시기에는 일자리를 찾아 대도시로 향하는 대규모 인구 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이에 따라 총 이동자 수와 인구이동률이 매우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음
-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사회가 안정화되면서 인구 이동의 필요성이 점차 감소하기 시작했고, 2000년대 후반부터는 인구 이동성이 급격히 하락하는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났음. 특히 2024년에는 역대 최저 수준의 인구이동률이 기록되었으며, 2023년 기준 인구이동률은 12.3%로 전년 대비 0.3%포인트 증가한 수준임
- 이 중 시도 내 이동률은 8.1%, 시도 간 이동률은 4.3%로 각각 0.3%포인트, 0.1%포인트 상승하였으나, 장기적으로는 전반적인 이동성 감소 추세에 있음. 이러한 현상은 고령화, 주거비 상승, 지역 간 격차 축소 정체, 직업 안정성 변화, 가족 해체 및 1인가구 증가 등 복합적인 사회 구조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됨



자료: 통계청(2025). 2024년 인구이동 통계 보도자료

[그림 2-6] 전국 인구이동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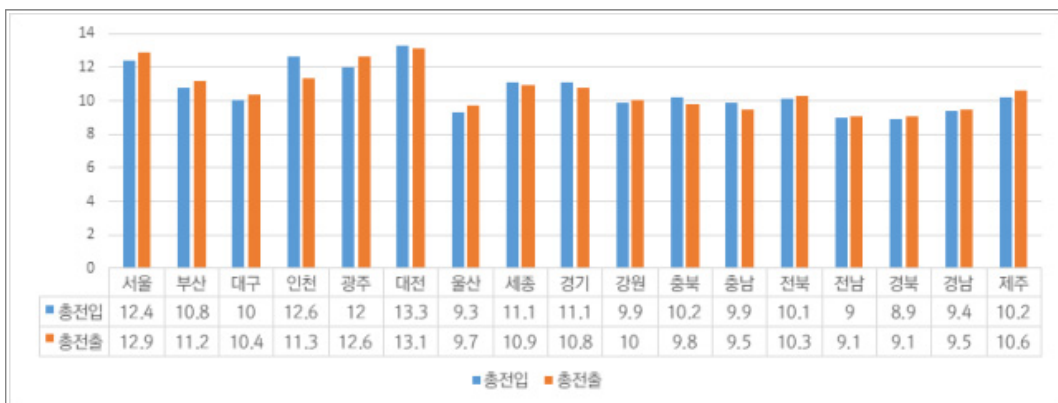
-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전체적인 출생아 수는 연간으로 볼 때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2025년의 데이터가 2023년, 2024년 데이터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경향이 뚜렷함



자료: 통계청(2025). 2025년 5월 국내인구가동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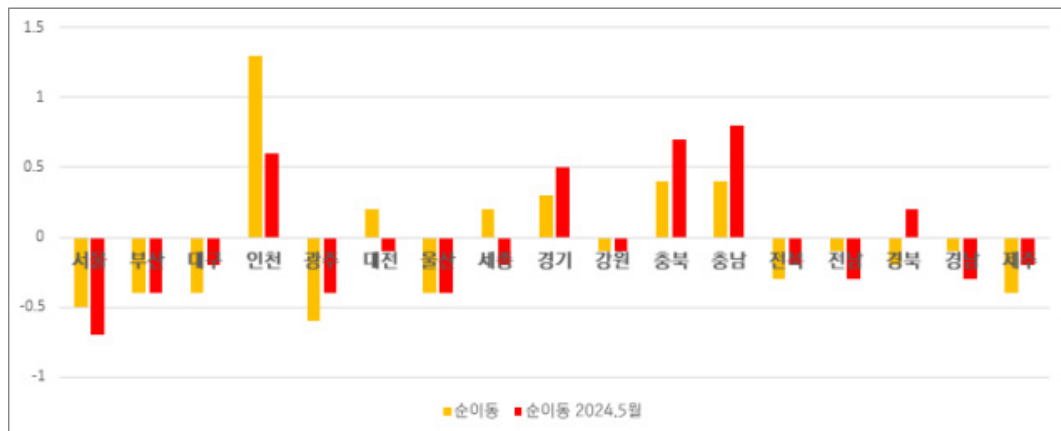
[그림 2-7] 2023-2025년 전국 인구가동 현황

- 충남, 충북, 경남, 전북, 강원, 제주는 모두 전입률과 전출률이 비슷한 ‘균형형 지역’으로 나타남. 이들 지역은 인구가동이 활발하지 않고, “정착은 안정적이지만, 성장·유입이 제한된 구조”로 보여짐
- 반면, 세종과 경기 등은 유입이 많아 순증형, 서울·부산은 유출형으로 보임. 따라서 충남의 인구정책 방향은 ‘순유입 확대보다는 정착 유지율 향상’으로 설계하는 것이 타당함을 시사함



자료: 통계청(2025). 2025년 5월 국내인구가동통계

[그림 2-8] 2023-2025년 전국 인구가동 현황 저자 재구성



자료: 통계청(2025). 2025년 5월 국내인구이동통계

[그림 2-9] 시군구별 순이동률

2) 충청남도 시군 인구이동 현황

- 충청남도의 인구 이동 현황을 살펴보면, 총전입자 수가 17,907명, 총전출자 수가 17,220명으로, 총 687명의 순이동 증가를 보이며 전체적으로 인구가 유입되고 있음. 충청남도 내에서의 인구 이동도 상당하여, 동일 시군구 내 이동이 6,927명에 달합니다. 또한, 충청남도 내 시군구 간 전입과 전출은 각각 2,818명으로 나타났음
- 타 시도와의 인구 이동을 보면, 시도 간 전입은 8,162명, 전출은 7,475명으로, 타 시도에서의 인구 유입이 유출보다 많아 충청남도 전체 인구 증가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음
- 시군구별 순이동 현황에서는 차이가 나타남. 인구 순유입 지역으로는 천안시(472명)가 압도적으로 가장 많은 순유입을 기록했음. 이는 천안시의 시도 간 전입(2,768명)과 충청남도 내 시군구 간 전입(808명)이 활발하여 외부로부터의 인구 유입이 매우 활발하기 때문으로 해석됨
- 그 외에도 아산시(54명), 당진시(96명), 홍성군(166명), 예산군(23명), 금산군(22명), 태안군(40명), 계룡시(2명) 등이 순유입 지역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홍성군의 순유입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음. 반면, 인구 순유출 지역 중에서는 논산시(-74명)의 순유출이 가장 높았으며, 부여군(-50명), 서산시(-41명), 보령시(-42명) 등에서도 높은 순유출이 나타났다.
- 세부 이동 유형을 보면, 동일 시군구 내 이동은 천안시(3,226명)와 아산시(971명)에서 특히 활발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해당 지역의 내부 개발 및 주거지 변동 등이 반영된 것임

로 보임. 시도 간 이동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데, 인구 순유입 지역인 천안시가 타 시도 인구 유입으로 전체 인구 증가에 크게 기여하는 반면, 인구 순유출 지역들은 대체로 시도 간 전출이 전입보다 많은 경향을 보였음

[표 2-9] 충청남도 시군구별 인구이동 현황

행정구역 (시군구)별	총전입 (명)	총전출 (명)	순이동 (명)	시도내 이동- 시군구내 (명)	시도내 이동- 시군구간 전입(명)	시도내 이동- 시군구간 전출(명)	시도간 전입(명)	시도간 전출(명)
충청남도	266,831	252,167	14,664	102,832	45,714	45,714	118,285	103,621
천안시	95,435	91,657	3,778	45,452	11,669	13,810	38,314	32,395
공주시	11,337	11,158	179	3,851	1,454	1,519	6,032	5,788
보령시	8,599	9,712	-1,113	4,017	1,067	1,813	3,515	3,882
아산시	51,343	42,458	8,885	16,697	13,415	9,687	21,231	16,074
서산시	19,719	20,822	-1,103	8,948	2,460	3,894	8,311	7,980
논산시	10,028	10,894	-866	3,161	1,294	1,522	5,573	6,211
계룡시	7,207	7,347	-140	1,235	729	640	5,243	5,472
당진시	23,546	21,324	2,222	10,735	3,188	2,744	9,623	7,845
금산군	3,966	3,816	150	685	271	282	3,010	2,849
부여군	4,024	4,592	-568	1,136	717	1,072	2,171	2,384
서천군	3,432	3,599	-167	822	377	418	2,233	2,359
청양군	2,584	2,619	-35	385	856	945	1,343	1,289
홍성군	12,120	9,879	2,241	3,017	4,042	3,120	5,061	3,742
예산군	8,667	7,450	1,217	1,821	3,274	2,880	3,572	2,749
태안군	4,824	4,840	-16	870	901	1,368	3,053	2,602

자료: 통계청(2025). 2024년 기준 국내인구이동통계. 2025. 7. 16. 인출

- 충청남도의 인구 이동 패턴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흥미로운 경향이 나타남. 20대 초중반 인구는 주로 타 시도로의 전출(시도 간 전출)에 의해 순유출되는 반면, 20대 후반에서 30대, 40대 인구는 타 시도로부터 충남으로의 전입(시도 간 전입)을 통해 순유입되는 경향을 보임. 이는 충청남도가 수도권 등 다른 지역과의 인구 교류가 매우 활발하며, 특정 연령대에서 인구를 유출하고 다른 연령대에서 인구를 유입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줌

- 또한, 모든 연령대에서 시군구 내 이동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충청남도 내부에서도 주거지 이동이 활발함을 의미함. 특히 충남 내 다른 시군구 간의 이동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음. 이는 천안, 아산과 같은 특정 도시로의 인구 집중 현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임
- 결론적으로, 충청남도는 20대 초중반에서 인구 유출을 겪지만, 20대 후반부터 40대까지의 생산가능인구 및 가족 형성기 인구를 타 시도로부터 활발하게 유입시키고 있음. 이는 충청남도가 일자리, 주거 환경, 교육 등의 측면에서 이 연령대의 인구에게 매력적인 요소를 제공하고 있음을 시사함. 이러한 연령대별 인구 이동 패턴은 충남의 산업 구조, 교육 환경, 주거 정책 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심층적인 분석이 요구됨

[표 2-10] 충청남도 연령별 인구이동 현황

연령	총전입	총전출	순이동	시군구내	시군구간 전입	시군구간 전출	시도간 전입	시도간 전출
계	266,831	252,167	14,664	102,832	45,714	45,714	118,285	103,621
19세	3,728	3,863	-135	826	586	586	2,316	2,451
20세	3,587	3,708	-121	888	516	516	2,183	2,304
21세	4,452	4,383	69	992	658	658	2,802	2,733
22세	5,506	6,002	-496	1,240	825	825	3,441	3,937
23세	6,094	6,471	-377	1,441	973	973	3,680	4,057
24세	6,717	7,350	-633	1,784	1,096	1,096	3,837	4,470
25세	6,830	6,837	-7	1,939	1,065	1,065	3,826	3,833
26세	7,200	6,804	396	2,150	1,184	1,184	3,866	3,470
27세	7,433	7,022	411	2,457	1,287	1,287	3,689	3,278
28세	7,617	7,261	356	2,648	1,461	1,461	3,508	3,152
29세	7,344	6,871	473	2,590	1,446	1,446	3,308	2,835
30세	7,095	6,647	448	2,555	1,348	1,348	3,192	2,744
31세	6,917	6,637	280	2,581	1,355	1,355	2,981	2,701
32세	6,566	6,219	347	2,595	1,291	1,291	2,680	2,333
33세	5,559	5,325	234	2,187	1,097	1,097	2,275	2,041
34세	5,297	5,004	293	2,081	1,079	1,079	2,137	1,844
35세	4,810	4,555	255	1,987	944	944	1,879	1,624

연령	총전입	총전출	순이동	시군구내	시군구간 전입	시군구간 전출	시도간 전입	시도간 전출
36세	4,639	4,354	285	1,907	953	953	1,779	1,494
37세	4,365	4,078	287	1,805	820	820	1,740	1,453
38세	4,217	3,960	257	1,758	841	841	1,618	1,361
39세	3,968	3,676	292	1,677	712	712	1,579	1,287
40세	4,006	3,883	123	1,694	763	763	1,549	1,426
41세	4,419	4,055	364	1,859	780	780	1,780	1,416
42세	4,435	4,100	335	1,933	765	765	1,737	1,402
43세	4,095	3,880	215	1,793	691	691	1,611	1,396
44세	4,041	3,705	336	1,750	692	692	1,599	1,263
45세	3,491	3,240	251	1,475	577	577	1,439	1,188
46세	3,397	3,158	239	1,467	576	576	1,354	1,115
47세	3,210	3,026	184	1,401	491	491	1,318	1,134
48세	3,270	3,031	239	1,366	519	519	1,385	1,146
49세	3,486	3,192	294	1,473	593	593	1,420	1,126

자료: 통계청(2025). 2024년 기준 국내인구이동통계(연령별 인구이동). 2025. 7. 16. 인출

3. 시사점

- 충청남도의 인구 이동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14,664명의 순이동 증가를 보이며 전체적으로 인구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 유입은 연령대별로 특징을 나타냄. 20대 초 중반(19~24세)**은 주로 학업이나 초기 구직을 위한 타 시도 전출로 인해 순유출 경향을 보이며, 특히 24세에서 가장 큰 유출이 발생함
- 반면, 20대 후반(26세)부터 40대까지의 생산가능인구 및 가족 형성기 인구는 타 시도로부터 충남으로의 활발한 전입(시도 간 전입)을 통해 순유입됨. 특히 28세, 29세, 30세에서 높은 순유입을 기록함. 이는 충청남도가 일자리, 주거 환경, 교육 등의 측면에서 이 연령대의 인구에게 매력적인 요소를 제공하고 있음을 시사함
- 또한, 충청남도 내부의 인구 이동도 활발한 것으로 확인됨. 모든 연령대에서 동일 시군구

내 이동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여 주거지 이동이 활발함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내부 개발 및 주거지 변동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론됨.. 충남 내 다른 시군구 간의 이동은 천안시, 아산시와 같은 특정 도시로의 인구 집중 현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

- 아울러, 모의 출산연령에서 지역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지역 간 출산 연령 구조의 이질성은 단일한 출산 장려 정책으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함. 또한 출산 연령이 비교적 낮은 지역의 경우, 출산 이후 양육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보육 인프라 확충과 양육지원 강화가 핵심 과제로 부각됨. 반면, 출산 연령이 높은 지역은 혼인·임신·출산이 늦어지는 경향에 대응하여, 난임 치료 지원 확대, 고령 임신부 대상 의료 서비스 강화, 출산휴가 및 경력단절 예방 정책 등이 병행되어야 함. 즉, 충남이나 경북을 포함한 비수도권 지역은 양육 환경의 실질적 개선과 지역사회 정주 여건 조성이 정책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함
-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출산 연령 구조 격차가 지속될 경우, 모자보건, 보육정책, 가족지원 사업 등 인구정책 전반에 있어 연령대별 맞춤형 정책 설계가 필요함. 또한, 출산 연령을 기반으로 정책의 구조적 변화를 체계적으로 반영한 중장기 인구 전략 수립이 필수적으로 요구됨. 이는 단기적 출산 장려를 넘어, 지역의 인구 구조와 사회문화적 상황이 반영되어야 함.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자리하기 위해 인구정책 수립이 체계성을 기반으로 이뤄져야 함
- 충청남도에서는 최근 청년층의 이동이 일시적 유출로 관찰되고 있으나, 향후 지역의 생산 연령인구 기반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인구구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청년 유입전략이 필요함. 아울러 이러한 연령대별 이동 패턴은 충남의 산업 구조, 교육 환경, 주거 정책 등 향후 인구 정책 수립을 위한 중요한 기반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제3장

국내 저출산 인구정책

1. 저출산 인구정책 관련 법 및 제도
2. 국내 저출산 인구정책 사례
3. 시사점

제3장 국내 저출산 인구정책

1. 저출산 인구정책 관련 법 및 제도

1)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 2019년 우리사회는 출생자 수가 사망자 수보다 적은 인구데드크로스(dead cross)현상이 현실화 되면서 2021년부터 전체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함. 그 중 지방 중소도시를 비롯하여 농산어촌은 청년층 유출이 가속화 되었고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인구소멸 위험에 직면함(통계청, 2021)
- 기존에도 지방의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 공동체의 붕괴를 막기 위한 지원은 존재했으나, 범정부차원의 체계적 지원은 미비하였음(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률안 검토보고서, 2022). 또한 지역의 현안에 대해 중앙정부 차원의 개입보다 지역이 스스로 계획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구조로 방향을 전환하여 지역 자율성과 창의성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체계의 필요성이 부각됨(대통령직속 균형발전위원회, 2022). 이에 21대 국회에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안을 발의하였고 2022년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 2022년 6월 법률이 공포되어 23년 1월부터 시행됨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국가적 대응을 통해 지역의 자립적 성장기반을 마련하고 균형있는 국가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됨. 동법은 ‘인구감소지역’을 국가가 지정하여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 재정·행정·세제 특례 → 부처 간 협의·지원체계 구축」이라는 순환적 구조로 지원하고, 지자체가 자체 대응 전략(계획)을 수립하면 중앙정부는 이를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구성됨
- 동법은 인구감소지역의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 균형 있는 국가발전, 그리고 궁극적으로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함(제1조). 여기서 '인구감소지역'은 인구 감소로 지역 공동체 유지가 어려운 곳이며, '정책대상지역'은 인구 감소 가능성이 높은 지역까지 포함하여 인구 문제 전반에 대응하려는 의지를 보임(제2조)
- 이 법에서는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함을 적시함. 저출산 문제 역시 단순한 출산 장려를 넘어 국가적·지역적 차원의 총체적이고 유기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줌(제1조, 제3조-제4조)

- 또한 이 법에서 제시하는 다양한 정책과 지원 분야는 저출산 정책이 추구하는 목표와 연관이 높음(제5조-제15조)
- 젊은 세대와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경감하고, 자녀 양육에 필수적인 의료 및 보육 인프라를 개선하여 출산을 긍정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환경, 즉, 정주 여건 확충(주택, 의료, 보육, 교통 등)이 필요함
 - 안정적인 일자리는 결혼 및 출산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는 산업 기반 및 일자리 창출 (창업, 지역특화산업, 청년·고령자 일자리, 인재 유입)임. 청년들이 지역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정착하고 가족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저출산 문제 해결에 필수적임
 - 아동과 가족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교육, 문화 환경, 복지 및 돌봄 서비스 등의 확충은 출산을 제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줌
- 국비 지원 상향, 세제 감면, 기금 활용 등 다양한 재정적 유인책은 인구감소지역의 경제적 활력을 높이고, 이는 곧 지역 주민의 삶의 안정성으로 이어져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에 기여함. 특히 젊은 세대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출산 결정을 돕는 중요한 요소임(재정 및 세제 지원을 통한 동기부여: 제16조-19조)
- 지역 주도 및 주민 참여의 강조 (제20~22조): 지역 주도의 혁신 프로젝트와 주민 참여형 사업의 우선 지원은 지역 환경에 맞는 맞춤형 정책 구현을 가능하게 함. 저출산 정책 또한 중앙 정부 주도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상향식 접근이 성공 가능성을 높인다는 시사점을 줌
- 결론적으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비록 직접적인 '출산 장려' 법안은 아니지만, 인구 감소라는 거대한 사회 문제에 대응하여 지역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정주 여건과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출산 및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간접적인 저출산 정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음. 이는 저출산 문제가 단순히 출산율 목표를 넘어 사회 전반의 구조적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접근해야 한다는 최근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와도 일맥상통함

[표 3-1]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조문 근거 및 특징
목적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지역 활력 도모 및 국가균형발전 기여	제1조: 법 목적 명시
용어 정의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인구감소관심지역 등 핵심 용어 정의	제2조

구분	주요 내용	조문 근거 및 특징
계획 체계	시·군·구, 시·도, 국가 단위 각각 5개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주민 및 민간 참여 보장)	제5조~제8조: 다단계적, 연계적 계획수립 강조
국가 및 지자체 책무	맞춤형 종합지원, 예산확보, 부처 간·지자체 간 연계 협력, 민간부문과의 협력체계 구축	제3조, 제10조~제11조
재정 지원 및 특례	지방교부세, 각종 행·재정적 지원책, 규제 완화 특례, 세제·재정상 우대	제14조, 제4장~제5장
취약계층·청년· 정착 활성화	청년·중장년층 일자리 및 정착,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약자 지원	제17조
보육·교육· 의료분야	국공립어린이집·학교·의료기관·공공시설 우선 설치, 교육·보육·의료비 등 확대 지원 및 유연한 기준 적용	제21조~제25조
주거·교통 기반 확충	신축·리모델링 지원, 주거복지, 교통편의·공공주택·인프라 우선 공급, 섬지역 우대	제24조 등
생활인구 확대	이주 지원, 생활권 단위 연계 협력, 농어촌유학 등 실거주자·체류자 확대 정책	제15조, 제22조의2
산업·지역경제 활성화	산업단지 특화, 근로자 고용·정주 여건 개선, 기업 유치 및 판로 지원	제28조
적극적 관리 및 평가	실태조사, 성과평가, 우수사례 확산, 정보시스템 구축, 인구감소 관심지역 관리 등	제29~34조, 제6장

자료: 법제처(2025).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25.7.14.자료인출하여 저자가 직접 작성

2)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및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1)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 2000년대 이후 출생률의 지속적인 하락과 고령 인구 비중의 급격한 증가는 대한민국이 인구구조의 심각한 불균형 문제에 직면하게 했음. 이러한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국가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인구 감소로 인한 사회 서비스 및 인프라의 한계로 국민의 삶의 질을 낮추는 요인이 됨
- 특히,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복지재정 지출 확대는 국가의 지속적인 성장과 국민 삶의 질 확보를 위한 중요한 과제로 부상했음. 이러한 인구 문제는 단기적인 정책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기에, 범정부 차원의 일관된 장기대책 및 법적 기반 마련 요구가 높아졌음

- 저출산·고령화 현상 극복을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 민간, 지역사회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임. 이에 따라 200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설치되고 국가 차원의 대책 추진 필요성이 공식 제기되었으며, 2005년 5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제정(법률 제7911호)되어 2005년 9월 24일 시행을 시작했음
- 이 법은 변화하는 인구 환경 및 정책 현황을 반영하기 위해 2024년 기준으로 수차례 개정(2024.1.23. 일부 개정, 2024.4.24. 시행 등)되어 적용 범위와 실효성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음. 특히 최근 개정(2024.1.23.)을 통해 정책 이행력과 정부 간 협력체계, 국민적 인식 제고 조항 등이 보강되었음
- 현재 동 법은 2024년 4월 24일부터 일부 개정 조문이 시행, 인구정책 및 교육, 자녀 출산 및 보육지원, 모자 보건증진 및 경제적 부담 경감, 정책 수립 및 추진체계 등의 영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정책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음
- 법 제정 이후 보육·아동수당 등 사회경제제도가 확대되었음. 즉, 무상보육(전면 도입), 아동수당, 임신·출산 바우처, 육아휴직 확대 등 다양한 직접 지원 정책이 실현되어, 특히 아동 돌봄환경 개선과 여성 경제활동 지속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고, 이는 출산율의 급속한 하락을 일정 부분 완화와 기존보다 유배우 출산율 증대에 일부 기여했다는 다수 평가가 있음(경제인문사회연구원, 2022)
- 또한 법적 기반을 통한 체계화와 지속성을 확보한 측면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음. 다만, 일각에서는 정책의 실행과 연계성 부족의 문제가 지적됨. 즉,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은 중장기 계획의 수립과 범정부 일관 대응체계 마련,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정책의제 설정 등에서 법적·정책적 지속성을 보장하고 있다. 향후 인구정책은 사후평가 및 각계 이해관계자 참여, 중앙-지방 거버넌스 확대를 통해 실효성 제고가 지속적으로 요구됨(최 유, 2021; 우혜봉, 2018)
- 아울러, 근본적 인구구조 개선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음. 전체 출생률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단기적 처방이나 지원확대만으로 인구감소·고령화의 구조적 리스크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현 연구자들의 중론임. 따라서 법을 토대로 한 정책 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 장기적 사회운영 원리 변화, 국민적 합의 등 보다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제기됨(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22; 우혜봉, 2018)

[표 3-2]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조문 또는 특징
목적	저출산·고령화 대응 기본방향, 추진체계 규정, 국가경쟁력·국민 삶의 질 향상	제1조
기본 이념	인구구성의 균형, 질적 향상 실현, 건강·안정된 노후 등	제2조
용어 정의	인구고령화, 정책, 저출산 등 인구정책 관련 용어 정의	제3조
국가·지자체 책무	종합적 정책 수립·시행, 지역 특성 반영, 중장기 계획과 연도별 실행계획 수립, 행정·재정 지원	제4, 21, 32조 등
국민의 책무	정책 참여·협력, 가정 및 지역사회 연대 역량 강조	제5조
기본계획·추진 체계	정부가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중앙정부·지자체 연계	제20, 21조
위원회 설치	대통령 소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책 심의·조정	제23조
지원 및 인센티브	조세 감면, 민간 참여 활성화, 인구의 날 등	제30, 30의2, 32조
전문인력 및 연구	전문인력 양성, 조사·연구 활성화	제28, 29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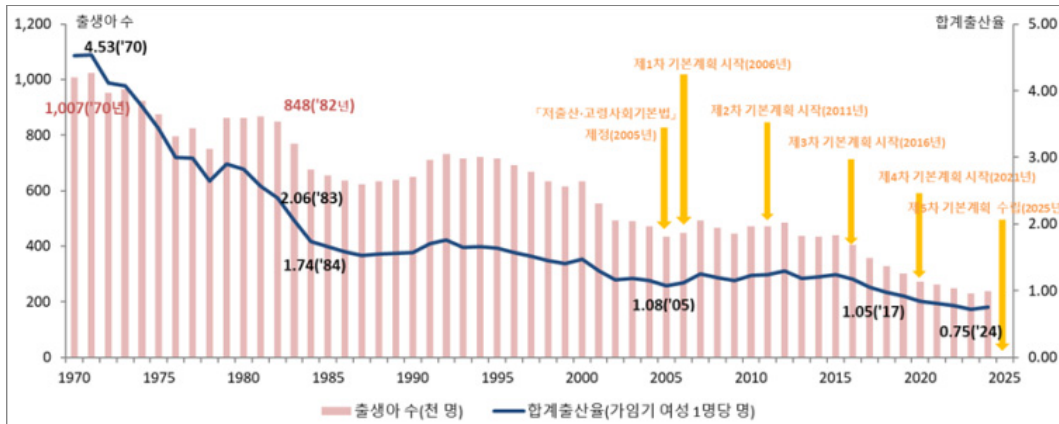
자료: 법제처(2025).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25.7.14.자료인출하여 저자가 직접 작성

(2)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 총남의 인구 및 출산 관련된 정책은 1960년대부터 출산억제 정책으로 시작되었음. 그러나 1983년 합계출산율¹⁾이 인구대체수준(2.08명) 이하로 하락하고, 1984년 1.74명으로 저출산 사회에 진입하면서 정책 기조에 변화가 나타났음
- 1990년대 중반부터는 인구자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목표로 한 정책이 추진되었으며, 이러한 기조는 2000년대 초반까지 이어졌음. 그러나 2001년 합계출산율이 1.30명으로 떨어지며 초저출산 시대가 본격화되자, 2000대 중반부터는 출산장려정책으로 방향이 전환되었음 (인구정책 50년사 편찬위원회, 2016).
- 저출산 현상이 2000년대 초반부터 심화됨에 따라, 정부는 2004년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국가적 의제로 공식화하였음. 2005년 합계출산율이 1.08명까지 하락하자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출범시켰음

1) 여성 1명이 가임기간(15~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

- 이에, 2006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 2015년까지 제1차와 제2차 기본계획이 추진되었음. 이후 2016년부터는 제3차 기본계획, 2020년부터는 제4차 기본계획이 각각 시행되었음. 2025년은 제4차 기본계획의 마지막 해이자, 제5차 기본계획 수립이 이루어지는 시점임



자료: 통계청, e-나라지표,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그림 3-1] 출생아 수 및 출산율 변동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시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20조에 근거하여, 정부가 중·장기 정책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5년마다 수립·추진하는 국가 기본계획임. 기본계획에는 기본 목표, 추진 방향, 추진 과제 및 방법, 재원 규모 등이 포함되며,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바탕으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이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 이처럼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시행된 지 20여 년이 지난 현재에도, 우리 사회는 초저출산 현상을 이어 가고 있으며, 2024년에는 0.75명 수준임(KOSIS 국가통계포털). 이에 본고는 2026년부터 시행될 제5차 기본계획 수립을 앞둔 현 시점에서, 그간 추진된 제1차부터 제4차까지의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성과, 한계를 간략히 정리하고, 향후 저출산 대응 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가.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흐름

- 충남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2006년 제1차 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5년 단위의 중장기 국가전략으로 발전해 왔음. 각 계획은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며 비전과 추진전략을

점차 구체화하고, 정책의 방향성 역시 진화해왔음

- 처음 수립된 제1차 기본계획(2006~2010)은 지속 발전에 대한 우려 속에서 시작된 만큼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지속발전가능사회’를 비전으로 삼았음. 제1차 기본계획에서 앞세운 ‘새로마지플랜 2010’이라는 정책 브랜드는 ‘새롭고 희망찬 출산에서부터 노후생활의 마지막까지 아름답고 행복하게 사는 사회’라는 의미와 ‘희망찬 미래와 행복이 가득한 사회를 새로 맞이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었음. 제1차 기본계획은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미래 성장동력 확보’라는 추진과제로 구성되어 있음(대한민국정부, 2006)
- 5년 후 수립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1~2015) 역시 새로 맞이하는 행복한 출산과 노후를 의미하는 ‘새로마지플랜 2015’로 수립되었고, ‘저출산·고령사회 성공적 대응으로 활력 있는 선진국가로의 도약’을 비전으로 제시했음. 제2차 기본계획은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성장동력 확보 및 분야별 제도 개선’ 추진과제로 구성되어 있음(대한민국정부, 2011)
- 그다음 수립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은 더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향하는 다리라는 의미의 ‘브릿지 플랜 2020’을 정책 브랜드로 도입하고,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발전사회 구현’이라는 비전을 제시하였음. 제3차 기본계획부터는 제2차까지 제시되었던 추진과제 보다 상세한 추진 전략이 제시되어 있는데, ‘청년 일자리·주거대책 강화’, ‘난임 등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실현’, ‘맞춤형 돌봄 확대·교육 개혁’, ‘일·가정양립 사각지대 해소’, ‘노후 소득보장 강화’,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 실현’, ‘여성, 중·고령자, 외국인력 활용 확대’, ‘고령친화경제로의 도약’이라는 전략으로 구성되었음(대한민국정부, 2016)
- 가장 최근에 수립된 제4차 기본계획(2021~2025)은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 가능 사회’를 비전으로 삼고 있음. 주요 추진 전략은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을 제시하고 있음(대한민국정부, 2021)

[표 3-3] 제1차~제4차 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

영역	제1차 (2006~2010년)	제2차 (2011~2015년)	제3차 (2016~2020년)	제4차 (2021~2025년)
비전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지속발전가능사회	저출산·고령사회 성공적 대응으로 활력 있는 선진국가로의 도약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발전사회 구현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 가능 사회

영역	제1차 (2006~2010년)	제2차 (2011~2015년)	제3차 (2016~2020년)	제4차 (2021~2025년)
목표	- 출산율 회복 및 고령사회 성공적 대응(2011~20) -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기반 구축(2006~10)	- 점진적 출산율 회복 및 고령사회 대응체계 확립(2011~15) - OECD 평균수준 출산율 회복 및 고령사회 효과적 대응(2016~30)	- 아이와 함께 행복한 사회(합계출산율 '20 1.5명) - 생산적이고 활기찬 고령사회(노인빈곤율 '20 39%)	- 개인의 삶의 질 향상 - 성평등하고 공정한 사회 - 인구변화 대응 사회 혁신

자료: 제1차~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대한민국

- 이처럼 네 차례에 걸친 기본계획의 비전은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의 지속발전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제1차와 제2차 기본계획은 출산율 회복과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하는 환경 조성에 주력했음. 제3차에서는 아이와 하는 행복한 사회와 활기찬 고령사회를 목표로 두기는 했지만, 그 안에서 합계출산율 1.5명과 노인빈곤율 39%라는 매우 구체적인 수치를 목표로 설정하여 정책 실효성 제고를 시도했음
- 제4차에서는 제3차에서의 직접적인 출산율 목표에서 벗어나 삶의 질 향상과 성평등 사회, 인구변화 대응 등 포괄적 목표를 강조하며, 출산만을 강조하는 정책에서 한 단계 진화하였음

나.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저출산 분야 주요 내용

-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의 저출산 분야는 출산율 하락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기반 구축에 초점을 두었음. 핵심 추진과제는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으로, 이를 위해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사회 책임 강화', '일과 가정의 양립 및 가족 친화 사회문화 조성', '건전한 미래 세대 육성'이라는 세부과제를 설정하였음
- 구체적으로는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를 목적으로, 신혼부부 출발 지원, 자녀 양육 가정의 경제적·사회적 부담 경감, 질 높은 육아 지원과 인프라 확충, 임신·출산지원 확대 등이 추진되었음. 또한 가족 친화적 사회문화 조성과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서는 가족 친화적 직장문화 조성, 모성보호 강화, 학교·사회교육 강화 등의 추진 과제를 두고 있음
- 마지막으로 건전한 미래 세대 육성을 위해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지

원 시스템 확립, 안전한 성장 환경 조성, 빈곤 아동의 자활·자립 지원에 대한 추진 과제들을 담고 있음

- 제1차 기본계획에서는 정책의 주요 대상이 저소득 가정이었고, 보육 지원이 정책의 중심을 이루었음. 이 시기에는 자녀 양육 및 교육비 부담,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육아지원시설 부족 등 자녀 양육 환경이 미흡한 점이 출산과 양육의 장애 요인으로 진단되어, 이를 해소하는 제 정책 역량이 집중되었음
-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1~2015)은 제1차 기본계획의 기초를 이어받아,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을 확대·심화하였음. 주요 세부과제는 ‘일과 가정의 양립 일상화’, ‘결혼, 출산, 양육 부담 경감’,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환경 조성’ 등으로 구성되었음. 특히, ‘일과 가정의 양립 일상화’를 위해서 육아를 위한 휴가·휴직제도 개선, 유연한 근무 형태 확산, 가족 친화 직장 환경 조성이 강화되었음
- ‘결혼, 출산, 양육 부담 경감’과 관련해서는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 자녀 양육비용 지원 확대, 가족 형성 여건 조성,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 지원 인프라 확충을 추진하였음.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환경 조성’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아동·청소년 역량 개발 지원, 안전한 아동·청소년 보호체계 구축, 취약계층 아동 지원 강화, 그리고 아동정책 추진 기반 조성 등임
-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맞벌이 등 일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들이 부각되었으며, 기존 저소득층에서 맞벌이 및 중산층 이상 가정으로 정책 대상의 폭을 확대하였음. 정책 영역 역시 제1차 기본계획의 보육 지원 중심에서 일·가정 양립 지원 내용 등을 보강함으로써 보다 종합적인 접근을 시도하였음
- 전반적으로 제1차와 제2차 기본계획은 내용상 자녀 양육 지원에 중점을 두었음. 무엇보다 무상보육과 같은 정책을 통해 기혼 가구 특히, 자녀가 있는 가족이 정책의 중심이 되는 기초를 보였음. 또한, 자녀 양육 부문이 중요 정책이기는 했지만 결혼, 일·가정 양립, 임신·출산 지원 등 다양한 부문에 대한 정책들을 도입하여 저출산 대책 분야의 기본 구조를 갖추는 모습을 보였음. 하지만 10년간의 정책에도 출산율 반등에 실패하자 저출산 현상의 원인을 더욱 면밀히 분석하기 시작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음
-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에서는 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졌음. 제1차와 제2차 기본계획의 틀을 넘어 거시적이고 구조적인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는 판단에 기반한 것으로 인구 절벽에 대응의 의지를 보여줌

-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출산 장려 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는 사회 구조적 원인에 더욱 집중했음. 그 원인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전 생애를 관통해 전체적인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응 방식으로 발전하였음. 특히,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 전략에서는 모두가 누리는 일-생활 균형(워라벨), 성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 아동 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 아동 기본권의 보편적 보장, 생애 전반 성·재생산권 보장과 관련된 과제들을 추진했음
- 제4차 기본계획의 또 다른 특징은 이전의 제1차~제3차 계획에서 저출산 분야와 고령사회 분야를 구분하여 추진 전략을 세웠던 방식과 달리, 저출산 및 고령사회 분야의 내용이 하나의 추진 전략에 함께 포함되는 경우도 있다는 점임. 예를 들어, '모두의 역량이 골고루 발휘되는 사회' 추진 전략에 포함된 미래 역량을 갖춘 창의적 인재 육성, 평생교육 및 직업훈련 강화, 청년기 삶의 기반 강화, 여성의 경력 유지 및 성장 기반 강화 등의 내용은 저출산 분야의 정책 과제로 볼 수 있음

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저출산 분야의 성과와 한계

-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이후, 정부는 본격적인 출산장려정책을 추진하였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왔음. 제1차 기본계획 부터 제4차 기본계획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제도적 대응은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왔음. 비록 출산율 반등이라는 성과는 미미한 수준이지만, 그간의 추진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는 것은 앞으로 정책 발전 방향 설정에 매우 중요함
- 정책의 주요 성과 중 하나는 보육 및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의 확대임. 2013년 무상보육의 전면 시행을 시작으로, 아이돌봄서비스의 확대, 국공립 및 직장 어린이집 설치 확대 등은 가족의 양육 및 육아부담을 덜어주는 장치가 되었음(보건복지부, 2017.12.26.)
- 육아휴직 제도 역시 개선되었으며, 특히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 증가는 돌봄의 성별 분업 완화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됨. 2024년 에는 남성 육아휴직자가 전체 육아휴직자의 30% 이상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수가 10년 사이 약 9배 증가한 결과임(고용노동부, 2025.2.24.).
- 또한, 임신·출산에 대한 건강관리 및 경제적 지원이 강화되었으며, 최근에는 부모급여 도입(2023년), 청년 자립지원 등 생애주기별 접근 방식의 정책 정비가 이루어졌음. 이러한 변화는 과거보다 다층적이고 구조화된 정책 접근으로의 전환이라 볼 수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합계출산율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4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0.75명(KOSIS 국가통계포털)으로 세계 최저 수준임. 이는 문제가 되는 사회 구조를 변화시키지 않은채 이루어지는 지원들이 중심이 된 접근 방식이 출산율 제고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못했음을 보여줌
- 즉, 청년층 삶의 전반적 조건, 즉 고용 불안정, 높은 주거 비용, 과도한 교육비 부담 등 구조적인 원인에 대한 정책적 개입의 필요성은 인지하였으나, 가시적인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 못했음을 방증함. 특히, 그동안의 저출산 대응 정책은 결혼과 출산을 강하게 연계하는 전통적인 가족관 개념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최근 변화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였음
- 비혼 출산, 비혼 동거, 돌봄 공동체 등 다양한 가족형태와 삶의 방식이 실제의 삶에서는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여전히 법률혼을 중심으로 한 정책 구조가 유지되고 있음. 이로 인해 정책 사각지대에 놓이는 인구가 발생하며, 다양한 가족에 대한 제도적 수용성 부족은 정책 수용자의 욕구에 반응하지 못하고 있음(변수정, 엄다원, 안문희, 2023). 이러한 정책적 접근으로 결혼과 출산의 주요 정책 수요자인 청년 세대의 지지를 얻지 못한 점도 한계일 수 있음

라. 저출산 대응 정책의 발전 방향 및 시사점

- 제5차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그동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저출산 대책 분야의 내용, 성과와 한계 등을 살펴보았음. 지금까지의 정책은 출산 장려와 재정 지원 중심의 접근에서 출발했지만, 구조적인 사회 문제에 대한 실질적 해결로는 충분히 이어지지 못했다. 앞으로의 정책은 단순한 출산율 제고가 아닌 삶의 질 향상과 개인의 선택 존중을 핵심 원칙으로하는 방향 전환이 필요해 보임
- 우선, 출산을 유도하는 방식의 접근을 지양하고, 개인이 누구나 원하는 시기에 자녀를 낳아 양육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함. 특히 청년 세대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주거 안정, 일자리 질 향상, 성평등한 노동 환경 등 기본적인 삶의 조건을 보장하는 정책이 우선되어야함. 이는 출산을 단순히 '선택 가능한 것'으로 여기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실제로 그 선택이 실현될 수 있는 환경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임. 즉, 삶의 기본적인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이 저출산 문제 해결의 핵심적인 전제 조건임을 의미함

2. 국내 저출산 인구정책 사례

1) 결혼 및 출산

- 저출산고령화위원회가 전국 지자체에 공유한 지자체별 우수 저출생 대응 사례 중 지역 맞춤형 우수 저출생 대응 정책 사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1) 성남시: ‘솔로몬의 선택’ 만남 주선 사업

- 지자체가 지역사회 청년들에게 만남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임. 대상은 성남시에 거주 및 근무하는 27~39세 미혼남녀(매회 남녀 50명씩 추천선발)로 성남 소재 호텔 등에서 결혼·연애 특강(연애코칭), 로테이션 대화(1:1 대화 위한 미션제공), 커플게임, 디너파티, 와인스탠딩파티, 매칭(3지망까지 제출)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됨(성남시청 홈페이지)
- 이 사업은 2년간 13회('23년 5회, '24년 8회) 개최하여 288쌍 커플 매칭되었고, 결혼 2건 성사시킨 성과가 있음. 다만, 인위적 만남을 통해 결혼까지 이끌어 낸다는 것에 대한 거부감과 매칭된 커플 대비, 결혼으로 연결되는 성과가 다소 낮은 것으로 보여짐



출처: <https://www.seongnam.go.kr/apply/view.do?appld=3148>



출처: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3/07/11/AAUAIAGTRHKZFCBQIL3JZU7S4/

(2) 예식장소 지원 및 세액공제 사업

- 지자체 보유 자원 등을 활용하여 특색 있는 예식장소를 제공하여 작은 결혼식 문화를 유도하고 결혼 부담을 완화시킨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표 3-4] 지자체 예식장소 지원사업

지역	내용
서울시	❖ '더 아름다운 결혼식' 지원 사업 • (대상) 서울시 거주자 또는 생활권자(서울 소재 직장인, 재학생 포함)인 예비부부, 예비부부의 부 또는 모가 서울시 거주자, '더 아름다운 결혼식'의 취지를 이해하고, 준수사항을 잘 이행할 수 있는 시민 • (결혼장려금 지원) 예비부부 중 한 명이라도 공공예식장 신청일부터 예식 당일까지 서울시 거주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비품비 최대 100만원 지원 • (예식장소) 북서울꿈의숲, 선유도공원, 서울시 인재개발원, 한강 장미원 등 명소 26곳을 결혼식장으로 제공하고, 장소별 전담 웨딩업체의 원스톱 종합 웨딩서비스 제공(https://news.seoul.go.kr/welfare/archives/552332)
부산시	❖ '공공예식장 작은 결혼식 지원'사업 • 부산시 공공예식장(12곳) 작은 결혼식 지원_예비부부 20쌍에 대관료, 구임비용, 촬영, 특별 행사 등 예식비용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 서구청 내 공공예식장 운영(개인 비용부담 약 20만원, 기초수급자 무료), 서구민·다문화가족 청년 대상으로 구 청사 내 공공예식장 이용료 50% 감면
세종시	❖ '나만의 결혼식'사업 • 공공 결혼식장 제공 및 공간 조성 연출비 150만원을 14쌍에게 지원 • 결혼식 장소로 개방되는 공공시설물은 ▲이응다리 ▲초려역사공원 ▲조치원문화정원 ▲세종 호수공원 ▲세종중앙공원 ▲세종시청 4층 책문화센터 ▲조치원1927아트센터 ▲새롭종합복지센터 등 총 8곳임
대전시·충북	❖ 결혼 세액공제(기재부) • 2025년 신규 정부사업인 결혼세액공제(기재부)와 관련하여 재정사업으로 결혼축하금을 지급하는 등 정부보다 선제적으로 지원 • (대전 '결혼장려금') 1인 250만원(부부 500만원) 지원하여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 완화 • (충북 '행복결혼공제') 본인이 월 30만원 적립하면 기업이 월 20만원, 지자체가 월 30만원 추가 지원하여 5년 만기 후 5천만원 마련하는 공제사업

서울시	부산시	세종시
		
출처: https://wedding.seoulwomen.or.kr/	출처: https://www.bsseogu.go.kr/board/view.bsseogu?boardId=BBS_0000039&menuCd=DOM_000000103001012000&dataSid=261665	출처: https://www.sejong.go.kr/bbs/R0079/view.do?nttlId=B000000106881Jw7hC7k

- 자료 1) <https://wedding.seoulwomen.or.kr/>
2) https://www.bsseogu.go.kr/board/view.bsseogu?boardId=BBS_0000039&menuCd=DOM_000000103001012000&dataSid=261665
3) <https://www.sejong.go.kr/bbs/R0079/view.do?nttlId=B000000106881Jw7hC7k>

(3) 공공산후조리원

- 지역의 산후조리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적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이 운영되고 있음. 공공산후조리원의 경우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설립을 추진할 시, 2026년 투자계획에 권장사업으로 포함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 지원할 예정임
- 또한, 분만 시설이 취약한 지역에서는 산부인과 운영을 지원하거나, 첫 만남이용권 등 기존 정부 지원에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하여 출산 가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임

[표 3-5] 지자체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현황

지자체			이용료 (만원)	지자체			이용료 (만원)	지자체			이용료 (만원)
서울	서대문구		250	강원	화천군		180	전남	해남군		154
	송파구		209		양구군		180		완도군		154
울산	북구		189		양양군		180	경북	김천시		168
경기	포천시		168	충남	홍성군		182		상주시		180

지자체		이용료 (만원)	지자체		이용료 (만원)	지자체		이용료 (만원)
	여주시	168	전남	순천시	154		울진군	182
강원	삼척시	180		나주시	154	경남	밀양시	160
	철원군	179		강진군	154	제주	서귀포시	154

자료: 2025.5.기준 각지자체 홈페이지

- 경상북도 김천시는 분만 취약지 해소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분만산부인과 운영’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2008년 분만산부인과 운영을 중단한 김천의료원은 15년 만인 2024년 1월 1일에 해당 진료과를 재개원, 지역사회 내 분만 인프라 확충의 핵심적 사례로 평가됨
- 경상북도는 이를 위해 분만실 및 신생아실 리모델링, 의료장비 확충, 산부인과 전문의 채용 등 총 7억 6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운영 재개를 지원함
- 운영 재개 약 2개월 만인 2024년 2월 20일 김천의료원에서 첫 출생아가 탄생하며, 지역사회 내에서 상징적인 성과로 주목받았음. 이 사례는 지방 중소도시에서의 분만의료 접근성 격차 해소와 필수의료 공백 대응을 위한 성공적인 모델로 평가받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로부터도 높은 만족도와 신뢰를 얻고 있는 것으로 보도됨(김천신문, 2025.2)

〈 기타 우수 사례 〉

- ① (경북 김천 ‘분만산부인과 운영’) 김천의료원 내 분만산부인과 운영
- ② (서울 ‘산후조리경비 지원’) 출생아 1인당 100만원 산후조리 바우처 지원(최대 300만원)
- ③ (대구 ‘출생축하금’) 둘째 100만원, 셋째 이상 200만원 지원

2) 주거

(1) 공공임대

- 주택 공급이 부족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저렴한 임대료에 장기간 거주를 보장하여 신혼부부가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함. 신혼부부의 주택마련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킨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표 3-6] 타지역 공공임대주택 사례

구 분		서울 '미리내집'	인천 '천원주택'
거주기간		신혼부부~10년 → 출산시~20년	최대 6년
임차료		(전세) 시세 대비 80% 이하	(월세) 1일 천원(월 3만원)
면 적		-	무자녀~65m ² , 1자녀~75m ² , 2자녀~85m ² ,
조건	소득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기준 (60m ² ↓) 120%(맞벌이 150%) 이하 (60m ² ↑) 150%(맞벌이 200%) 이하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6억 5,500만원 이하	-
매수권		2자녀 이상 출산시 가능 (2자녀 시세 90%, 3자녀 이상 80%)	-
공급호수		'24년1022호 → '26년~연 4,000호	연 1,000호

자료: 서울시 및 인천시 홈페이지 25.6.20. 인출, 저자 직접 작성

3) 양육 및 돌봄

(1) 조부모 수당

- 최근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 맞춤형 돌봄정책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이 조부모 또는 친인척을 활용한 가정 내 양육지원 정책을 도입·시행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는 부모의 육아 부담 경감과 가족 중심 돌봄체계 복원을 목표로 조부모 등에게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을 운영 중임
- 아래는 서울, 광주, 경기, 경남, 울산 등에서 시행 중인 대표적인 조부모 양육수당 지원사업의 현황임

[표 3-7] 지자체 조부모 등 양육수당 사업 현황

지역		서울	광주	경기	경남	울산
사업명		서울형 아이돌보미	손자녀 돌보미	경기형 가족돌봄 수당	손주돌봄 수당	조부모 돌봄수당
대상	아동	만24~36개월 이하	만6세 이하	만24~48개월 미만	만24~35개월 이하	만24~35개월 이하
조건	양육자	조부모, 4촌 이내	조부모 (70세 이하)	조부모, 4촌 이내	조부모	조부모

지역	서울	광주	경기	경남	울산
	친인척, 민간업체(서울시 협약)	* 70세 ↑, 심의결정	친인척, 이웃		
소득	중위소득 150% 이하	중위소득 150% 이하 * 맞벌이: 소득 25% 경감	없음	중위소득 150% 이하	중위소득 150% 이하
요건	맞벌이, 한부모 가정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수당 (월, 만원)	아동 1명시 30, 2명 45, 3명 60	4시간 이상 20 8시간 이상 30	아동 1명시 30, 2명 45, 3명 60	가구당 20	아동 1명시 20, 2명 30, 3명 40

자료: 각 지자체 홈페이지

(2) 양육 수당

- 분산되어 운영되던 개별 저출생 대응 사업을 통합하고, 아동 1인당 총 지원 규모를 제시함으로써 정책의 체감도와 수혜 인식을 제고함.

가. 인천시: 『1억+드림』

- 인천시의 『1억+드림』 사업은 아동 1인당 총 1억 원 규모의 양육지원 패키지를 제공하는 통합형 지원사업으로, 생애주기(1~18세)에 따라 항목별 지원을 체계적으로 구성한 점이 특징임. 기존에 분산되어 있던 개별 사업들을 하나의 통합 브랜드로 묶어 인지도를 높이고, 정책 체감도를 크게 향상시킨 대표 사례로 지목됨
- 특히, “아이 한 명 낳으면 1억 지원”이라는 직관적이고 강력한 메시지를 통해 시민의 정책 이해도와 수용성을 제고했으며, 이는 향후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될 수 있는 저출생 대응 전략모델로 평가됨

[표 3-8] 인천시 1억+드림

사업명	대상연령	지원금	1인 총액
1040지원금	1~7세	월10만원	840만원
i꿈드림	8~18세	월15만원	1,980만원

자료: <https://www.incheon.go.kr/welfare/WE020418>

나. 전라남도: 출생기본수당

- 전라남도는 저출산에 대응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대상으로 출생기본수당을 지원하고 있음. 본 사업은 생애 초기 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양육지원을 통해 도내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내 인구 유입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지원 대상은 출생일 기준 부모 모두 또는 부 또는 모 중 1인이 전라남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경우임. 이는 실질적인 거주 요건을 충족한 도민을 중심으로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지역 내 출생 유도를 목표로 함

[표 3-9] 전라남도 출생기본수당

출생순위	지원금액 및 기간	신청 및 지급방법
첫째아	월20만원×12개월	• 수당 신청은 출생아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해야 하며, 신청기한은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임 • 수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익월부터 매월 신청인 계좌로 현금 지급됨
둘째아	월30만원×12개월	
셋째아 이상	월50만원×12개월	

자료: <https://www.hani.co.kr/arti/area/honam/1180064.html>

4) 지자체 인구정책 특화사업

(1) 대전시

- 대전광역시시는 최근 인구 감소와 출생률 저하로 인한 인구 불균형 및 지역 활력 저하 문제에 직면함. 특히 청년층 이탈, 출산 기피, 외국인·다문화 인구 유입 등 복합적인 변화에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해 지역 환경과 주민 요구에 맞는 맞춤형 인구정책 개발을 핵심 목표로 설정, 각 자치구(동구, 서구, 중구, 유성구, 대덕구)가 자체적으로 대응 전략을 모색하고 실효성 있는 사업을 발굴하도록 유도하며, 가족, 육아, 여성, 청년 등 계층별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사회의 활력을 증진하고 인구 위기를 극복하고자 함

[표 3-10] 대전시 인구감소 대응 공모사업 주요 내용

사업명	주요 내용 및 특징
외국인 정주 여건 개선 지원	• 외국인의 지역 사회 정착을 위한 상담, 교육, 커뮤니티 프로그램 제공 등
가족 플러스 사업	• 가족 소통·유대 강화 프로그램, 가족 친화 문화 확산
다복다복 재미있는 인구 콘서트	• 인구정책 인식 개선을 위한 참여형 문화행사, 콘서트 개최
가족 친화 힐링 프로그램 운영	• 가족 단위 심신 치유, 여가·건강증진 활동
임신부 육아 도서 지원	• 임신부 대상 육아·출산 관련 도서 무상 지원
모유수유용품 대여 확대	• 출산가정 대상 모유수유기 등 유아용품 무료 또는 저가 대여
수요자 중심 여성 친화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경력단절 예방, 여성 역량개발·취창업, 심리상담 등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가족×육아 웹툰 제작	• 출산·양육 경험, 가족사랑 메시지 전달 웹툰 콘텐츠 제작·홍보
아이 love family(가족친화 프로그램사업)	• 아빠와 함께하는 '파파데이', 가족 놀이·체험 행사 등 가족친화캠페인 전개

자료: <https://daily.hankooki.com>

3. 시사점

1) 중앙정부 정책 변화의 시사점: 구조적 전환의 필요성

- 중앙정부의 저출산 정책은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 이후 점진적인 진화 과정을 거쳤음. 정책 방향은 초기의 출산 및 보육 지원 중심 단계를 지나, 일·가정 양립 강화와 기혼가구 지원 확대를 거쳐, 청년 고용·주거·성평등·제도 개선 등 구조적 요인까지 범위를 넓히며 진화해 왔음. 특히 제4차 기본계획에서는 단순한 출산율 제고 목표를 지양하고, 삶의 질 향상과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그리고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포용성을 핵심 방향으로 제시함으로써 정책 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을 보여줌
- 제도가 확대되고 다양한 지원책이 도입되었음에도, 보육 지원과 아동수당, 무상보육 등 생활 보조형 정책만으로는 출산율 하락을 막지 못했고, 이에 따라 단순한 금전·서비스 제공 방식의 한계가 분명히 확인되었음. 이는 저출산 문제의 기저에 청년층의 불안정한 고용, 주거비 부담, 과도한 교육비, 일·가정 병행의 어려움 등이 서로 맞물린 구조적 요인이 자

리하고 있음을 보여줌. 아울러 기존 정책이 법적 혼인 관계와 핵가족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비혼 출산과 동거 가족, 조부모 돌봄 등 다양한 가족 모델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 역시 문제로 제기됨

- 중앙정부 정책의 변화 양상과 그 한계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바탕으로, 충남도의 저출산 대응은 단순한 출산 촉진에 머물지 않고 주거·고용·시간·돌봄 등 구조적 요인을 정책 중심에 두어야 함. 출산을 수치만을 목표로 하기보다, 삶의 안정성과 지역 정착 지원, 성평등 실현,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고 지원하는 방향을 상위 목표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도가 추진 중인 선이자 보전, 시간권 협약, 연장·야간 보육 확대, 산전·산후 지원 등 실질적 구조 개선을 지향하는 제도들을 핵심 정책 축으로 강화하는 전략이 요구됨

2) 국내 지자체 정책 사례의 시사점: 정책의 보조적 역할 및 연계 강화

- 결혼을 위한 만남과 매칭사업임. 성남시 ‘솔로몬의 선택’ 사례와 같은 공공 주도의 만남·매칭 사업은 2년 동안 288쌍 매칭 중 결혼 2건이라는 매우 제한적인 직접 효과를 보였음. 이는 인위적 만남에 대한 거부감과 더불어 주거, 일자리, 가치관 등 복합적인 요인이 결혼 결정에 작용하는 현실을 반영한 결과임. 즉, 결혼 만남·매칭 사업의 제한적 효과를 기대하며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충남도는 만남·커뮤니티 지원 사업을 정책의 보조적 역할로 한정하고, 정책의 중심을 결혼 이후의 실질적인 부담(주거, 돌봄, 시간, 재정)을 완화하는 데 두는 것이 합리적임. 만남 지원이 필요하다면, 독립된 사업이 아닌 지역 문화, 청년센터, 청년마을 등을 기반으로 한 자연스러운 네트워킹 프로그램으로 통합하여 추진하는 방식이 효율적임

제4장

충청남도 저출산 인구정책 인식조사

1. 조사개요
2. 조사결과
3. 전문가 델파이 조사
4. 소결

제4장 충청남도 저출산 인구정책 인식조사

1. 조사개요

1) 조사대상 및 방법

- 충남도의 저출산 인구정책에 대한 인식조사를 위해 충남도에 거주하는 19세부터 49세도민 44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음. 조사 기간은 25년 5월부터 6월까지 진행되었고, 조사 방법은 온라인 모바일 조사를 진행하였음
- 온라인 모바일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설문지를 개발 한 후 모바일 설문지를 개발하였으며 충남도에 거주하는 19세부터 49세 연령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음
- 조사문항영역과 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4-1] 1-2차 설문조사 시기 및 대상

조사영역	세부항목
일반적 특성	• 성별, 연령, 거주지, 혼인상태, 가구구성, 교육수준, 직업, 소득
주관적 건강상태 및 행복감	• 주관적 건강에 대한 인식 • 행복감 등
저출산 및 가족에 대한 전반적 인식	•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 • 자녀에 대한 가치관 • 재출산에 대한 인식 • 자녀 현황 및 계획 •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인식
인구현황 및 대응에 대한 인식	• 인구감소에 대한 인식 • 인구감소 해결을 위한 정책에 대한 인식
저출산 인구감소 극복을 위한 정책 요구도	• 교육 및 일자리 정책 • 보건의료정책 • 결혼과 출산에 대한 정책 • 공동체 관련 정책

2) 분석방법

- 본 연구는 SPSS 26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성별, 연령, 직업, 거주지, 혼인상태, 자녀유무,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 인구현황 및 대응에 대한 인식, 가족에 대한 인식 등에 대해 빈도분석을 진행하였음

2. 조사결과

1) 인구학적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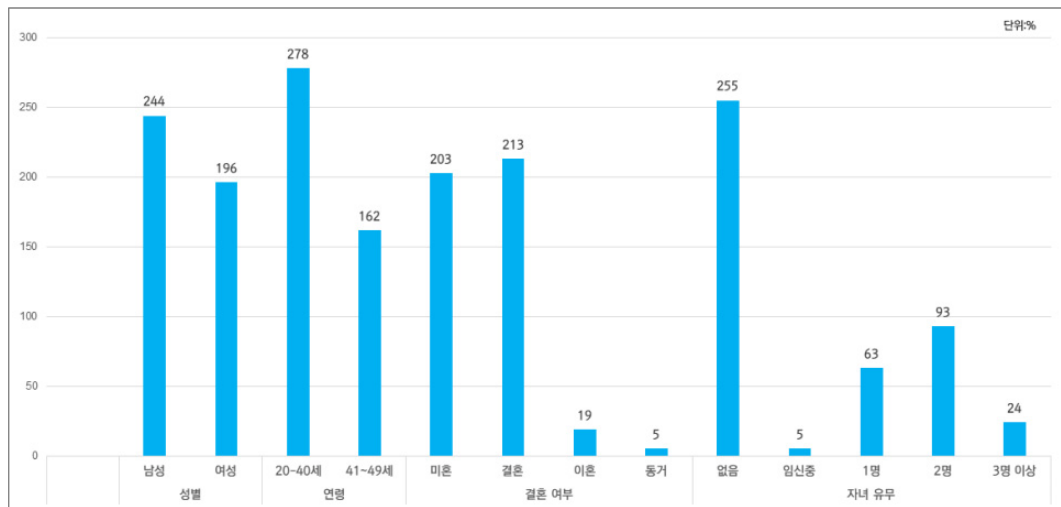
- 총 440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55.5%는 남성, 44.5%는 여성으로 구성되었으며, 특히 41-49세 연령층이 36.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주요 발견사항으로는 30-40대 중장년층이 전체 응답자의 69.3%를 차지하는 중장년층 중심의 연령 분포를 보였고, 응답자의 72.7%가 수도권에 거주하는 압도적인 수도권 집중 현상이 관찰되었음. 또한, 월 소득 300만원 이상인 중상위 소득층이 80.9%를 차지하며 경제적으로 안정된 계층의 참여가 두드러졌고, 모든 연령대에서 남성 비율이 50% 이상을 유지하는 남성 우세 경향이 확인되었음.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정책 개발 시 40대 중장년층을 주력 대상으로 하되 20-30대 젊은 층의 참여 확대를 모색하고, 수도권 외 지역의 참여 증진을 위한 지역 균형 전략과 저소득층 의견 수렴 확대를 통한 계층 다양화 전략, 그리고 여성 참여율 제고 방안을 포함한 성별 균형 전략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음

[표 4-2] 조사참여자 인구학적 특성

(단위: 명/%)

구분		사례수	1) 남성	2) 여성
		(440)	55.5	44.5
성별	남성	(244)	100.0	-
	여성	(196)	-	100.0
연령대	만20~25세	(62)	56.5	43.5
	만26~30세	(73)	57.5	42.5
	만31~35세	(62)	59.7	40.3
	만36~40세	(81)	53.1	46.9
	만41~49세	(162)	53.7	46.3
거주 권역	북부권	(320)	54.1	45.9
	내륙중부권	(43)	58.1	41.9
	서해안권	(47)	59.6	40.4
	남동권	(30)	60.0	40.0
결혼 여부	미혼	(203)	61.1	38.9
	결혼	(213)	50.2	49.8
	이혼	(19)	52.6	47.4
	동거	(5)	60.0	40.0
자녀 유무	없음	(255)	59.6	40.4
	임신중	(5)	60.0	40.0
	1명	(63)	54.0	46.0
	2명	(93)	46.2	53.8
	3명 이상	(24)	50.0	50.0
직업	정규직	(250)	64.8	35.2
	비정규직	(62)	41.9	58.1
	자영업	(24)	58.3	41.7
	전업주부	(38)	0.0	100.0
	학생	(43)	62.8	37.2
	기타	(23)	65.2	34.8
최종학력	고졸	(136)	58.8	41.2

구분		사례수	1) 남성	2) 여성
		(440)	55.5	44.5
	대졸	(269)	52.8	47.2
	대학원 이상	(35)	62.9	37.1
월평균 소득	100만원 이하	(39)	51.3	48.7
	101~150만원 이하	(12)	58.3	41.7
	151~300만원 이하	(114)	48.2	51.8
	301~500만원 이하	(156)	64.1	35.9
	501만원 이상	(119)	52.1	47.9



[그림 4-1] 조사 참여자 일반적 특성

- 응답자 중 41~49세 연령층이 36.8%로 압도적으로 많음. 30대 이상 연령층이 전체의 69.3%를 차지하였고, 20~30대 젊은 층은 전체의 30.7%로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보였음.
- 혼인상태는 20대는 미혼 비중이 27.6%로 주류를 이룸. 이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시기로서 혼인율이 낮은 일반적인 패턴과 유사함. 30대 초반 (30~34세로 추정)은 미혼 비중이 29.6%임. 30대 중반 (35~39세로 추정)은 미혼 비중이 14.3%로 급격히 감소하며, 이 시점이 혼인율이 크게 증가하는 전환점임을 시사함
- 반면, 40대는 기혼 비중이 58.2%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 이 연령대가 안정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주된 그룹임을 보여줌. 자녀출산은 다자녀(3명 이상)이 40대에서 79.2%

라는 높은 비중을 보였음. 이는 다자녀 가구가 주로 40대에 집중되어 있음을 의미함. 2자녀는 40대에서 74.2%를 차지하여, 2자녀 가구 역시 40대에 가장 보편적으로 분포함

- 한 자녀는 30대 후반부터 급증하는 양상(27.0% → 50.8%)을 보여, 늦게 자녀를 갖거나 외동 자녀를 선호하는 경향이 이 연령대에서 뚜렷하게 나타남을 시사함

[표 4-3] 연령에 따른 성별, 거주지역, 혼인상태, 자녀유무

(단위: 명/%)

구분		사례수	20-25세	26-30세	만31-35세	만36-40세	41-49세
전체		(440)	14.1	16.6	14.1	18.4	36.8
성별	남성	(244)	14.3	17.2	15.2	17.6	35.7
	여성	(196)	13.8	15.8	12.8	19.4	38.3
거주 권역	북부권	(320)	13.4	16.9	14.7	20.3	34.7
	내륙중부권	(43)	18.6	18.6	14.0	14.0	34.9
	서해안권	(47)	10.6	17.0	12.8	17.0	42.6
	남동권	(30)	20.0	10.0	10.0	6.7	53.3
결혼 여부	미혼	(203)	27.6	29.6	14.3	14.8	13.8
	결혼	(213)	0.9	6.1	13.1	21.6	58.2
	이혼	(19)	5.3	-	21.1	26.3	47.4
	동거	(5)	60.0	-	20.0	-	20.0
자녀 유무	없음	(255)	23.9	26.3	18.0	15.3	16.5
	임신중	(5)	-	20.0	20.0	60.0	-
	1명	(63)	1.6	6.3	14.3	27.0	50.8
	2명	(93)	-	1.1	4.3	20.4	74.2
	3명 이상	(24)	-	-	8.3	12.5	79.2

- 직업별 연령대 분석을 보면, 정규직 (250명): 41~49세 연령대가 38.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전반적으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정규직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음. 이는 중장년층이 안정적인 고용 형태를 유지하고 있음을 시사함

- 비정규직 (62명): 20~25세(16.1%), 26~30세(17.7%), 36~40세(16.1%)가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였으며, 특정 연령대에 집중되기보다는 청년층 및 일부 중년층에 걸쳐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자영업 (24명): 41~49세 연령대가 54.2%로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주로 중장년층에서 자영업에 종사하는 경향을 보여주었음. 전업주부 (38명)는 41~49세 연령대가 57.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36~40세(23.7%)도 높은 비율을 보여 중장년 여성층의 주된 직업 형태임을 나타냈음. 학생 (43명)은 20~25세 연령대가 86.0%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예상대로 학생층은 주로 젊은 연령대에 분포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음

- 최종학력별 참여자 연령을 보면, 고졸 (136명)은 20~25세는 32.4%로 가장 높았음. 대졸 (269명)은 41~49세 연령대가 37.5%로 가장 높았으며 대학원 이상(35명)은 41~49세 연령대가 54.3%로 과반수를 차지하였음
- 연령에 따른 월평균 소득을 보면, 100만원 이하 (39명) 20~25세 연령대가 46.2%로 가장 높았고, 101~150만원 이하 (12명) 20~25세(33.3%)와 41~49세(33.3%) 순으로 나타났음
- 301~500만원 이하 (156명) 41~49세 연령대가 32.7%로 가장 높으며, 36~40세(24.4%)도 높은 비율을 보여 중장년층의 안정적인 소득 구간임을 확인하였음. 501만원 이상 (119명): 41~49세 연령대가 54.6%로 과반수를 차지하며, 고소득층은 주로 중장년층에 집중되어 있음을 의미함. 이는 경력 축적에 따른 소득 증가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임

[표 4-4] 연령에 따른 직업, 학력, 소득

(단위: 명/%)

구분		사례수	20-25세	26-30세	만31-35세	만36-40세	만41-49세
직업	정규직	(250)	4.8	16.4	18.4	21.6	38.8
	비정규직	(62)	16.1	17.7	12.9	16.1	37.1
	자영업	(24)	8.3	16.7	8.3	12.5	54.2
	전업주부	(38)	0.0	5.3	13.2	23.7	57.9
	학생	(43)	86.0	11.6	2.3	0.0	0.0
	기타	(23)	4.3	43.5	0.0	21.7	30.4
학력	고졸	(136)	32.4	12.5	8.8	15.4	30.9
	대졸	(269)	6.3	20.1	16.4	19.7	37.5
	대학원 이상	(35)	2.9	5.7	17.1	20.0	54.3
월평균 소득	100만원 이하	(39)	46.2	20.5	2.6	15.4	15.4
	101~150만원 이하	(12)	33.3	8.3	16.7	8.3	33.3
	151~300만원 이하	(114)	10.5	18.4	20.2	19.3	31.6
	301~500만원 이하	(156)	9.6	17.9	15.4	24.4	32.7
	501만원 이상	(119)	10.9	12.6	10.1	11.8	54.6

2) 저출산 현상에 대한 인식

(1) 저출산 현상의 심각성

- 전체 응답자 중 61.4%가 저출산 문제를 '매우 심각하다'고 응답했으며, '조금 심각한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3.2%로 나타났다. 즉, 전체의 약 94.6%가 저출산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반면, '별로 심각하지 않다'와 '전혀 심각하지 않다'라는 응답은 각각 2.1%, 1.4%에 불과하였음. 이러한 결과는 충남사회에서 저출산 현상이 사회적 위기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줌
- 성별에 따른 분석 결과, 남성의 73.8%가 '매우 심각하다'고 응답하여 여성(45.9%)보다 저출산 문제를 더 위중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을 보였음. 반면 여성은 '조금 심각한 편'이라는 응답이 46.9%로, 남성(22.1%)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는 남성의 경우 국가·사회적 차원의 위기의식을 더 크게 느끼는 반면, 여성은 일상적 경험 속에서 다소 다른 체감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혼인상태에 따라 저출산 현상에 대한 인식을 보면, 기혼자의 65.6%가 '매우 심각하다'고 응답하여 미혼자(58.1%)보다 높았음. 연령별로는 40대(66.7%)와 50세 이상(68.6%)가 높게 인식하였음. 반면 20대(55.2%)와 30대(55.2%)는 상대적으로 낮았음

[표 4-5] 성별, 연령, 거주권역, 혼인상태에 따른 충남 저출산현상의 심각성

(단위: 명/%)

구분		사례수	매우 심각함	조금 심각한 편	별로 심각하지 않은 편	전혀 심각하지 않음
전체		(440)	61.4	33.2	4.1	1.4
성별	남성	(244)	73.8	22.1	2.0	2.0
	여성	(196)	45.9	46.9	6.6	0.5
결혼 여부	미혼	203	58.1	35.5	4.4	2.0
	기혼 (사실혼 포함)	232	63.4	31.9	3.9	0.9
연령대	20-30세	135	55.9	34.1	4.4	2.2
	31-40세	143	55.2	37.8	4.9	2.1
	41-49세	162	68.5	28.4	3.1	-
거주 권역	북부권	(320)	59.7	33.8	5.0	1.6
	내륙중부권	(43)	69.8	27.9	2.3	0.0
	서해안권	(47)	59.6	36.2	2.1	2.1
	남부권	(30)	70.0	30.0	0.0	0.0

- 다자녀일수록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더욱 강하게 나타나며 체감도 역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이는 실제 자녀 양육 경험이 있는 집단이 저출산 문제를 더욱 절실하게 느끼고 있음을 시사함

[표 4-6] 자녀유무, 직업, 학력, 소득에 따른 충남사회 저출산현상의 심각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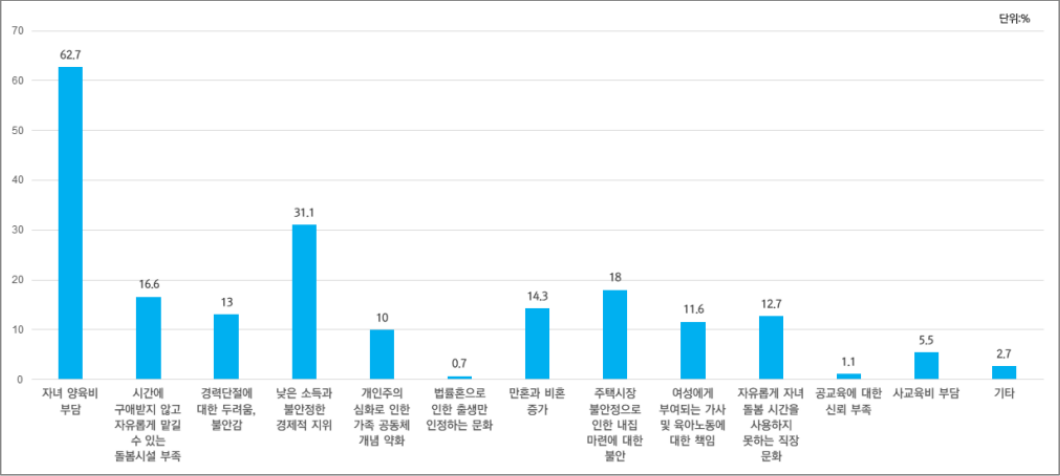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사례수	매우 심각함	조금 심각한 편	별로 심각하지 않은 편	전혀 심각하지 않음	100점 환산 평균
자녀 유무	없음	(255)	57.6	35.3	5.1	2.0	17.12
	임신중	(5)	40.0	40.0	20.0	0.0	26.67
	1명	(63)	65.1	31.7	1.6	1.6	13.23
	2명	(93)	67.7	31.2	1.1	0.0	11.11
	3명 이상	(24)	70.8	20.8	8.3	0.0	12.50
최종 학력	고졸	(136)	66.2	29.4	2.9	1.5	13.24
	대졸	(269)	58.4	35.3	4.8	1.5	16.48
	대학원 이상	(35)	65.7	31.4	2.9	0.0	12.38
직업	정규직	(250)	65.6	29.2	3.6	1.6	13.73
	비정규직	(62)	48.4	46.8	4.8	0.0	18.82
	자영업	(24)	54.2	33.3	12.5	0.0	19.44
	전업주부	(38)	52.6	42.1	5.3	0.0	17.54
	학생	(43)	67.4	25.6	2.3	4.7	14.73
	기타	(23)	60.9	39.1	0.0	0.0	13.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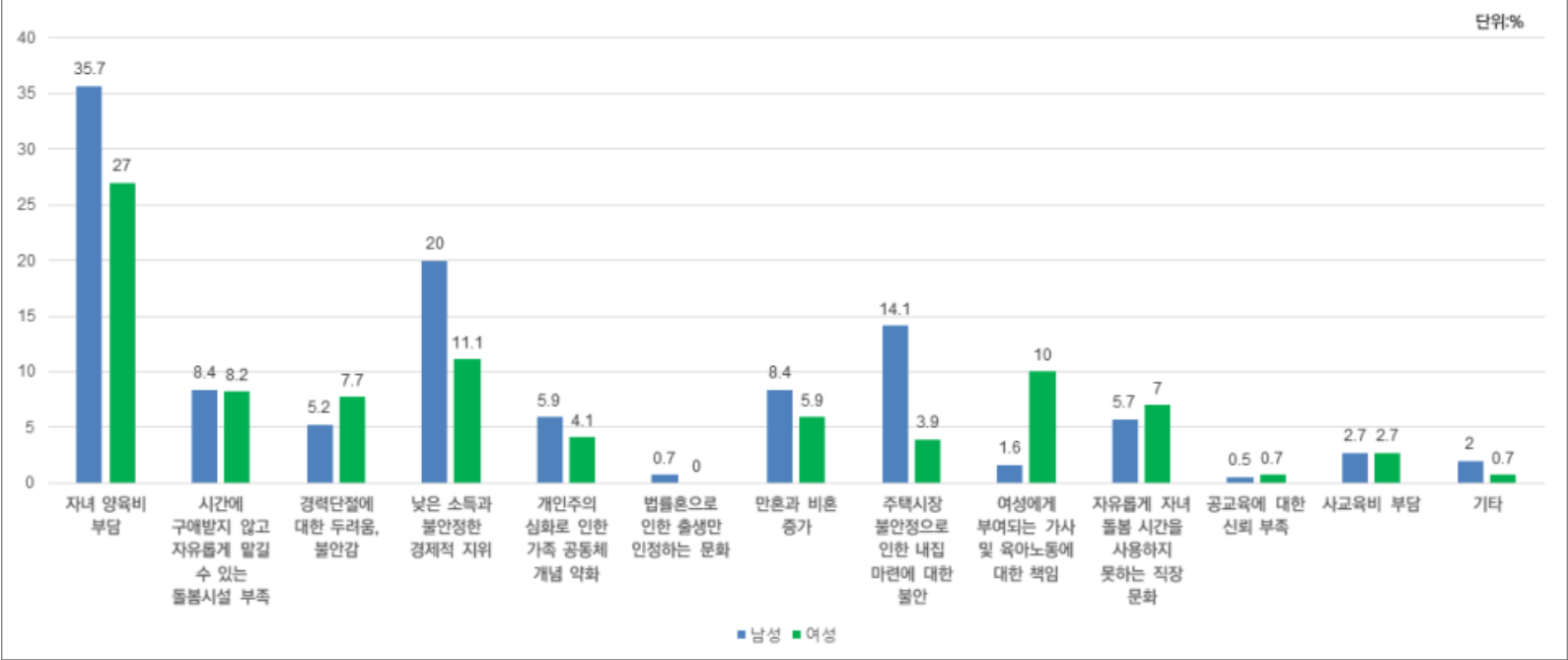
(2) 저출산 현상 원인에 대한 인식

- 전체적으로 응답자들은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으로 자녀 양육비 부담(62.7%)을 꼽았음. 그 다음으로는 낮은 소득과 불안정한 경제적 지위(31.1%), 주택시장 불안으로 인한 미래 불안(18.0%), 마땅히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 서비스 부족(16.6%), 사회 분위기 고착(14.3%) 순으로 나타났음. 반면, 법률혼 이외 결혼의 사회적 인정 부족(0.7%)과 기타 응답(2.7%)은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했음
- 즉, 경제적 부담과 주거·돌봄 불안이 핵심적 원인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제도적·문화적 요인은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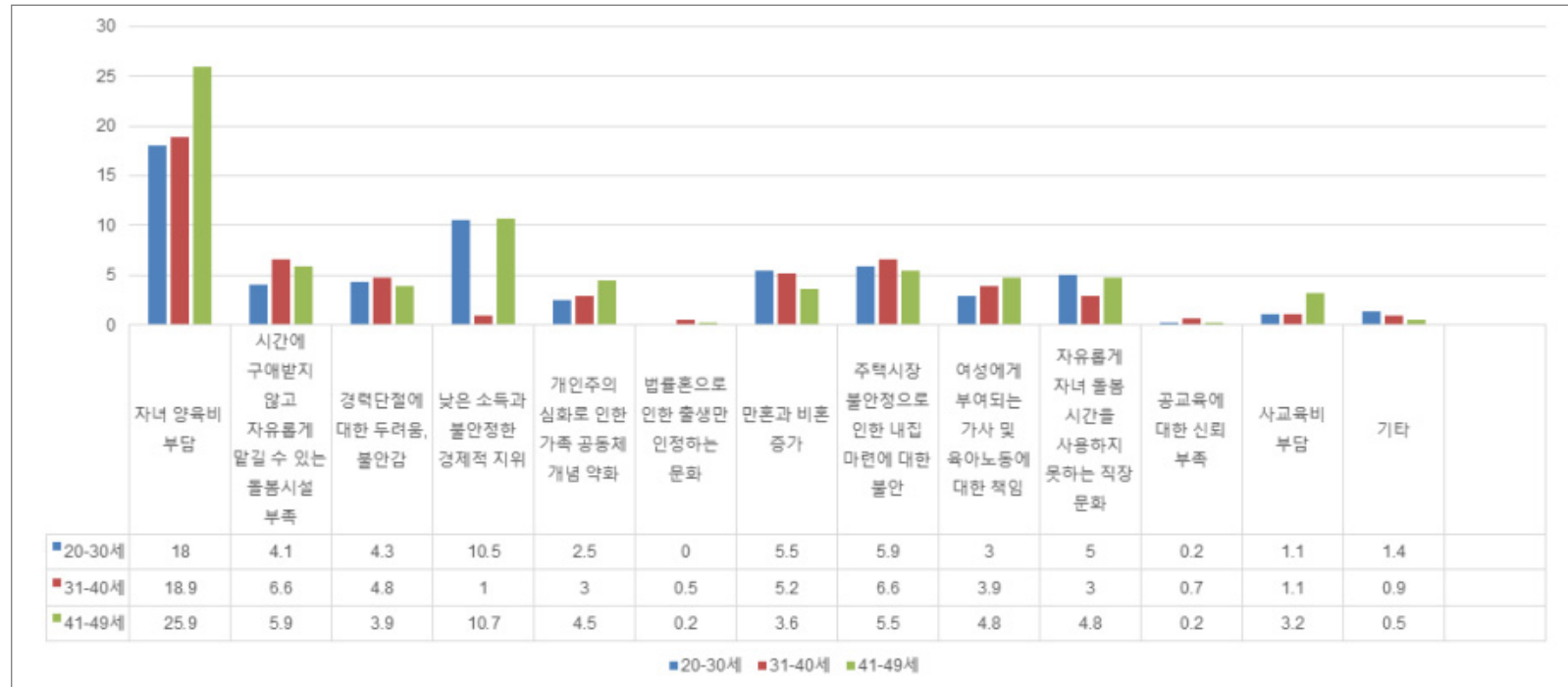
- 성별 차이를 보면, 남성은 자녀 양육비 부담(35.7%), 낮은 소득·경제적 지위(20.0%)를 주요 원인으로 인식하였고, 여성은 자녀 양육비 부담(27.0%)이 가장 크지만, 동시에 주택시장 불안(10.0%), 돌봄 서비스 부족(9.1%) 등 생활 밀착형 원인을 더 강하게 인식하였음. 즉, 남성은 구조적·경제적 측면을 더 강조하는 반면, 여성은 양육과 주거, 돌봄 환경 등 구체적인 생활 기반을 중시하는 차이를 보였음
- 연령별로 보면, 20~30세는 자녀 양육비 부담(18.0%), 낮은 소득·불안정한 지위(11.1%), 주택시장 불안(5.0%)을 주요 요인으로 지목하였는데, 이는 경제적 기반이 취약하고 주거 불안정성이 높은 세대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됨
- 또한 31~40세는 자녀 양육비 부담(18.9%)과 낮은 소득(6.6%) 외에 돌봄 서비스 부족(8.2%)과 사회적 분위기(5.2%)를 지적. 본격적인 결혼·양육기 세대의 특성이 드러남. 41~49세는 자녀 양육비 부담(25.9%), 낮은 소득(8.4%), 돌봄 서비스 부족(3.6%) 등을 선택. 경제적 부담과 돌봄 공백 문제를 동시에 인식하였음. 마지막으로 50세 이상에서는 자녀 양육비 부담(16.8%)이 여전히 가장 높으나, 낮은 소득(5.0%)과 돌봄 부족(3.4%) 비중은 낮았음. 이는 나이가 많을수록 직접적 부담보다는 사회적 구조 문제를 더 크게 보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해석됨
- 혼인상태에 따라 살펴보면, 미혼자는 자녀 양육비 부담(25.7%)과 낮은 소득(7.5%)을 크게 인식했으며, 주택 불안(4.3%)과 돌봄 서비스 부족(5.4%)도 주목. 즉, 결혼을 앞둔 세대에서는 ‘경제적·주거적 불안’이 주요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였음. 반면, 기혼자(사실혼 포함)는 자녀 양육비 부담(37.0%)이 절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낮은 소득(8.3%)과 주택 불안(3.9%) 등이 뒤를 이었음. 실제 양육 경험을 통해 자녀 양육비 부담이 가장 큰 현실적 문제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이상의 결과를 보면, 충남도에서 저출산 현상의 원인은 크게 경제적 부담, 주거 불안, 돌봄 공백으로 요약할 수 있음. 특히 자녀 양육비 부담은 모든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가장 큰 문제로 꼽혔음
- 다만, 미혼자는 결혼·출산을 앞둔 단계에서 주거·경제적 불안을, 기혼자는 실제 양육 과정에서의 양육비와 돌봄 부족을 더 크게 인식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나타났음. 또한, 여성은 주거·돌봄 같은 생활 기반 요인에 더 민감하고, 남성은 구조적·경제적 요인에 더 집중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음



[그림 4-2] 저출산 현상의 원인에 대한 인식(다중응답)



[그림 4-3] 성별에 따른 저출산 현상의 원인에 대한 인식(다중응답)



[그림 4-4] 연령에 따른 저출산 현상의 원인에 대한 인식(다중응답)

[표 4-7] 저출산 현상의 원인에 대한 인식(다중응답)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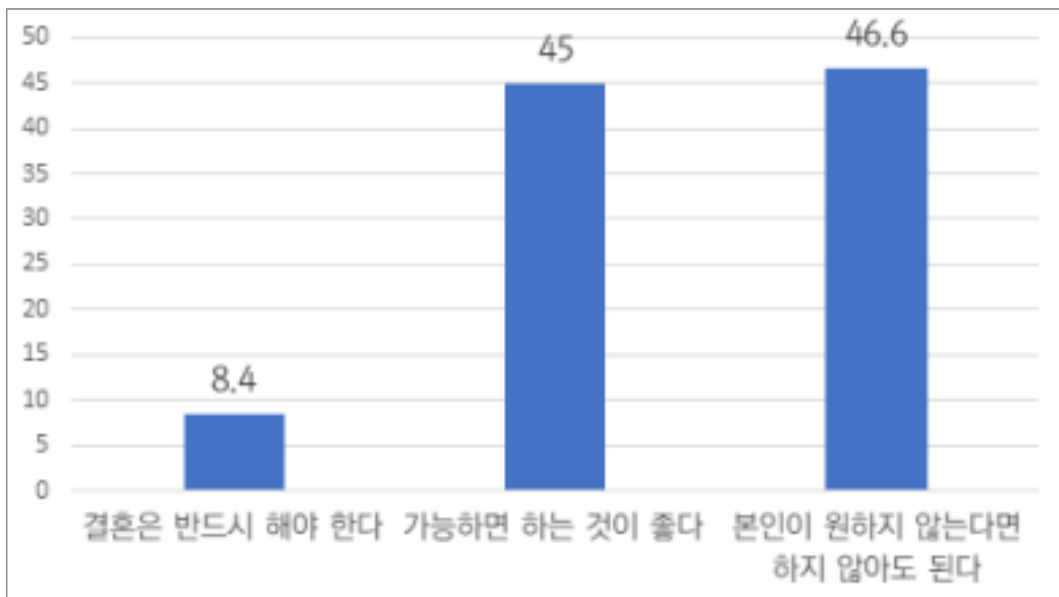
		사례수	자녀 양육비 부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말길 수 있는 돌봄시설 부족	경력 단절에 대한 두려움, 불안감	낮은 소득과 불안정한 경제적 지위	개인주의 심화로 인한 가족 공동체 개념 약화	법률혼 으로 인한 출생만 인정하는 문화	만혼과 비혼 증가	주택시장 불안정 으로 인한 내집 마련에 대한 불안	여성에게 부여되는 가사 및 육아 노동에 대한 책임	자유롭게 자녀 돌봄 시간을 사용하지 못하는 직장 문화	공교육에 대한 신뢰 부족	사교육비 부담	기타
전체		(440)	62.7	16.6	13.0	31.1	10.0	0.7	14.3	18.0	11.6	12.7	1.1	5.5	2.7
성 별	남성	244	35.7	8.4	5.2	20.0	5.9	0.7	8.4	14.1	1.6	5.7	0.5	2.7	2.0
	여성	196	27.0	8.2	7.7	11.1	4.1	-	5.9	3.9	10.0	7.0	0.7	2.7	0.7
연 령	20-30세	135	18.0	4.1	4.3	10.5	2.5	-	5.5	5.9	3.0	5.0	0.2	1.1	1.4
	31-40세	143	18.9	6.6	4.8	1.0	3.0	0.5	5.2	6.6	3.9	3.0	0.7	1.1	0.9
	41-49세	162	25.9	5.9	3.9	10.7	4.5	0.2	3.6	5.5	4.8	4.8	0.2	3.2	0.5
혼 인 여 부	미혼	203	25.5	6.4	4.8	15.4	6.2	0.5	8.7	10.3	5.1	5.7	0.5	2.5	1.6
	기혼 (사실혼 포함)	232	37.0	10.1	8.3	15.6	3.9	0.2	5.7	7.6	6.7	6.9	0.7	3.0	0.9

(3) 결혼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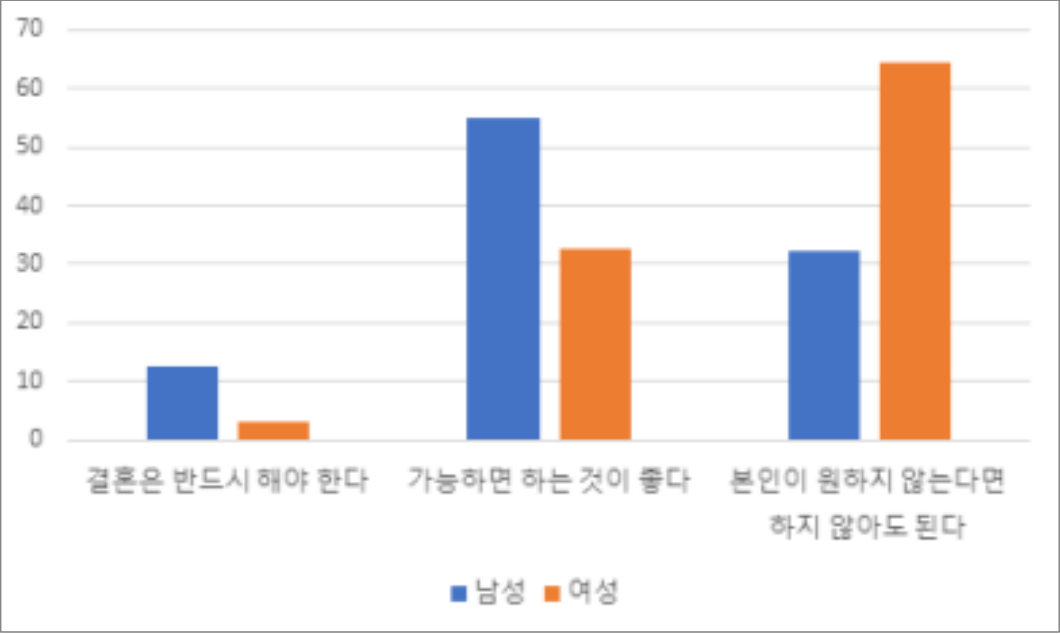
- 조사 결과, 결혼에 대해 “반드시 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의 8.4%에 불과한 반면, “가능하면 하는 것이 좋다”라는 응답은 45.0%,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응답은 46.6%로 나타났다. 이는 결혼을 개인의 선택 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뚜렷하며, 전통적 의미에서의 결혼 의무 인식은 약화되고 있음을 시사함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반드시 해야 한다’(12.7%)가 여성(3.1%)보다 높은 반면, 여성은 ‘하지 않아도 된다’(64.3%)라는 응답이 남성(31.9%)보다 훨씬 높았음. 이는 여성들이 결혼을 개인적 선택의 문제로 보는 경향이 강하며, 남성은 여전히 결혼을 사회적 의무나 전통적 제도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을 보여줌
- 연령별로는 20~30세에서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응답이 41.5%, 31~40세에서는 49.7%, 41~49세에서는 46.9%, 50세 이상에서는 52.2%로 나타나, 연령이 높아질수록 결혼을 선택 사항으로 보는 비율이 다소 높아지는 양상이 나타났다. 반면,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응답은 전 연령대에서 7~9% 수준에 머물렀다. 이는 세대 간 차이가 크지 않지만, 젊은 층일수록 결혼 제도에 대해 상대적으로 유보적인 태도를 가진다는 점을 시사함
- 혼인여부에 따라 살펴보면, 기혼자(사실혼 포함) 집단에서는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응답이 9.9%로 미혼자(5.9%)보다 높았으며, ‘가능하면 하는 것이 좋다’라는 응답도 기혼자 44.4%로 미혼자 45.8%와 큰 차이가 없었음. 그러나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응답은 미혼자가 48.3%로, 기혼자(45.7%)보다 다소 높았음. 이는 실제 결혼 경험 여부가 결혼에 대한 가치관 차이를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음을 의미함
- 자녀 유무에 따른 차이를 보면,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응답은 크게 높지 않았음. 자녀가 없는 경우 8.2%, 1명 13.4%, 2명 5.4%, 3명 이상 4.2% 수준이었음. 자녀 수와 관계없이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응답은 일정하게 나타났으며, 특히 자녀가 2명인 경우에도 41.1%가 결혼을 필수로 보지 않았음. 이는 출산 경험이 결혼 가치관에 절대적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줌
- 직업에 따라서는 정규직 응답자의 경우 ‘하지 않아도 된다’ 43.3%, 비정규직 61.3%, 자영업 45.8%, 전업주부 52.6%로 나타났다. 특히 비정규직 집단에서 결혼을 의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음. 이는 고용 안정성 여부가 결혼 가치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줌
- 학력 및 소득에 따라서는 고졸 이하 10.3%, 대졸 6.6%, 대학원 이상 11.4%가 결혼을 ‘반

드시 해야 한다'고 보았음. 그러나 전체적으로 학력 수준과 무관하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응답이 절반 가까이 차지하였음. 또한 월평균 소득이 높아질수록 결혼을 선택 사항으로 보는 경향이 유지되었음. 소득 150만원 이하 집단에서는 '하지 않아도 된다' 51.0%, 501만원 이상에서는 45.4%로 나타났음. 즉, 소득이 높다고 해서 결혼을 더 의무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은 확인되지 않았음

- 이상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충남도민은 결혼은 더 이상 사회적 의무나 필수 제도가 아니라 개인의 선택 사항으로 인식되고 있었음. 남성은 여전히 결혼을 전통적 의미로 보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나, 여성과 청년층, 비정규직 집단에서는 결혼을 선택적 제도로 보는 경향이 두드러졌음. 이러한 인식 변화는 저출산·비혼화 경향과도 밀접히 연결되며, 정책적으로는 결혼 자체를 장려하기보다 결혼과 비혼을 모두 포용하는 사회적 제도 개선과 삶의 질을 높이는 지원 정책이 요구됨을 시사함



[그림 4-5] 결혼에 대한 인식(전체)



[그림 4-6] 성별에 따른 결혼에 대한 인식

[표 4-8] 결혼에 대한 인식

(단위: 명/%)

		사례수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	가능하면 하는 것이 좋다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면 하지 않아도 된다
전체		(440)	8.4	45.0	46.6
성별	남성	(244)	12.7	54.9	32.4
	여성	(196)	3.1	32.7	64.3
연령	20-30세	135	9.6	48.9	41.5
	31-40세	143	7.0	43.4	49.7
	41-49세	162	8.4	45.0	46.6
혼인 여부	미혼	203	5.9	45.8	48.3
	기혼 (사실혼 포함)	232	9.9	44.4	45.7
자녀 유무	없음	255	8.2	42.0	49.8
	임신중	5	20.0	60.0	20.0

		사례수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	가능하면 하는 것이 좋다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면 하지 않아도 된다
	1명	63	14.3	41.3	44.4
	2명	93	5.4	50.5	44.1
	3명 이상	24	4.2	62.5	33.3
직업	정규직	250	9.2	47.6	43.2
	비정규직	62	4.8	30.6	64.5
	자영업	24	12.5	50.0	37.5
	전업주부	38	5.3	42.1	52.6
	학생	43	11.6	55.8	32.6
	기타	23	4.3	34.8	60.9
최종 학력	고졸	136	11.0	43.4	45.6
	대졸	269	6.3	45.0	48.7
	대학원 이상	35	14.3	51.4	34.3
월평균 소득	150만원 이하	51	7.8	41.2	51.0
	151-300만원 이하	114	7.0	41.2	51.8
	301-500만원 이하	156	10.9	46.8	42.3
	501만원 이상	119	6.7	47.9	45.4

(4) 출산에 대한 인식

- 출산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440명 중 “출산은 가능한 한 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한 비율은 48.6%로 가장 높았으며,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면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응답은 41.6%, “출산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응답은 9.8%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출산을 권장하되 강제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며,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는 분위기가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함
- 성별에 따라 보면 남성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응답이 13.9%로 여성(4.6%)보다 두 배 이상 높았으며, 여성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응답이 55.6%로 남성(27.5%)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음. 이는 출산에 따른 신체적·사회적 부담을 직접 경험하는 여성들의 현실 인식이 강하게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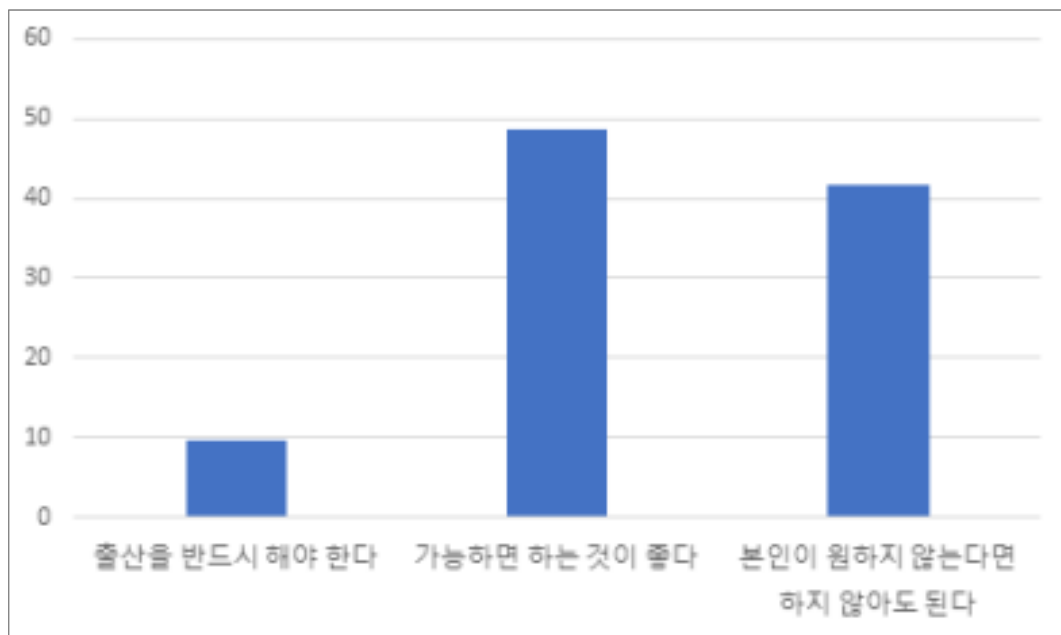
- 연령별로는 ‘가능하면 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전연령에서 높게 나타났지만,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면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응답도 31-40세 연령이 다른 연령보다 높았음
- 자녀가 없는 응답자 중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응답은 45.9%, 자녀가 1명 있는 경우는 31.7%, 2명은 33.6%, 3명 이상은 33.3%로, 자녀 수가 많을수록 출산을 개인 선택으로 간주하는 비율이 다소 낮아졌음. 다만 전체적으로 강제보다는 권장 혹은 선택으로 여기는 태도가 우세했음
- 고졸 이하 학력자의 경우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응답이 33.8%, 대졸 이상은 43.5%, 대학원 이상은 22.9%로 나타났으며, 학력이 높을수록 출산의 ‘선택 가능성’을 지지하거나 사회적 책무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혼재됨을 보여줌
- 월평균 소득별로는 150만 원 이하 응답자의 52.9%가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면 하지 않아도 된다’고 응답하며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음. 반면 501만 원 이상 소득자는 38.7%로 상대적으로 낮았음. 이는 경제적 여건이 출산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뒷받침하는 결과임

[표 4-9] 출산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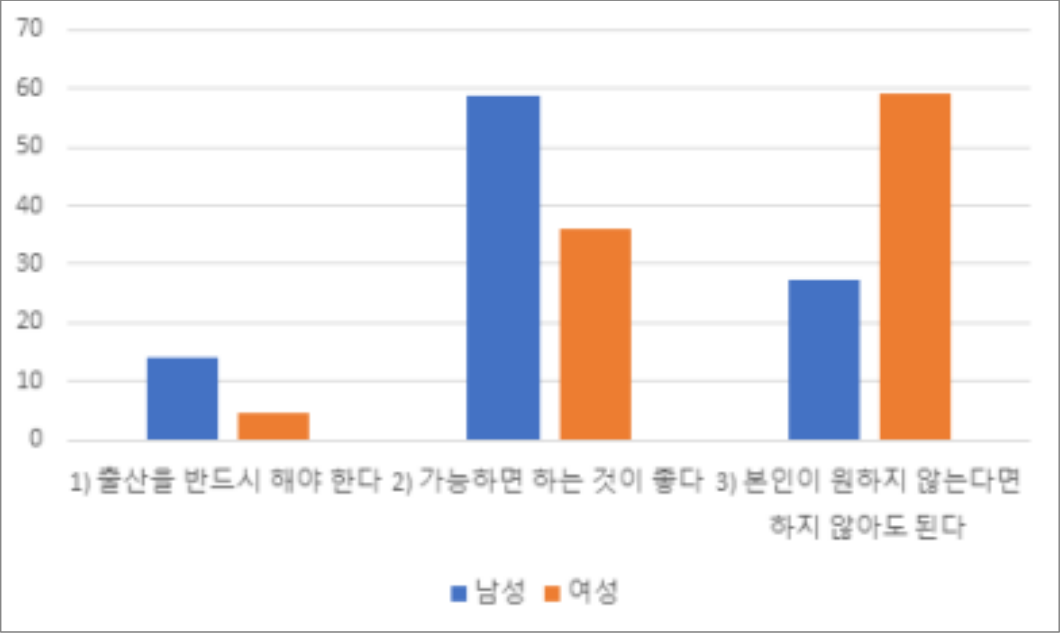
(단위: 명/%)

		사례수	1) 출산을 반드시 해야 한다	2) 가능하면 하는 것이 좋다	3)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면 하지 아도 된다
전체		(440)	9.8	48.6	41.6
성별	남성	(244)	13.9	58.6	27.5
	여성	(196)	4.6	36.2	59.2
연령	20-30세	135	8.9	46.7	44.4
	31-40세	143	9.8	43.4	46.9
	41-49세	162	10.5	54.9	34.6
혼인 상태	미혼	(203)	6.9	47.8	45.3
	결혼	(213)	12.7	50.2	37.1
	이혼	(19)	0.0	42.1	57.9
	동거	(5)	40.0	40.0	20.0
자녀 유무	없음	(255)	7.8	45.5	46.7
	임신중	(5)	20.0	40.0	4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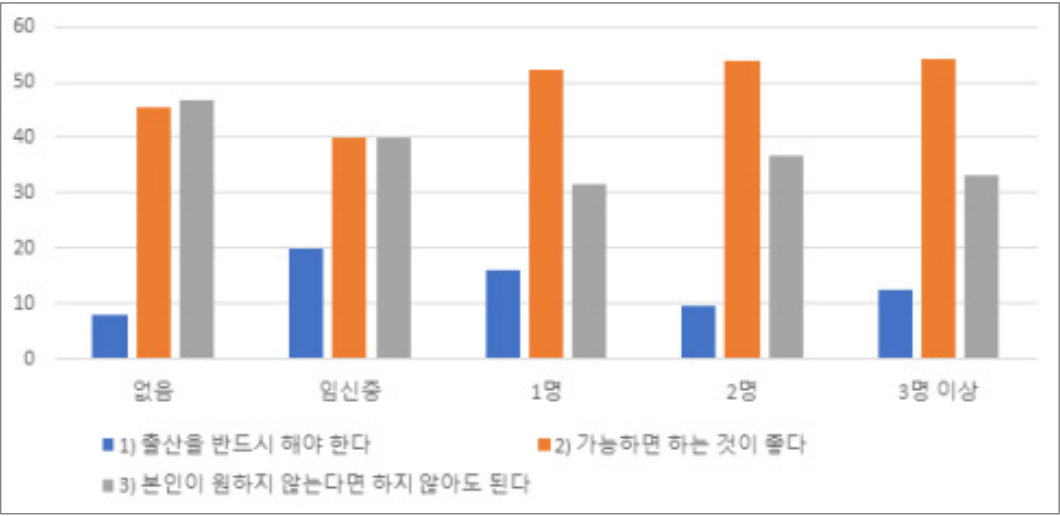
		사례수	1) 출산을 반드시 해야 한다	2) 가능하면 하는 것이 좋다	3)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면 하지 않아도 된다
	1명	(63)	15.9	52.4	31.7
	2명	(93)	9.7	53.8	36.6
	3명 이상	(24)	12.5	54.2	33.3
최종 학력	고졸	(136)	13.2	43.4	43.4
	대졸	(269)	7.1	49.8	43.1
	대학원 이상	(35)	17.1	60.0	22.9
월평균 소득	150만원 이하	51	3.9	43.1	52.9
	151-300만원 이하	114	5.3	50.0	44.7
	301-500만원 이하	156	14.1	48.1	37.8
	501만원 이상	119	10.9	50.4	3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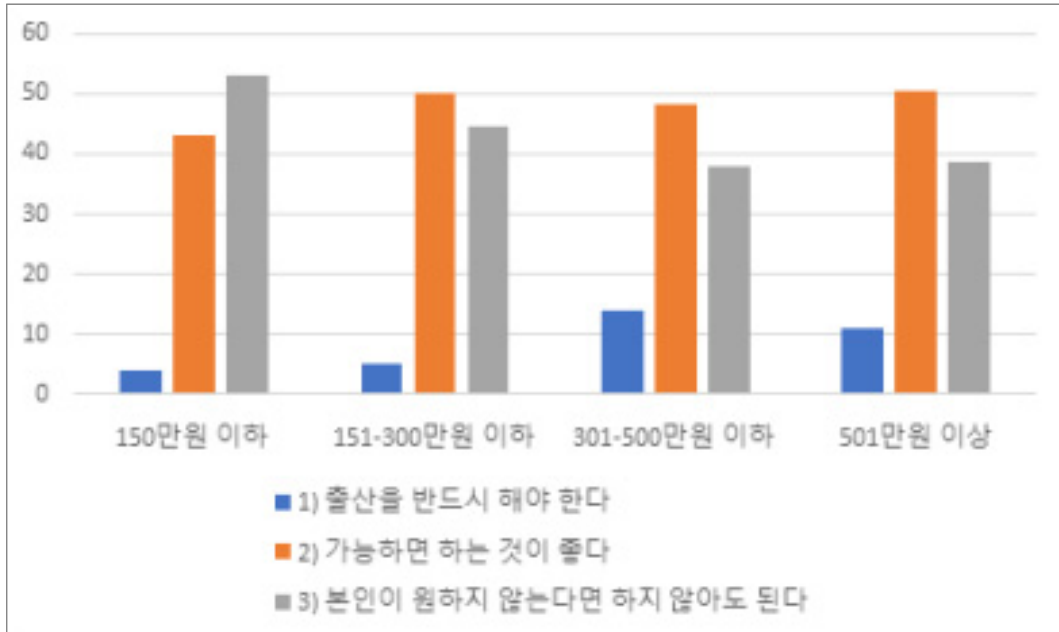
[그림 4-7] 출산에 대한 인식(전체)



[그림 4-8] 성별에 따른 출산 인식



[그림 4-9] 자녀 수에 따른 출산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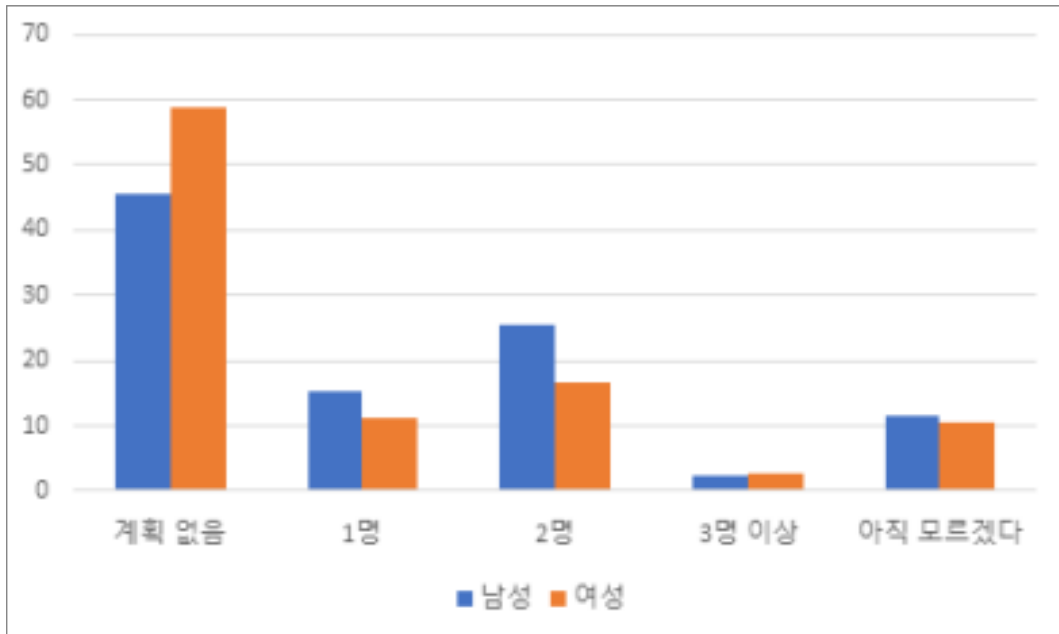
[그림 4-10] 소득에 따른 출산 인식

-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1.4%가 “출산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반면 1명(13.4%), 2명(21.6%), 3명 이상(2.5%)을 계획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음. 또한 “아직 모르겠다”라는 응답도 11.1%에 달해, 상당수가 출산 여부에 대해 불확실한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이는 충남도민의 출산 의향이 매우 약화되고 있으며, ‘무계획’ 또는 ‘불확실’ 집단이 주를 이루는 특징을 보여줌
- 남성의 경우 출산 계획 없음이 45.5%, 2명 계획이 25.4%로 여정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었음. 여성은 출산 계획 없음이 **58.7%**로 남성보다 확연히 높았으며, 2명 계획(16.8%)은 남성보다 낮았음. 여성의 경우 현실적으로 출산·양육 부담을 직접 체감하기 때문에 출산 계획 자체를 회피하거나 보류하는 비율이 더 큰 것으로 해석됨
- 20~30세는 출산 계획 없음이 28.9%로 낮았으나, ‘아직 모르겠다’ 응답이 10.4%로 높았음. 2명 계획이 44.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 이 연령대에서는 여전히 출산 가능성이 가장 크게 남아있음을 알 수 있음. 31~40세에서는 출산 계획 없음이 45.5%, 2명 계획이 38.5%로 나타남. 41~49세는 출산 계획 없음이 75.3%로 압도적으로 높아 사실상 추가 출산 의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 50세 이상은 93.0%가 출산 계획이 없다고 답해 생애주기적 특성이 그대로 반영되었음. 연령이 높아질수록 출산 의향이 급격히 낮아지며,

20~30대만이 일정 부분 출산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미혼자의 경우 출산 계획 없음이 34.5%로 낮았고, 2명 계획(33.5%) 응답이 높았지만 “아직 모르겠다”는 비율이 16.3%로 높아 불확실성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남. 기혼자(이혼, 사실혼 포함)는 출산 계획 없음이 66.8%로 높았으며, 2명 계획은 20.7%로 미혼자보다 낮았음. 결혼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미혼자는 잠재적 가능성을 열어두는 반면, 기혼자는 이미 출산 경험과 현실적 부담을 통해 계획을 제한하는 경향을 보였음
- 자녀 없음 응답자는 출산 계획 없음이 53.3%였으며, 2명 계획이 23.1%로 가장 많았음. 자녀 1명인 경우 출산 계획 없음이 60.3%, 2명 계획이 23.8%로 나타났음. 자녀 2명 이상에서는 출산 계획 없음이 95.8%로 절대적으로 높았음
- 정규직의 출산 계획 없음은 50.4%, 2명 계획은 22.8%로 평균적이었음. 비정규직은 출산 계획 없음이 53.2%, 2명 계획은 14.5%로 더 낮았음. 전업주부의 경우 출산 계획 없음이 73.7%로 높아, 현실적 양육 부담이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학생은 출산 계획 없음이 27.9%로 낮았으며, 2명 계획이 48.8%로 가장 높았음. 이는 미래 계획 차원에서 잠재적 출산 가능성이 높게 반영된 것으로 보임
- 충남도민의 출산 계획은 전반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며, 특히 여성, 기혼자, 다자녀 가정, 40세 이상 집단에서 출산 의향이 거의 사라진 상태임. 반면, 20~30대, 미혼자, 학생 집단은 아직 출산 잠재력이 남아 있으며, 이들의 불확실성을 정책적으로 해소한다면 출산율 제고에 일정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따라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먼저 청년층의 주거·일자리 안정화를 통해 잠재적 출산 계획을 실현 가능한 선택지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기혼·다자녀 가정은 출산 의향이 거의 없는 만큼, 추가 출산 장려보다 양육 지원과 삶의 질 개선 정책이 우선되어야 함. 또한 여성의 출산 기피 요인을 줄이기 위해 돌봄·경력 단절 문제 해소가 핵심 과제로 제시됨

(단위: %)



[그림 4-11] 자녀출산(추가출산) 계획

[표 4-10] 자녀출산(추가출산) 계획

(단위: 명/%)

구분		사례수	계획 없음	1명	2명	3명 이상	아직 모르겠다
전체		(440)	51.4	13.4	21.6	2.5	11.1
성별	남성	(244)	45.5	15.2	25.4	2.5	11.5
	여성	(196)	58.7	11.2	16.8	2.6	10.7
연령	만20~30세	135	28.9	14.1	44.4	2.2	10.4
	만31~40세	143	45.5	17.5	18.2	3.5	15.4
	만41~49세	162	75.3	9.3	5.6	1.9	8.0
혼인 여부	미혼	203	34.5	13.3	33.5	2.5	16.3
	기혼 (이혼,사실혼 포함)	232	66.8	13.8	9.9	2.6	6.9
자녀 유무	없음	(255)	33.3	14.9	33.3	2.7	15.7
	임신중	(5)	0.0	60.0	40.0	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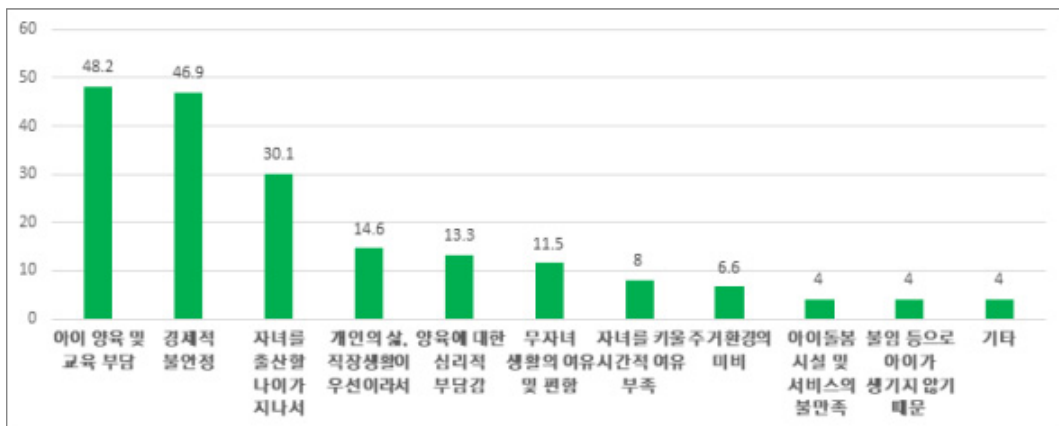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계획 없음	1명	2명	3명 이상	아직 모르겠다
	1명	(63)	60.3	20.6	6.3	3.2	9.5
	2명	(93)	86.0	5.4	4.3	1.1	3.2
	3명 이상	(24)	95.8	0.0	0.0	4.2	0.0
직업	정규직	(250)	50.4	14.8	22.8	2.8	9.2
	비정규직	(62)	53.2	12.9	14.5	1.6	17.7
	자영업	(24)	54.2	12.5	16.7	4.2	12.5
	전업주부	(38)	73.7	10.5	5.3	2.6	7.9
	학생	(43)	27.9	11.6	48.8	2.3	9.3
	기타	(23)	60.9	8.7	8.7	0.0	21.7

- 자녀출산을 계획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만, 출산을 계획하지 않는 이유를 질문하였음. 그 결과, 출산 계획이 없는 응답자(226명)의 주요 사유는 ‘양육 및 교육 비용 부담(48.2%)’과 ‘경제적 불안정(46.9%)’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음. 그 외에도 출산·양육 적령기 경과(30.1%), 개인의 삶과 직장생활의 조화 어려움(14.6%), 양육에 대한 심리적·신체적 부담감(13.3%) 등이 뒤를 이었음. 반면, 아이 돌봄 시설 및 서비스의 불완전(4.0%), 주거환경의 미비(6.6%), 자녀를 키울 사회적 여건 부족(8.0%)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응답률을 보였음. 이는 경제적 요인이 저출산의 근본 원인으로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줌
- 남성은 ‘경제적 불안정’(55.9%)과 ‘양육·교육비 부담’(52.3%)이 높았고, 여성은 ‘양육·교육비 부담’(44.3%)과 함께 ‘출산 적령기 지남’(40.0%), ‘양육에 대한 심리적·신체적 부담’(17.6%)을 더 크게 지적했음. 이는 남성은 경제적 구조 요인에 집중하는 반면, 여성은 신체적·시간적 제약과 직접적인 양육 부담까지 포함해 복합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됨
- 20~30세는 경제적 불안정(51.3%)과 양육·교육비 부담(46.2%)이 가장 크고, ‘아직 젊다’는 불확실성이 반영되어 기타 응답도 일부 존재했음. 31~40세는 양육·교육비 부담(50.8%)과 경제적 불안정(47.7%), 출산 적령기 경과(27.7%)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함. 41~49세는 출산 적령기 지남(51.2%)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양육·교육비 부담(47.8%)과 경제적 불안정(45.0%)이 뒤를 이었음. 즉, 연령이 높아질수록 출산 포기 요인이 ‘경제적 부담’에서 ‘출산 적령기 경과’로 전환되는 모습이 나타남
- 미혼자는 경제적 불안정(60.0%)과 양육·교육비 부담(34.3%)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인의 삶·직장생활 조화 어려움’(28.6%)과 ‘양육의 부담’(17.1%)을 높게 지적했음. 기혼자(사실혼 포함)는 양육·교육비 부담(54.8%)과 경제적 불안정(40.6%), 출산 적령기 지남(38.7%)이 두드러졌음. 미혼자는 미래 불안과 자기 삶의 제약을 이유로, 기혼자는 현실적 경제와 시기적 문제를 이유로 출산을 기피하는 차이가 있었음

- 자녀 없음: 경제적 불안정(57.4%)과 양육·교육비 부담(51.6%)이 가장 큰 원인이었음. 자녀 1명 이상은 이미 양육 경험이 있는 경우, 경제적 부담과 함께 ‘양육 과정의 어려움’을 이유로 추가 출산을 기피하는 경향이 두드러졌음. 특히 2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 ‘출산 적령기 경과’가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났음
- 충남사회에서 출산 기피 이유는 크게 경제적 요인(양육·교육비, 경제 불안정)과 생애주기 요인(출산 적령기 경과)으로 압축됨. 남성은 구조적·경제적 요인에 집중하는 반면, 여성은 육아와 신체적 부담, 삶의 균형 문제까지 포함해 보다 복합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음. 연령이 높아질수록 ‘출산 시기 문제’가 더 부각되며, 자녀 유무에 따라서도 인식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남

(단위: %)



[그림 4-12] 자녀출산(추가출산) 위험요인

[표 4-11] 자녀출산(추가출산) 위험 요인

(단위: 명/%)

		사례수	아이 양육 및 교육 부담	경제적 불안정	자녀를 출산할 나이가 지나서	개인의 삶, 직장 생활이 우선 이라서	양육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	무자녀 생활의 여유 및 편함	자녀를 키울 시간적 여유 부족	주거환경 의 미비	아이돌봄 시설 및 서비스의 불만족	불임 등으로 아이가 생기지 않기 때문	기타
전체		(226)	48.2	46.9	30.1	14.6	13.3	11.5	8.0	6.6	4.0	4.0	4.0
성별	남성	(111)	52.3	55.9	19.8	11.7	9.9	9.9	13.5	10.8	3.6	3.6	0.9
	여성	(115)	44.3	38.3	40.0	17.4	16.5	13.0	2.6	2.6	4.3	4.3	7.0
연령	20세-30세	39	35.9	66.7	-	28.2	23.1	20.5	5.1	12.8	2.6	-	2.6
	31세-40세	65	50.8	47.7	7.7	20.0	12.3	16.9	9.2	9.2	7.7	4.6	6.2
	41세-49세	122	50.8	40.2	51.6	7.4	10.7	5.7	8.2	3.3	2.5	4.9	3.3
결혼 여부	미혼	70	34.3	60.0	11.4	28.6	17.1	24.3	2.9	11.4	1.4	0.0	4.3
	기혼 (이혼,사실혼포함)	155	54.8	40.6	38.7	8.4	11.0	5.8	10.3	4.5	5.2	5.8	3.9
자녀 유무	없음	(85)	34.1	57.6	11.8	28.2	17.6	23.5	2.4	10.6	1.2	4.7	3.5
	1명	(38)	68.4	47.4	21.1	5.3	15.8	7.9	13.2	2.6	7.9	2.6	2.6
	2명	(80)	53.8	38.8	51.3	6.3	6.3	1.3	8.8	5.0	6.3	5.0	5.0
	3명 이상	(23)	47.8	34.8	39.1	8.7	17.4	8.7	17.4	4.3	0.0	0.0	4.3

(5)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인식

-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중 ‘대체로 그렇다’(55.9%)와 ‘매우 그렇다’(22.5%)라고 응답한 비율이 78.4%에 달해,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해 비교적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혀 그렇지 않다’(5.5%)와 ‘별로 그렇지 않다’(16.1%)는 비수용층은 21.6% 수준으로, 대체로 긍정적 태도가 우세하다고 볼 수 있음
-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남성 응답자의 79.4%, 여성 응답자의 76.5%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으며, 남성이 다소 더 수용적인 경향을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만 26~30세(82.1%)가 가장 높은 수용 태도를 보였으며, 만 41~49세(81.5%), 만 31~35세(78.1%), 만 36~40세(77.9%)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20~25세 청년층은 74.2%로 비교적 낮은 수용도를 보였으며, 이는 아직 결혼·출산 경험이 적고, 가족 구성에 대한 인식이 형성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으로 해석됨
- 학력별로는 대졸자의 긍정 응답률이 81.6%로 가장 높았으며, 고졸 이하(71.3%), 대학원 이상(74.3%) 순으로 나타나 고학력일수록 가족 다양성에 대해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확인 되었음
- 결혼 여부에 따른 응답 차이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혼 및 동거 응답자의 경우 100%가 ‘대체로’ 혹은 ‘매우’ 긍정적으로 응답해, 다양한 가족 구조에 대해 가장 높은 수용 태도를 보였다. 미혼자와 기혼자의 경우도 각각 77.8%, 81.2%로 비교적 높은 수용률을 보였지만, 동거·이혼 경험자의 절대적 수용태도와는 차이가 존재함

[표 4-12] 다양한 형태(사실혼 포함)의 혼인관계에 대한 의견

(단위: 명/%)

구분		사례수	매우 부정적이다	대체로 부정적이다	대체로 긍정적이다	매우 긍정적이다
전체		440	5.5	16.1	55.9	22.5
성별	남성	244	6.6	14.8	55.3	23.4
	여성	196	4.1	17.9	56.6	21.4
학력	고졸	136	5.1	16.2	52.9	25.7
	대졸	269	5.9	14.9	58.4	20.8
	대학원 이상	35	2.9	25.7	48.6	22.9
연령	20~30세	135	3.7	17.8	54.1	24.4
	31~40세	143	8.4	16.8	53.8	21.0

구분		사례수	매우 부정적이다	대체로 부정적이다	대체로 긍정적이다	매우 긍정적이다
결혼 여부	41~49세	162	4.3	14.2	59.3	22.2
	미혼	203	3.4	17.7	55.2	23.6
	기혼 (사실혼 포함)	232	6.9	14.7	57.3	21.1

(6) 동거와 프랑스 팩스제도에 대한 인식

- 응답자들은 전반적으로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전통적 관점보다는 개인 선택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음. 결혼은 법적 제도라는 응답이 35.7%에 그쳤으며, 반대로 결혼 의사가 없어도 동거는 괜찮다(67.5%), 결혼 전에 함께 살아보는 것은 바람직하다(78.2%)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음. 또한 결혼을 잘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은 인생에서 매우 중요하다(79.5%)라는 항목도 높아, 결혼 자체를 의무로 보지는 않지만 삶의 질 향상 수단으로서의 결혼 가치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인식됨을 알 수 있음
- 남성은 '결혼은 반드시 제도'라는 인식이 34.4%였고, 동거 수용(69.3%), 사전 동거 긍정(78.7%)이 높았음. 특히 '결혼은 인생에서 매우 중요하다'(83.2%)라는 응답이 여성(75.0%)보다 높아, 결혼을 통한 행복의 가치를 더 중시하는 경향을 보였음. 여성은 '결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응답(64.3%)이 남성보다 높았고, '대체로 결혼한 사람이 더 행복하다'는 인식은 54.1%로 남성(75.8%)보다 낮았음. 즉, 여성은 결혼을 필수 제도나 행복의 절대 조건으로 보지 않는 경향이 두드러졌음
- 연령별로는 20~30세대는 결혼을 법적 제도로 보는 응답이 33.3%로 가장 낮았으며, 사전 동거 긍정(85.9%)이 가장 높았음. 31~40세대는 결혼 전 동거(78.4%)와 결혼은 중요하다(76.3%)가 동시에 높았음. 41~49세대와 50세 이상은 결혼 제도로서의 인식(36~37%)이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여전히 절반 이상은 동거와 사전 동거를 수용했음. 연령이 높을수록 전통적 결혼 인식이 일부 남아있지만, 세대 전반에서 동거 수용도가 높다는 점이 특징임
- 혼인여부별로는 미혼자는 결혼 제도 인식(36.5%)보다 동거 수용(75.4%)과 사전 동거 긍정(82.8%)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았음. 기혼자는 결혼 제도 인식(35.4%)과 동거 수용(65.5%)이 병행되었지만, 결혼은 인생에서 중요하다(83.1%)라는 인식이 매우 강했음. 즉, 기혼자는 제도와 행복 가치로서의 결혼을 중시하지만, 미혼자는 동거와 사전 동거를 더 수용하는 개방적 태도를 보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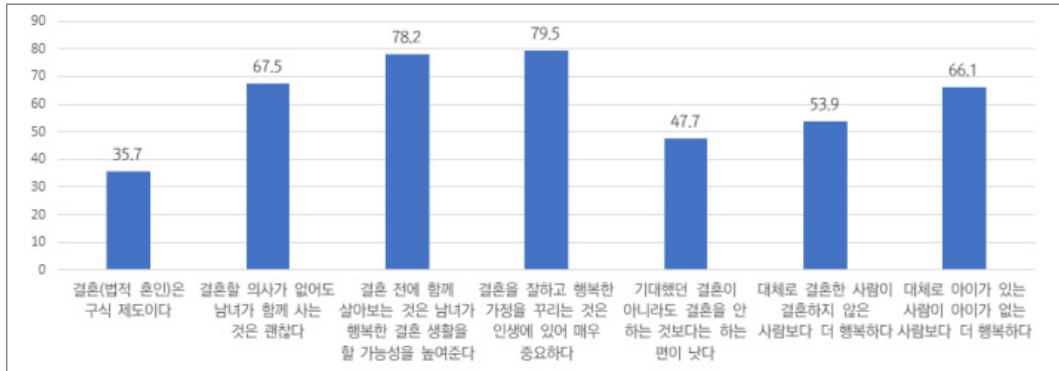
- 자녀 유무에 따라 살펴보면, 자녀가 없는 응답자는 결혼 전 동거(83.1%)와 결혼 중요성(74.5%)이 동시에 높았음. 자녀가 1명 이상인 집단에서는 결혼 중요성이 80% 이상 높았으며, 특히 1명(88.9%)과 2명(87.1%) 집단은 결혼을 매우 중요한 가치로 인식했음. 즉, 자녀가 있는 경우 결혼을 통한 안정성과 중요성을 강하게 인식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음
- 이상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충남도민은 전반적으로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전통적 인식은 약화되었으나, 결혼을 통한 행복과 안정의 가치는 여전히 높게 평가되고 있었음. 특히 남성과 기혼자, 자녀가 있는 집단은 결혼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여성과 미혼자, 젊은 세대는 동거와 사전 동거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보였음. 이는 향후 가족 정책이 결혼 장려 일변도보다는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표 4-13] 결혼과 동거에 대한 인식(대체로 그렇다+매우그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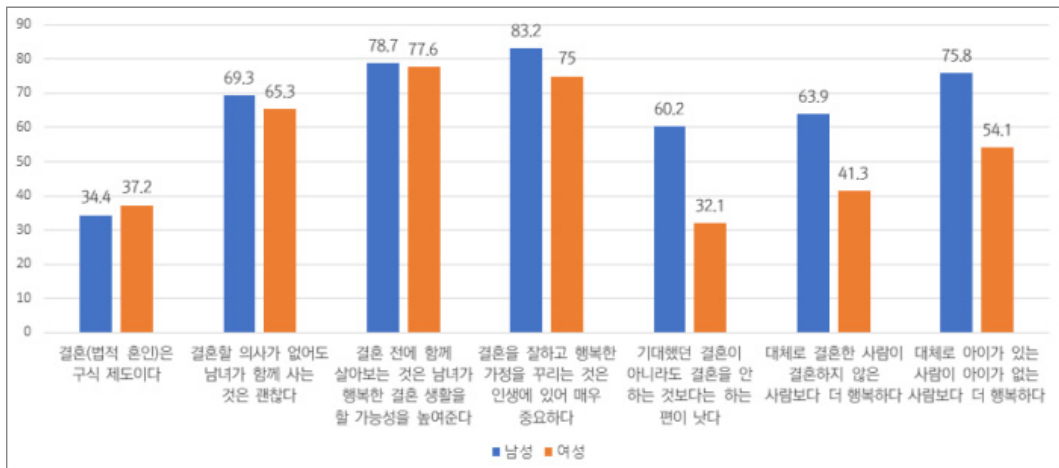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사례수	결혼(법적 혼인)은 구식 제도이다	결혼할 의사가 없어도 남녀가 함께 사는 것은 괜찮다	결혼 전에 함께 살아보는 것은 남녀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가능성을 높여준다	결혼을 잘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은 인생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기대했던 결혼이 아니라도 결혼을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편이 낫다	대체로 결혼한 사람이 결혼하지 않은 사람보다 더 행복하다	대체로 아이가 있는 사람이 아이가 없는 사람보다 더 행복하다
전체		(440)	35.7	67.5	78.2	79.5	47.7	53.9	66.1
성별	남성	(244)	34.4	69.3	78.7	83.2	60.2	63.9	75.8
	여성	(196)	37.2	65.3	77.6	75.0	32.1	41.3	54.1
연령	만20~30세	135	33.3	74.9	85.9	81.4	39.2	54.8	64.5
	만31~40세	143	36.4	67.1	78.4	76.3	44.1	49	62.2
	만41~49세	162	37	61.7	71.6	79.6	58	57.4	71
결혼 여부	미혼	203	36.5	75.4	82.8	74.9	38.4	47.3	61.6
	기혼 (이혼, 사실혼 포함)	232	35.4	60.3	73.7	83.1	55.7	59.9	71.1
자녀 유무	없음	(255)	38.0	74.1	83.1	74.5	42.4	48.6	58.8
	임신중	(5)	20.0	80.0	60.0	80.0	20.0	40.0	80.0
	1명	(63)	31.7	61.9	68.3	88.9	52.4	60.3	84.1
	2명	(93)	31.2	54.8	72.0	87.1	59.1	64.5	72.0
	3명 이상	(24)	41.7	58.3	79.2	79.2	54.2	54.2	70.8

구분		사례수	결혼(법적 혼인)은 구식 제도이다	결혼할 의사가 없어도 남녀가 함께 사는 것은 괜찮다	결혼 전에 함께 살아보는 것은 남녀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가능성을 높여준다	결혼을 잘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은 인생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기대했던 결혼이 아니라도 결혼을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편이 낫다	대체로 결혼한 사람이 결혼하지 않은 사람보다 더 행복하다	대체로 아이가 있는 사람이 아이가 없는 사람보다 더 행복하다
직업	정규직	(250)	33.6	64.4	77.2	83.6	54.4	58.8	71.6
	비정규직	(62)	41.9	79.0	88.7	64.5	32.3	35.5	56.5
	자영업	(24)	37.5	58.3	62.5	70.8	54.2	50.0	62.5
	전업주부	(38)	34.2	60.5	76.3	86.8	39.5	50.0	57.9
	학생	(43)	34.9	81.4	81.4	86.0	37.2	55.8	62.8
	기타	(23)	43.5	65.2	73.9	60.9	43.5	56.5	56.5
최종 학력	고졸	(136)	41.9	69.9	76.5	81.6	51.5	50.0	59.6
	대졸	(269)	35.3	65.1	80.3	77.7	46.1	55.4	68.0
	대학원 이상	(35)	14.3	77.1	68.6	85.7	45.7	57.1	77.1
월평균 소득	150만원 이하	51	41.3	62.7	66.6	78.5	41.2	45.1	56.9
	151~300만원 이하	(114)	31.6	70.2	79.8	80.7	43.9	52.6	66.7
	301~500만원 이하	(156)	39.7	71.8	82.7	77.6	53.8	53.8	66.7
	501만원 이상	(119)	31.9	61.3	75.6	81.5	46.2	58.8	68.9



[그림 4-13] 결혼과 동거에 대한 인식



[그림 4-14] 성별에 따른 결혼과 동거에 대한 인식

- 프랑스 팩스 제도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중 71.9%가 프랑스의 저출산 정책 국내 도입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음. 구체적으로 '대체로 그렇다'는 응답이 51.2%, '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20.7%를 차지했음. 반면, '전혀 그렇지 않다'(6.1%)와 '별로 그렇지 않다'(22.3%) 등 부정적 응답은 28.4%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 남성(244명)과 여성(196명) 간 인식 차이를 살펴보면, 남성의 긍정 응답률은 79.0%(매우+대체로)로 여성의 66.3%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을 보였음. 이는 남성이 프랑스형 정책 도입에 대해 여성보다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줌
- 프랑스 정책 도입에 대해 가장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연령대는 만 36~40세(80.6%)였으며, 다음으로는 만 26~30세(74.0%), 만 41~49세(72.8%) 순이었다. 반면, 만 20~25세

청년층의 긍정 응답은 66.1%로 가장 낮았음. 이는 아직 결혼과 출산에 대한 직접적인 고민이 적은 연령대의 특성을 반영한 결과로 해석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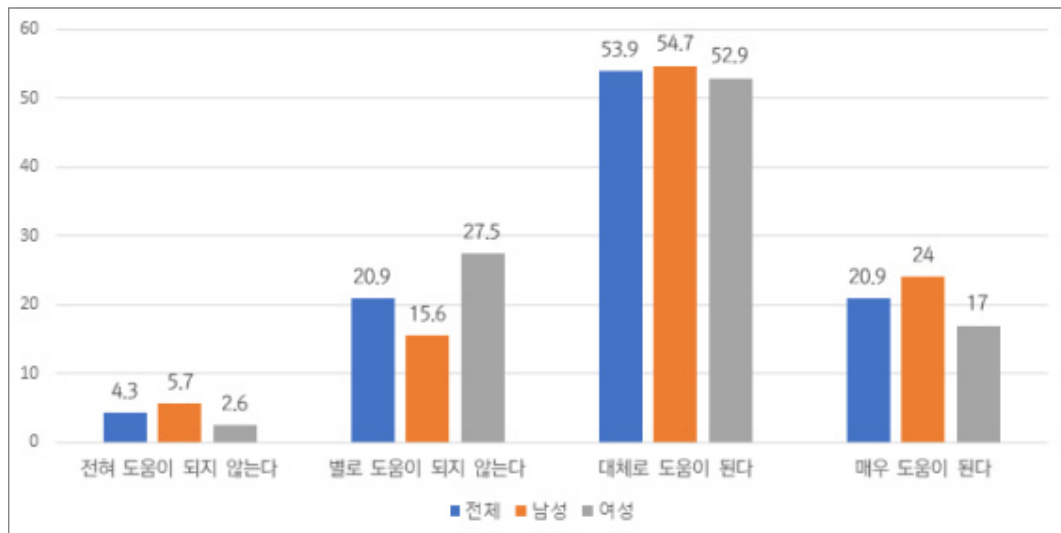
- 결혼 여부에 따른 응답 차이도 흥미롭게 나타났음. 기혼자의 긍정 응답률은 76.1%, 미혼자는 68.5%, 이혼자는 73.7%였으며, 동거 응답자는 100%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여 가장 높은 수용 태도를 보였음. 특히 동거 중인 응답자 전원이 '대체로 그렇다' 이상으로 응답한 점은 전통적인 가족 형태 외에도 다양한 가족 구성원들이 저출산 정책 수용성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함
- 자녀가 있는 응답자(185명)의 긍정 응답률은 평균 72.9%였으나, 자녀 수가 많을수록 프랑스 정책 도입에 대한 긍정 태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음. 구체적으로 자녀 1명(71.4%), 2명(68.8%), 3명 이상(62.6%) 순으로 긍정 응답률이 낮아졌음. 이는 실제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현실적인 정책 혜택 체감의 한계 또는 프랑스 정책이 모든 양육 단계에 충분히 부합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 때문일 수 있음
- 직업군별로는 학생(81.4%), 자영업자(83.3%), 정규직(72.8%), 전업주부(74.1%) 등이 높은 긍정 응답률을 보였음. 반면, 기타 직군(60.9%)과 비정규직(66.1%)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용 태도를 보였음. 이는 직업의 안정성과 예상되는 정책 수혜 기대감의 차이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됨
- 최종학력이 대학원 이상인 응답자의 긍정 응답률은 82.9%로 가장 높았으며, 대졸자(71.7%), 고졸자(67.6%) 순으로 나타났음. 이는 학력이 높을수록 해외 정책 사례에 대한 이해도와 수용성이 높아지는 경향을 시사함. 월평균 소득의 경우, 소득이 낮을수록 프랑스 정책 수용에 더 긍정적인 경향을 보였음. 100만 원 이하 응답자 중 79.5%, 101~150만 원 이하 응답자 중 70.9%가 긍정적이었던 반면, 501만 원 이상 고소득층에서는 64.7%만이 긍정적으로 응답하여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수용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음

[표 4-14] 저출산 현상 해결의 대안으로 프랑스 팩스제도 도입

(단위: 명/%)

		사례수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대체로 도움이 된다	매우 도움이 된다
전체		(345)	4.3	20.9	53.9	20.9
성별	남성	(192)	5.7	15.6	54.7	24.0
	여성	(153)	2.6	27.5	52.9	17.0
연령	20~30세	106	3.8	20.8	57.5	17.9

		사례수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대체로 도움이 된다	매우 도움이 된다
혼인상태	31-40세	107	5.6	19.6	49.5	25.2
	41-49세	132	3.8	22.0	54.5	19.7
	미혼	(160)	3.8	17.5	56.3	22.5
	기혼(사실혼 포함)	182	4.9	24.2	51.1	19.8
자녀유무	없음	(200)	3.5	17.5	56.0	23.0
	임신중	(1)	0.0	0.0	100.0	0.0
	1명	(49)	10.2	22.4	49.0	18.4
	2명	(73)	4.1	27.4	56.2	12.3
	3명 이상	(22)	0.0	27.3	36.4	36.4
최종학력	고졸	(107)	3.7	15.0	57.9	23.4
	대졸	(213)	4.2	24.9	51.6	19.2
	대학원 이상	(25)	8.0	12.0	56.0	24.0
월평균소득	150만원 이하	37	2.7	18.9	59.5	18.9
	15-300만원 이하	89	2.2	15.7	62.9	19.1
	301-500만원 이하	121	5.0	23.1	51.2	20.7
	501만원 이상	98	6.1	23.5	46.9	23.5



[그림 4-15] 저출산 현상 해결의 대안으로 프랑스 팩스제도 도입

(7) 저출산 정책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대상에 대한 인식

-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지원 대상을 충청도민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총 440명의 응답 결과를 분석하였음. 그 결과, 충청도민은 '결혼은 했지만 자녀는 없는 부부'를 저출산 정책의 우선 지원 대상으로 가장 많이(50.7%) 인식하고 있었음. 이는 출산 잠재력이 존재하지만 아직 자녀를 두지 않은 부부에 대한 정책적 개입이 가장 필요하다고 보는 사회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됨. 다음으로는 '결혼하지 않은 청년세대'(48.4%), '특정 시기에 산아 제한이 있었던 세대'(32.7%), '현재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30.7%) 순으로 나타났음
-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남성(50.8%)과 여성(50.5%) 모두 '자녀 없는 부부'를 최우선 대상으로 응답하여 유사한 인식을 보였음. 그러나 '결혼하지 않은 청년세대'에 대해서는 남성(54.9%)이 여성(41.3%)보다 더 높게 응답한 반면, '현재 자녀를 양육 중인 부모'에 대한 응답은 여성(34.2%)이 남성(27.9%)보다 높아, 양육의 부담을 체감하는 여성의 현실적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됨
- 연령대별 인식에서는 명확한 차이가 나타났음. 연령이 낮을수록 '청년세대 지원'에 대한 응답이 높았는데, 만 20~25세의 경우 63.2%, 만 26~30세는 54.8%로 나타났음. 이는 젊은 세대가 스스로를 정책 대상군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함을 보여줌. 반면 만 41~49세 연령층은 '현재 자녀를 양육 중인 부모'(36.4%)나 '특정 시기에 산아 제한이 있었던 세대'(35.8%)에 대한 응답이 더 높아, 연령대에 따라 저출산 대응 대상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음
- 혼인상태별 응답을 보면, 기혼자는 '자녀 없는 부부'에 대한 응답이 49.8%, 미혼자는 51.7%로 대체로 유사한 경향을 보였음. 특히 '청년세대' 응답 비율은 미혼(50.7%)이 기혼(46.3%)보다 높아, 미혼 청년층이 스스로를 정책 대상군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할 수 있음
- 자녀 유무에 따른 인식에서도 차이가 나타났음. 자녀가 없는 경우 '청년세대'에 대한 응답 비율은 50.2%로 높았음. 반면 자녀가 1명 이상일 경우 '현재 자녀를 양육 중인 부모'를 지원 대상으로 본 응답 비율이 다소 증가하였음(자녀 1명: 33.3%, 2명: 33.6%, 3명 이상: 41.7%). 이는 실제 양육 경험이 정책 대상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함
- 직업 및 학력에 따른 경향을 분석한 결과, 정규직, 비정규직, 학생 모두 '결혼은 했지만 자녀는 없는 부부'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았음. 특히 전업주부는 '청년세대'에 대한 응답 비율이 66.7%로 매우 높았고, 학생층 또한 61.9%로 청년세대에 대한 지원이 우선되어야 한

다는 응답이 우세하였음. 학력별로는 대학원 이상 학력자 중 57.1%가 '청년세대'를 우선 지원 대상으로 꼽았으며, 상대적으로 '자녀 없는 부부'에 대한 응답은 42.9%에 머물렀음

- 이러한 결과들은 충남도민이 저출산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있어 사회적·경제적 위치, 가족 경험 여부, 그리고 생애주기 등 복합적인 요인을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특히, '결혼은 했지만 자녀는 없는 부부'와 '결혼하지 않은 청년세대'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 점은, 미래 출산을 제고를 위한 잠재력 있는 집단에 대한 전략적 접근의 중요성을 시사함. 이는 충청남도가 저출산 정책을 수립할 때 도민의 이러한 다양한 인식을 반영하여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함을 강조함

[표 4-15] 저출산 정책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대상에 대한 인식(다중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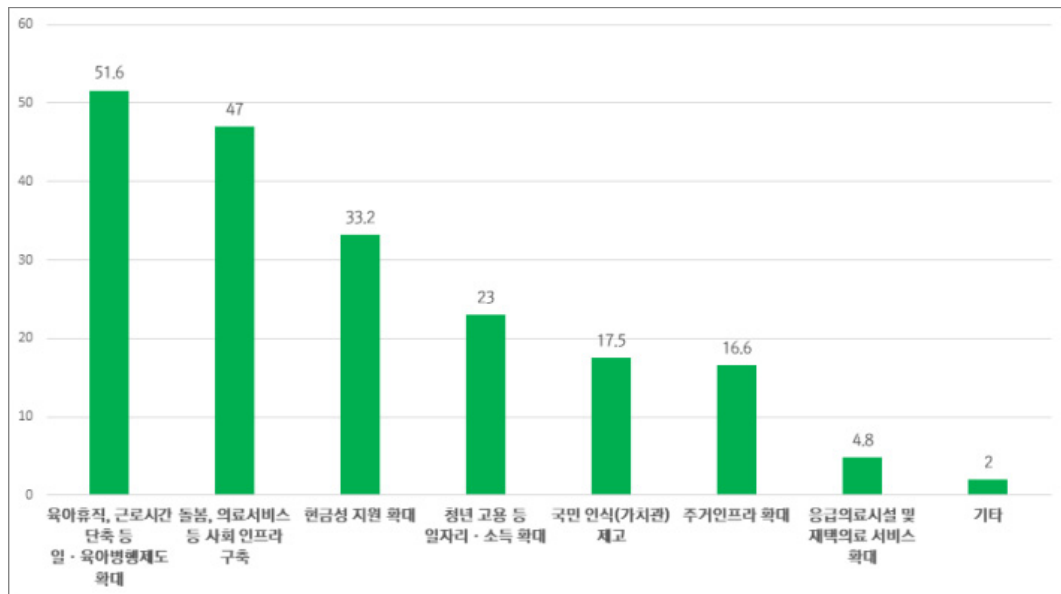
		사례수	결혼은 했지만, 자녀는 없는 부부	결혼하지 않은 청년세대	특정 세대에 선택과 집중이 아닌 모든 세대에 고르게 지원해야 함	현재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
전체		(440)	50.7	48.4	32.7	30.7
성별	남성	(244)	50.8	54.9	29.1	27.9
	여성	(196)	50.5	40.3	37.2	34.2
연령대	만20~25세	(62)	58.1	50.0	35.5	29.0
	만26~30세	(73)	60.3	63.0	24.7	21.9
	만31~35세	(62)	58.1	51.6	22.6	35.5
	만36~40세	(81)	38.3	46.9	38.3	37.0
	만41~49세	(162)	46.9	40.7	36.4	30.2
결혼 여부	미혼	(203)	53.2	57.1	31.5	24.1
	결혼	(213)	49.8	41.8	31.9	35.2
	이혼	(19)	26.3	26.3	52.6	52.6
	동거	(5)	80.0	60.0	40.0	20.0
자녀 유무	없음	(255)	56.5	51.4	32.5	25.9
	임신중	(5)	20.0	100.0	20.0	40.0
	1명	(63)	38.1	50.8	30.2	42.9
	2명	(93)	43.0	40.9	37.6	32.3
	3명 이상	(24)	58.3	29.2	25.0	41.7

		사례수	결혼은 했지만, 자녀는 없는 부부	결혼하지 않은 청년세대	특정 세대에 선택과 집중이 아닌 모든 세대에 고르게 지원해야 함	현재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
직업	정규직	(250)	53.6	48.0	29.6	29.6
	비정규직	(62)	43.5	61.3	33.9	25.8
	자영업	(24)	54.2	41.7	25.0	41.7
	전업주부	(38)	39.5	36.8	36.8	44.7
	학생	(43)	55.8	51.2	41.9	30.2
	기타	(23)	43.5	39.1	47.8	21.7
최종 학력	고졸	(136)	52.2	46.3	34.6	27.9
	대졸	(269)	50.9	48.3	32.0	30.9
	대학원 이상	(35)	42.9	57.1	31.4	40.0

(8) 저출산 대응정책

-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중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는 ‘육아휴직·근로시간 단축 등 일·가정 양립 제도 확대’가 전반적으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음. 성별, 연령, 결혼 여부, 자녀 유무, 직업군 등 다양한 집단에서 차이는 있었으나, 가족친화적인 정책에 대한 수요는 전 계층에 걸쳐 공통적으로 나타났음
- 성별에 따라 여성 응답자(59.2%)는 남성(45.5%)보다 일·가정 양립 제도에 대한 선호가 높았고, 돌봄 및 사회 인프라 구축(54.1%)에 대한 수요도 뚜렷했음. 남성은 상대적으로 ‘현금성 지원 확대’(39.8%)를 더 중시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성별에 따른 가족 돌봄 부담의 구조적 불균형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임
- 연령별로는 40대 후반에서 ‘현금성 지원’보다 ‘돌봄 인프라 구축’을 더 높게 평가하는 한편, 국민 인식 개선(18.5%)과 축소의료화(18.5%), 응급의료시설 확대(7.4%) 등 다양한 정책 항목에 고른 응답을 보여 중·장년층의 복합적인 정책 수요가 드러났음
- 결혼 여부에 따라서는 기혼자(52.6%)와 미혼자(49.3%) 모두 ‘일·가정 양립 제도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으며, ‘사회 인프라 구축’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음. 반면, 이혼자는 ‘현금성 지원 확대’(47.4%)와 ‘청년 일자리·소득 확대’(26.3%)를 주요 정책으로 지목해 생계 안정에 직접 연결되는 정책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음

- 자녀 유무에 따라서는 자녀가 없는 집단이 ‘일·육아 병행 제도 확대’(52.2%)와 ‘돌봄 인프라 구축’(43.1%)을 주요 정책으로 인식하였고, 이는 자녀 출산을 고려하는 계층의 정책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보임. 반면 자녀가 3명 이상인 응답자는 ‘현금성 지원 확대’(50.0%)를 가장 중요하게 꼽아, 다자녀 가구일수록 경제적 직접 지원에 대한 기대가 높음을 보여줌
- 직업별로는 정규직 근로자(53.2%)와 전업주부(55.3%) 모두 일·가정 양립 제도에 높은 관심을 보였고, 특히 전업주부는 ‘국민 인식 개선’(21.1%) 및 ‘축소의료화 확대’(18.4%) 항목에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음. 학생 집단은 ‘청년 일자리·소득 확대’(29.0%)와 ‘현금성 지원’(26.3%)을 중시하며, 경제적 기반 형성에 대한 관심이 높게 나타났음
- 이상의 분석을 종합하면, 저출산 대응을 위한 핵심 전략은 ‘시간과 자원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의 가족친화 정책 확대에 있으며, 여성, 기혼자, 정규직 근로자, 자녀 양육자 등에서 제도적 기반 확대에 대한 요구가 특히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 또한 청년층과 미혼자의 경우 경제적 기반 확보와 관련된 지원 정책에 대한 수요가 높으며, 자녀 수가 많을수록 직접적인 재정 지원에 대한 기대가 확대되는 경향이 나타남. 따라서 향후 정책 설계에 있어 생애주기별·가구 유형별 맞춤형 접근이 필요함



[그림 4-16] 저출산 대응정책 우선순위

[표 4-16] 저출산 대응 정책 우선순위

		사례수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등 일·육아병행 제도 확대	돌봄, 의료서비스 등 사회 인프라 구축	현금성 지원 확대	청년 고용 등 일자리·소득 확대	국민 인식(가치관) 제고	주거인프라 확대	응급의료시설 및 재택의료 서비스 확대	기타
	전체	(440)	51.6	47.0	33.2	23.0	17.5	16.6	4.8	2.0
성별	남성	(244)	45.5	41.4	34.4	27.0	18.9	22.1	2.9	2.9
	여성	(196)	59.2	54.1	31.6	17.9	15.8	9.7	7.1	1.0
연령 대	만20~25세	(62)	51.6	41.9	37.1	32.3	12.9	17.7	4.8	0.0
	만26~30세	(73)	54.8	38.4	39.7	24.7	13.7	20.5	0.0	4.1
	만31~35세	(62)	50.0	38.7	33.9	22.6	11.3	19.4	12.9	4.8
	만36~40세	(81)	55.6	54.3	30.9	18.5	19.8	9.9	7.4	1.2
	만41~49세	(162)	48.8	52.5	29.6	21.0	22.2	16.7	2.5	1.2
결혼 여부	미혼	(203)	52.2	41.4	31.5	26.6	17.7	19.7	3.4	3.4
	결혼	(213)	52.6	51.2	34.7	19.7	16.9	13.6	5.2	0.9
	이혼	(19)	42.1	57.9	31.6	21.1	21.1	10.5	15.8	0.0
	동거	(5)	20.0	60.0	40.0	20.0	20.0	40.0	0.0	0.0

		사례수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등 일·육아병행 제도 확대	돌봄, 의료서비스 등 사회 인프라 구축	현금성 지원 확대	청년 고용 등 일자리·소득 확대	국민 인식(가치관) 제고	주거인프라 확대	응급의료시설 및 재택의료 서비스 확대	기타
자녀 유무	없음	(255)	52.2	43.1	33.7	24.3	16.9	18.4	4.3	3.1
	임신중	(5)	80.0	60.0	40.0	0.0	20.0	0.0	0.0	0.0
	1명	(63)	55.6	49.2	33.3	19.0	20.6	11.1	1.6	1.6
	2명	(93)	45.2	54.8	31.2	23.7	17.2	18.3	5.4	0.0
	3명 이상	(24)	54.2	50.0	33.3	20.8	16.7	8.3	16.7	0.0
직업	정규직	(250)	49.6	48.4	36.0	19.6	18.4	16.0	4.0	3.2
	비정규직	(62)	56.5	48.4	29.0	33.9	11.3	14.5	3.2	1.6
	자영업	(24)	50.0	45.8	33.3	25.0	20.8	16.7	4.2	0.0
	전업주부	(38)	55.3	50.0	31.6	18.4	21.1	10.5	7.9	0.0
	학생	(43)	46.5	37.2	37.2	20.9	18.6	27.9	9.3	0.0
	기타	(23)	65.2	43.5	8.7	39.1	13.0	17.4	4.3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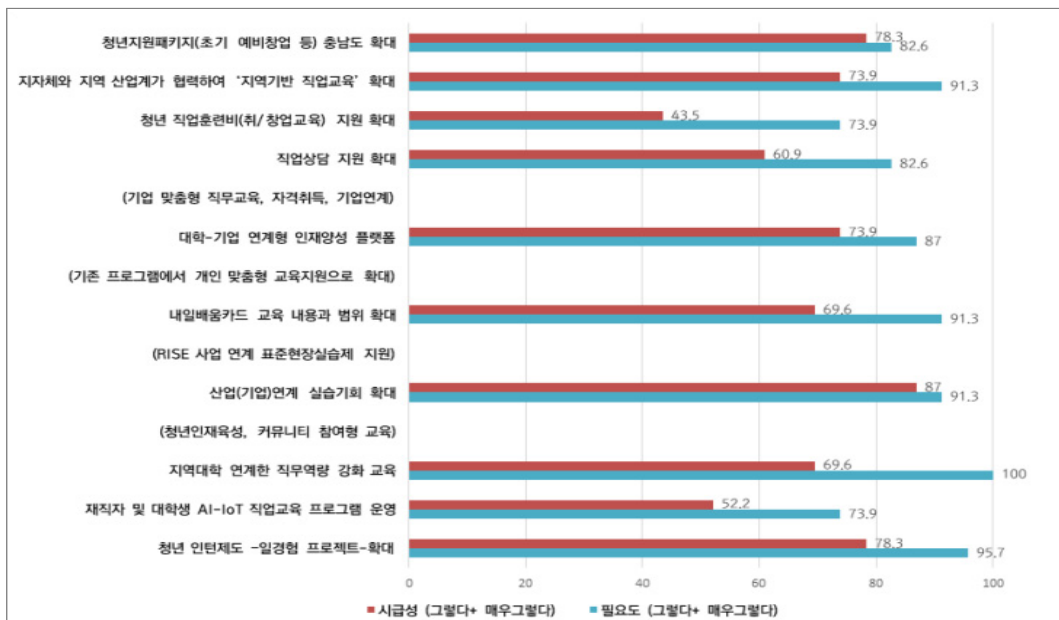
3. 전문가 델파이 조사

- 저출산 인구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 발굴을 위해 인구, 사회복지, 저출산 분야 연구자 등 학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하였음.
- 조사는 2025년 8월부터 9월까지 진행되었으며, 교육·취창업, 보건의료, 소득보장, 결혼·임신·출산, 주거영역, 돌봄영역, 문화·여가 인프라로 분류하여 각 영역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음
- 관련 정책은 타지역에서 우수사례로 주목받았던 정책과 중앙정부에서 추진되는 정책 중 청년들의 추가지원에 대한 요구도가 높은 정책을 중심으로 문항을 구성하였음.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음

1) 교육·취창업 정책

- 교육·취창업 정책에 대한 조사결과, ‘지역대학-기업-지자체 협력형 교육’을 핵심으로 나타남. 특히 ‘청년 인턴제도·실습기회 확대(1·4번)’가 가장 시급하고 효과적인 정책으로 평가됨. 반면, 기술기반 정책(AI·IoT 등)은 중장기 과제로 인식되어 상대적으로 시급성은 낮았음

(단위: %)



[그림 4-17] 교육·취·창업정책의 필요도 및 시급성

[표 4-17] 교육-취·창업 정책의 필요도 및 시급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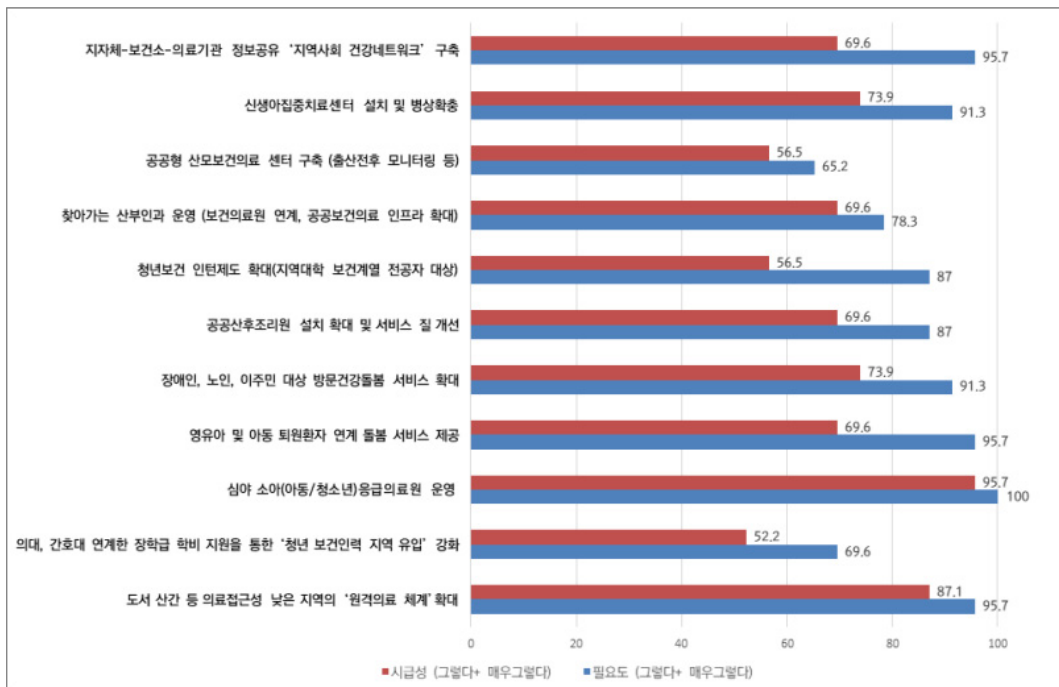
항 목		필요도 (그렇다+ 매우그렇다)	시급성 (그렇다+ 매우그렇다)	정책 내용	정책 평가
1	청년 인턴제도 -일경험 프로젝트-확대	95.7	78.3	대학생 및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기업·공공기관 연계 인턴십, 일경험 프로그램 확대	• 가장 높은 평가. 청년의 취업준비·사회진입 지원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인식. 시급성 또한 매우 높음.
2	재직자 및 대학생 AI-IoT 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73.9	52.2	지역 대학·산업체 협력 기반으로 첨단 기술(AI, IoT) 분야 실무 교육 제공	• 기술기반 역량 강화형 정책. 4차 산업 대비 필요성은 있으나 인구유입과의 직접 연관성은 약해 시급성 낮음.
3	지역대학 연계한 직무역량 강화 교육(청년인재육성, 커뮤니티 참여형 교육)	100	69.6	지역대학과 기업이 협력하여 청년에게 직무역량 및 현장경험 기회를 제공	• 필요도 최고치. 지역 인재 양성과 청년 정책을 위한 필수 과제로 평가되나, 대학협력 인프라 구축 필요.
4	산업(기업)연계 실습기회 확대 (RISE사업 연계 표준현장실습제 지원)	91.3	87.0	기업 현장 실습, 캡스톤 디자인 등 산학협력 강화 프로그램 운영	• 실행가능성과 시급성 모두 높음. 기업현장과 연계된 실습형 교육이 지역정착 유인효과 높다고 평가됨.
5	내일배움카드 교육 내용과 범위 확대 (기존 프로그램에서 개인 맞춤형 교육지원으로 확대)	91.3	69.6	직업훈련카드 제도를 지역 맞춤형으로 확대하여 재직자·경력단절자 대상 교육 강화	• 실행기반 강화형 정책. 기존 제도 개선을 통한 현실적 접근 가능. 교육대상 확대가 핵심 과제로 제시됨.
6	대학-기업 연계형 인재양성 플랫폼 (기업 맞춤형 직무교육, 자격취득, 기업연계)	87.0	73.9	산업 수요에 따라 인재를 양성하고 기업취업과 연계하는 지역기반 플랫폼 구축	• 고용연계형 핵심정책. 지역대학의 생태계 활성화와 기업정착 유도에 효과적이라는 평가.

항 목		필요도 (그렇다+ 매우그렇다)	시급성 (그렇다+ 매우그렇다)	정책 내용	정책 평가
7	직업상담 지원 확대	82.6	60.9	청년을 위한 전문 직업상담 및 커리어 매칭 서비스 확대	• 기초지원형 정책. 청년층 취업준비 지원에 필요하나, 단독 정책으로는 지속성 한계 지적.
8	청년 직업훈련비(취/창업교육) 지원 확대	73.9	43.5	직업훈련비·창업교육비 지원을 통해 자립역량 강화	• 역량강화형 과제. 실제 체감효과 높고, 취업진입장벽 완화 효과 예상됨.
9	지자체와 지역 산업계가 협력하여 '지역기반 직업교육' 확대	91.3	73.9	지역산업과 연계한 직업기술훈련 및 일자리 연계프로그램 추진	• 지속가능성 높은 지역산업 연계형 과제. 지방대학 및 기업 참여 유도가 관건.
10	청년지원패키지(초기 예비창업 등) 충남도 확대	82.6	78.3	정부의 청년창업·전환지원사업을 충남형으로 확대하여 창업생태계 조성	• 창업지원형 과제. 지역형 청년창업 지원모델로 실효성 높게 평가. 단, 창업 후 정착 지원 병행 필요.

2) 보건의료 정책

- 필요도는 대부분 90점 이상으로, 전문가들이 보건의료 분야의 정책 필요성을 매우 높게 인식하고 있음. 특히 산모·소아·청소년 응급의료원 운영(100점) 과 의료취약지역 원격의료 체계 확립(95.7점) 은 필요성과 시급성 모두 최상위권임. 이는 의료 접근성과 돌봄 연계체계 강화가 결혼·출산·정착을 위한 핵심 기반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줌
- “출산과 양육의 의료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이 충남의 결혼·출산·정착을 위한 가장 시급한 정책 우선순위로 드러남에 따라 산모·소아 의료원 운영과 원격의료 체계 확립이 전문가 전원이 동의한 핵심 과제로 판단됨

(단위: %)



[그림 4-18] 보건의료정책의 필요도 및 시급성

[표 4-18] 보건의료 정책의 필요도 및 시급성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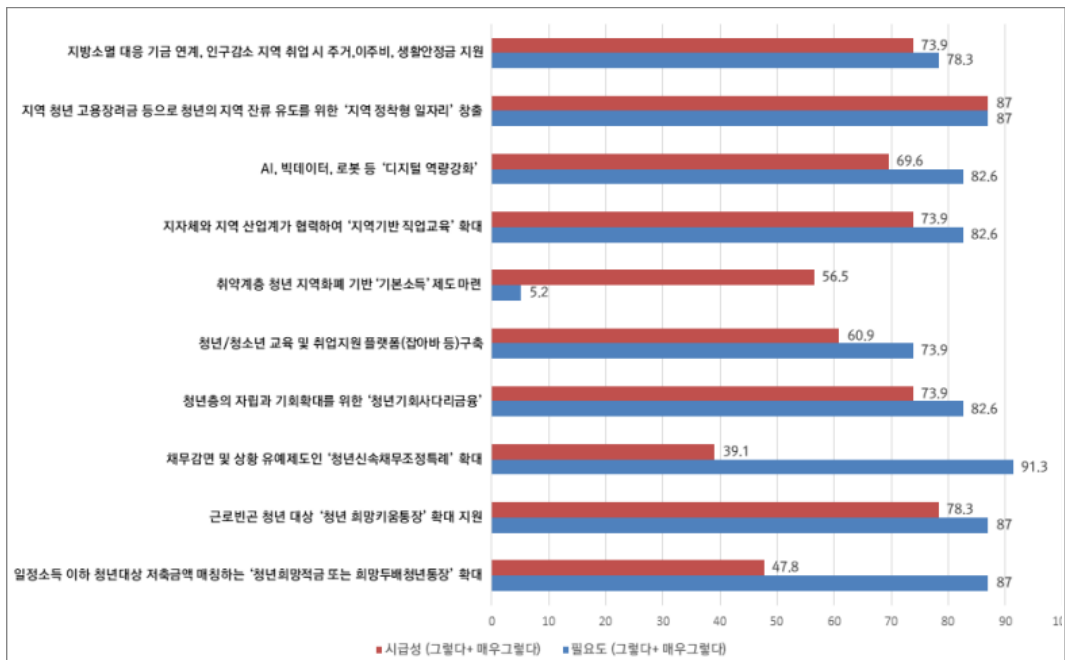
항 목		필요도 (그렇다+ 매우그렇다)	시급성 (그렇다+ 매우그렇다)	정책 내용	정책 평가
1	도서 산간 등 의료접근성 낮은 지역의 '원격의료 체계' 확대	95.7	87.1	의료취약지에 원격진료 시스템 구축	• 의료 접근성 격차를 해소하고 농어촌 등 정착 유인을 높이는 핵심 기반사업으로 평가됨
2	의대, 간호대 연계한 장학금 학비 지원을 통한 '청년 보건인력 지역 유입' 강화	69.6	52.2	의대·간호대·장학금·학비 지원을 통한 청년 의료인력 확보	• 필요성은 있으나, 다른 과제에 비해 시급성이 낮아 중기 추진 과제로 판단
3	심야 소아(아동·청소년)응급의료원 운영	100	95.7	지역별 산모·소아·청소년 응급의료체계 강화	• 전문가 전원이 필요성을 인정, 출산·양육 환경 개선의 최우선 과제
4	영유아 및 아동 퇴원환자 연계 돌봄 서비스 제공	95.7	69.6	영유아, 아동대상 병원 퇴원 후 지원받을 수 있는 돌봄 서비스	• 출산 후 연속 돌봄체계 확보, 가정 내 양육부담 완화 정책으로 높게 평가
5	장애인, 노인, 이주민 대상 방문건강돌봄 서비스 확대	91.3	73.9	재가 의료취약계층 대상 방문간호·재활 등	• 인구 고령화 대응 필요, 보편적 의료복지 기반 확충 정책
6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확대 및 서비스 질 개선	87.0	69.6	권역별 공공조리원 설치·운영	• 출산 비용부담 완화에 직접 기여, 도 단위 필수 인프라 과제
7	청년보건 인턴제도 확대(지역대학 보건계열 전공자 대상)	87.0	56.5	청년 대상 보건·의료 분야 인턴·현장실습 기회 제공	• 교육·취창업 연계형 지원이지만, 긴급성은 낮아 중장기 과제
8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보건의료원 연계,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대)	78.3	69.6	의료취약지 이동형 진료서비스	• 접근성 개선 효과 크며, 원격의료·응급의료 체계와 연계 시 효과 상승

항 목		필요도 (그렇다+ 매우그렇다)	시급성 (그렇다+ 매우그렇다)	정책 내용	정책 평가
9	공공형 산모보건의료 센터 구축 (출산전후 모니터링 등)	65.2	56.5	출산 후 건강 모니터링·데이터관리 체계화	• 장기적 관리 인프라 구축 필요, 보건데이터 기반 사업으로 평가
10	신생아집중치료센터 설치 및 병상확충	91.3	73.9	NICU 확충 및 장비·전문인력 지원	• 고위험 신생아 생존율 제고, 저출산 대응의 필수 의료기반
11	지자체-보건소-의료기관 정보공유 ‘지역사회 건강네트워크’ 구축	95.7	69.6	지자체 보건소·의료기관 간 정보공유 시스템	• 지역단위 건강관리 통합 거버넌스 구축 필요성 반영

3) 소득보장정책

- 전체 평균 필요도 약 85점 이상, 즉 대부분 정책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공감대가 높음.
그러나 시급성은 과제별로 격차가 크며, 일부 항목(예: 청년 부채경감, 기본소득제)은 시급성 평가가 낮음. 즉, 청년의 경제적 자립 기반은 필요하지만, 재정 여건·정책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단계적 추진이 필요하다는 인식으로 볼 수 있음
- 교육 취창업 정책 분야에서 최우선적으로 추진될 과제는 소득보장과 정책 유인을 연계할 수 있는 정책으로 ‘청년 희망기운통장 확대’, ‘지역정착형 일자리 창출’, ‘청년기회사다리금융’으로 조사됨
- 중기 추진과제로는 고용-소득 연계기반 강화형정책으로 ‘디지털 역량강화’, ‘지역기반 직업교육’, ‘주거-생활안정 보조금’정책이 도출됨
- 보완-장기 과제로는 제도적으로 실현 여건을 마련한 후 단계적 추진이 필요한 정책으로 ‘청년 부채조정 특례’, ‘청년저축계좌 확대’, ‘기본소득 시범사업’으로 나타남

(단위: %)



[그림 4-19] 소득보장정책의 필요도 및 시급성

[표 4-19] 소득보장 정책의 필요도 및 시급성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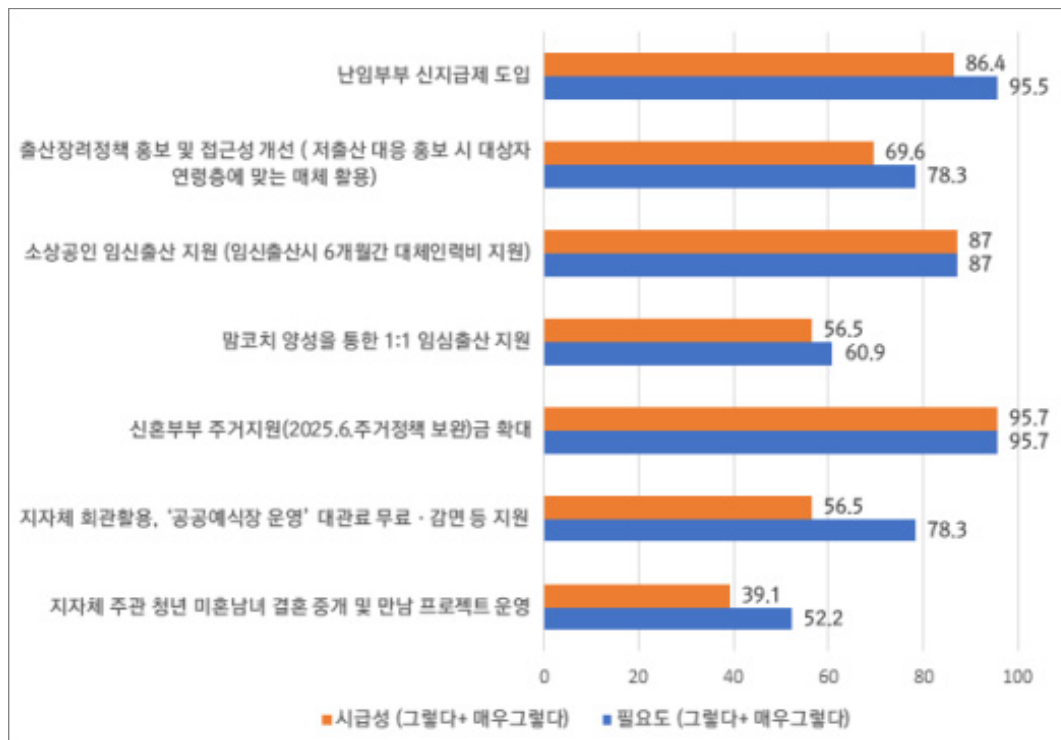
항 목		필요도 (그렇다+ 매우그렇다)	시급성 (그렇다+ 매우그렇다)	정책 내용	정책 평가
1	일정소득 이하 청년대상 저축금액 매칭하는 '청년희망적금 또는 희망두배청년통장' 확대	87.0	47.8	일정소득 이하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	• 필요성은 높지만 시급성은 낮음. 이미 유사 사업이 존재하기 때문에, 보완·확대형 과제로 평가
2	근로빈곤 청년 대상 '청년 희망키움통장' 확대 지원	87.0	78.3	근로소득 있는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	• 필요성과 시급성이 모두 높음. 청년 근로동기 강화 및 정착 유도형 핵심정책
3	채무감면 및 상황 유예제도인 '청년신속채무조정특례' 확대	91.3	39.1	학자금·생활비 채무 경감 지원	• 필요성 매우 높지만 시급성 낮음. 구조적 문제 해결에 장기 접근 필요
4	청년층의 자립과 기회확대를 위한 '청년기회사다리금융'	82.6	73.9	창업·학업·결혼·출산 등 맞춤형 금융 지원	• 실질적 자립 기반 지원정책으로, 단기 실행 가능한 고효율 과제
5	청년/청소년 교육 및 취업지원 플랫폼(잡아바 등)구축	73.9	60.9	취업·진로 통합지원 포털	• 중앙·타 지자체 운영 사례 존재. 충남형으로 고도화 필요성 있음
6	취약계층 청년 지역화폐 기반 '기본소득' 제도 마련	5.2	56.5	지역화폐 기반 기본소득 지급	• 논쟁 여지 크고 실현성 낮아 우선순위 하위순위
7	지자체와 지역 산업계가 협력하여 '지역기반 직업교육' 확대	82.6	73.9	지자체-산업계 협력 직업기반 교육	• 고용과 소득을 직접 연계할 수 있어 효과성과 실현성 모두 양호함

항 목		필요도 (그렇다+ 매우그렇다)	시급성 (그렇다+ 매우그렇다)	정책 내용	정책 평가
8	AI, 빅데이터, 로봇 등 '디지털 역량강화'	82.6	69.6	첨단산업 기술습득 및 디지털 직업훈련	• 미래 고용시장 대비 장기적 필요
9	지역 청년 고용장려금 등으로 청년의 지역 잔류 유도를 위한 '지역 정착형 일자리' 창출	87.0	87.0	지역 내 취업 및 정착 유도형 지원	• 필요도·시급성 모두 높음. 결혼·출산 연계형 정착정책의 중심축
10	지방소멸 대응 기금 연계, 인구감소 지역 취업 시 주거,이주비, 생활안정금 지원	78.3	73.9	주거·취업 연계형 생계·생활비 지원	• 기본적 안전망으로서 보조적 정책이나 결혼·출산 유인에 실효성 있음

4) 결혼·임신·출산정책

- 결혼·임신·출산 지원정책의 필요도 평균이 80점 이상, 특히 신혼부부 주거지원과 난임부부 지원정책의 필요성과 시급성이 모두 매우 높게 평가되었음. 반면 결혼중개 및 만남 프로그램은 필요도·시급성이 낮아, 정책 실효성에 대한 전문가 회의적 시각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결혼·출산을 경제적 부담 완화와 연결짓는 방향(주거·의료비·보조금 등)이 핵심 트렌드로 확인됨

(단위: %)



[그림 4-20] 결혼·임신·출산정책의 필요도 및 시급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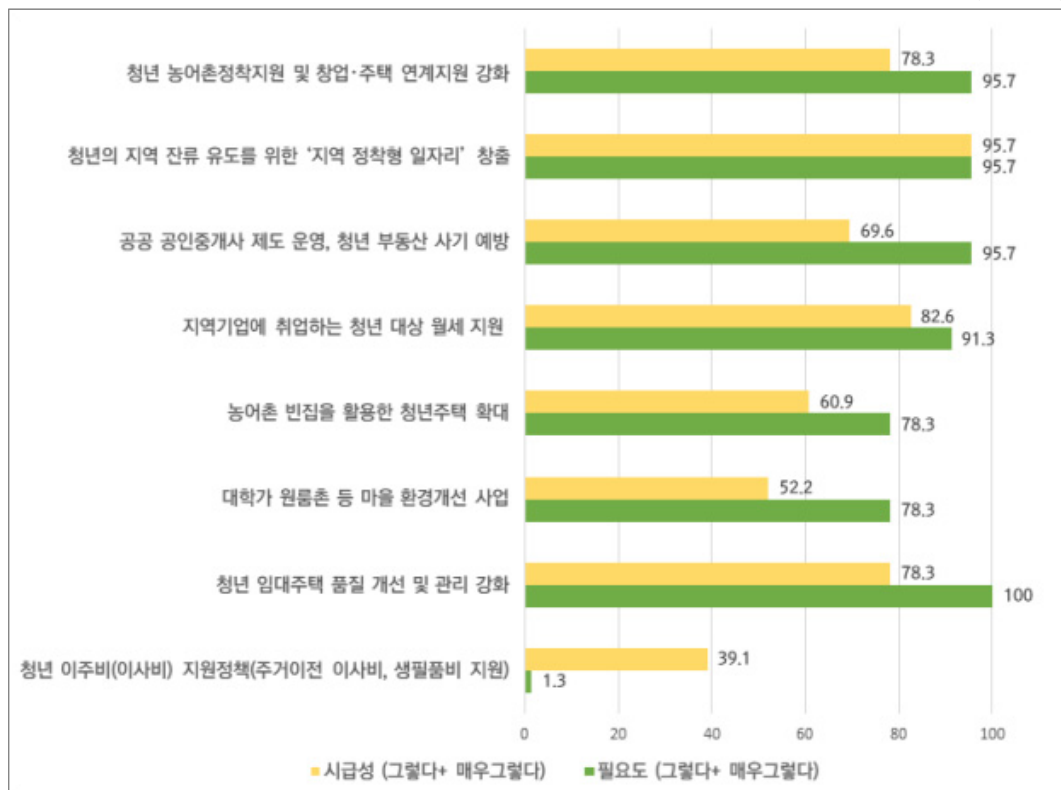
[표 4-20] 결혼·임신·출산정책의 필요도 및 시급성

항 목		필요도 (그렇다+ 매우그렇다)	시급성 (그렇다+ 매우그렇다)	정책 내용	정책 평가
1	지자체 주관 청년 미혼남녀 결혼 중개 및 만남 프로젝트 운영	52.2	39.1	지자체 주관 만남·교류행사	• 낮은 필요도와 시급성. 개인적 영역에 대한 공공개입에 대한 부정적 인식 반영.
2	지자체 회관활용, '공공예식장 운영' 대관료 무료·감면 등 지원	78.3	56.5	결혼비용 경감 지원	•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비용효율성 낮고 사회적 수요 제한적. 보완적 사업으로 적합.
3	신혼부부 주거지원(2025.6.주거정책 보완)금 확대	95.7	95.7	주거자금 보완금 지원('25.6 주거정책 연계)	• 필요도·시급성 모두 최고 수준. 결혼·출산 유도 핵심정책으로 평가
4	맘코치 양성을 통한 1:1 임신출산 지원	60.9	56.5	1:1 맞춤형 임신·출산 지원	• 임신·출산기의 정서·건강·생활 코칭 인력 양성사업. 중간 수준의 필요성과 시급성으로, 기존 정책을 통합하여 충남형으로 디자인 필요
5	소상공인 임신출산 지원 (임신출산시 6개월간 대체인력비 지원)	87.0	87.0	6개월간 대체인력비·고용유지비 지원	• 자영업·소상공 부부의 현실적 문제 해결책으로 정책 실효성 매우 높음.
6	출산장려정책 홍보 및 접근성 개선 (저출산 대응 홍보 시 대상자 연령층에 맞는 매체 활용)	78.3	69.6	결혼·출산 인식개선, 세대별 맞춤 홍보	• 인식 개선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단독사업보다는 다른 정책과 연계 홍보로 권장됨.
7	난임부부 신지급제 도입	95.5	86.4	난임치료비 현실화 및 지원확대	• 시급성과 필요성 모두 높음. 고령 출산 증가에 대응한 핵심 의료지원 과제.

5) 주거영역 정책

- 주거영역 정책 조사 결과, ‘주거비 지원’보다 ‘주거 안정성·정착성 강화’가 더 중요하게 평가되었음. 특히 단순 이사비 지원(1번)은 거의 불필요로 평가된 반면, 임대주택 품질 개선(2번)과 정착형 일자리 창출(7번)은 매우 높게 평가됨
- ‘일자리-주거 연계’형 정책이 핵심으로 인식되었음. 5번(월세지원)과 7번(정착형 일자리 창출)이 모두 필요·시급성 상위권으로 이는 단순 주거지원이 아니라 지역 내 ‘생활기반’ 구축이 결혼·인구유입의 선행조건임을 의미함
- 농촌 정주형 청년주택(4번, 8번)은 실효성 있는 지방형 대안으로 주목됨. 특히 8번 ‘청년 농어촌 정착 지원 및 창업·주택 연계 지원강화’ 과제는 도시 대비 상대적으로 인구감소율이 높은 농촌 지역 대응정책으로 높게 평가됨

(단위: %)



[그림 4-21] 주거영역 정책의 필요도 및 시급성

[표 4-21] 주거영역 정책의 필요도 및 시급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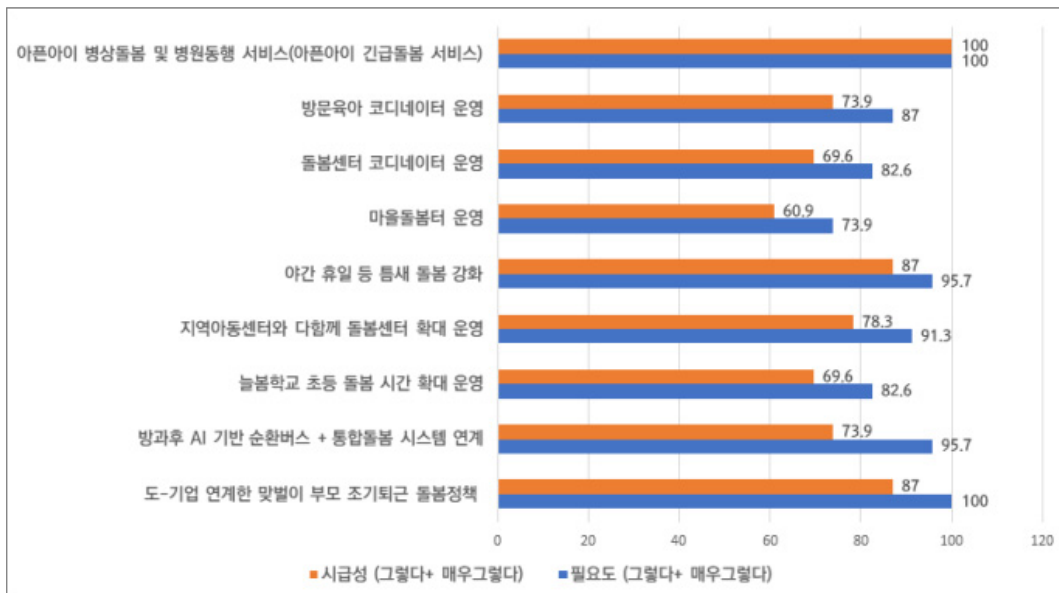
항 목		필요도 (그렇다+ 매우그렇다)	시급성 (그렇다+ 매우그렇다)	정책 내용	정책 평가
1	청년 이주비(이사비) 지원정책(주거이전 이사비, 생필품비 지원)	1.3	39.1	타지역 청년의 충남 전입을 유도하기 위해 이사비·생활비 일부를 지원하는 직접적 인센티브 정책	• 효과성 낮음. 단발성 금전지원이 장기 정착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판단. 예산 대비 효율성 부족으로 우선순위 낮음.
2	청년 임대주택 품질 개선 및 관리 강화	100	78.3	공공임대주택의 품질·안전·관리체계를 개선하여 청년 주거의 질을 향상	• 가장 높은 필요도. 단순 물량 공급보다 ‘거주 품질과 관리체계 개선’이 핵심 과제로 인식됨. 충남 청년정착의 핵심 기반정책으로 평가됨.
3	대학가 원룸촌 등 마을 환경개선 사업	78.3	52.2	대학 인근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청년·신혼부부 거주환경을 정비	• 보완적 사업. 주거환경 질 개선은 필요하나, 인구유입 효과는 제한적. 공동체·안전 환경 조성 측면에서 의미 있음.
4	농어촌 빈집을 활용한 청년주택 확대	78.3	60.9	유휴주택(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청년에게 저렴하게 임대·분양하는 사업	• 실현 가능성이 높음. 농촌형 인구유입 유도책으로 평가되나, 유지·보수 비용 및 관리체계 확보가 필요.
5	지역기업에 취업하는 청년 대상 월세 지원	91.3	82.6	지역 내 중소기업·공공기관 취업 청년의 주거비(월세)를 일정 기간 지원	• 핵심 실효정책. ‘고용-주거 연계형 지원’으로 청년의 지역정착을 유도. 타 시도 유사 정책보다 현실적이며 시급하다고 평가됨.

항 목		필요도 (그렇다+ 매우그렇다)	시급성 (그렇다+ 매우그렇다)	정책 내용	정책 평가
6	공공 공인중개사 제도 운영, 청년 부동산 사기 예방	95.7	69.6	청년 대상 임대차 피해 예방을 위해 공공이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제도 도입	• 사회안전망 강화정책. 임대차 사기·전세 피해 예방의 중요성을 전문가들이 높게 인식함. 실효성은 간접적이지만 필요성 매우 높음.
7	청년의 지역 잔류 유도를 위한 '지역 정착형 일자리' 창출	95.7	95.7	주거지와 연계된 지역 내 청년 일자리 창출, 공공기관·지자체 연계형 고용정책	• 필요도·시급성 모두 최고. 단순한 주거지원보다 '일자리-주거 결합형 정책'이 청년 정착의 핵심 요인으로 인식됨.
8	청년 농어촌정착지원 및 창업·주택 연계지원 강화	95.7	78.3	농촌 정착 청년에게 창업자금·주택수리비·교육비 등을 연계 지원	• 지역균형형 핵심정책. 청년 농촌 이주 및 귀농귀촌을 통한 인구유입 대안으로 높은 평가. 충남 농촌지역에 적합한 모델로 제시됨.

6) 돌봄영역 정책

- 돌봄영역에서 핵심요소는 “시간적 유연성과 긴급대응 능력”의 돌봄정책임. 특히 야간·휴일·병상 돌봄 서비스는 부모의 근로형태 변화와 가족구조 다양화에 따라 즉시적 정책 개입이 필요한 돌봄 사각지대 해소 과제로 평가됨. 즉, “시간 기반 돌봄” + “긴급 돌봄”이 돌봄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부상됨. 야간·휴일·병상돌봄 등 노동시간 중심 사회의 새로운 돌봄 수요 반영됨
- 이에 ‘기업-지자체 연계형’ 정책과 ‘AI 기반 스마트 돌봄’이 미래형 돌봄체계로서 높은 기대감을 받음. 여기에 ‘공동체형(마을돌봄터)’ 이나 ‘코디네이터형(돌봄센터 코디네이터)’은 보완정책으로 나타남. 장기적으로 기업-지자체-AI 기술의 삼각 협력 기반 돌봄체계 구축이 지속가능한 지역 돌봄 인프라의 핵심이 될 것으로 예측됨

(단위: %)



[그림 4-22] 돌봄영역 정책의 필요도 및 시급성

[표 4-22] 돌봄 정책의 필요도 및 시급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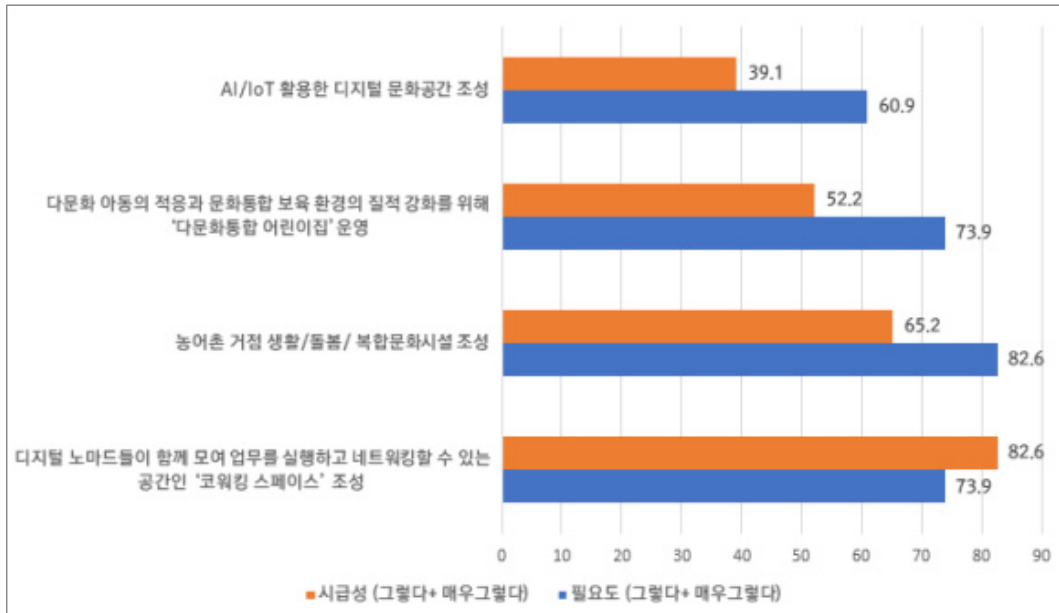
항 목		필요도 (그렇다+ 매우그렇다)	시급성 (그렇다+ 매우그렇다)	정책 내용	정책 평가
1	도-기업 연계한 맞벌이 부모 조기퇴근 돌봄정책	100	87.0	기업과 지방정부가 협력하여, 맞벌이 부모의 퇴근시간을 조정하고 돌봄 공백을 줄이는 제도적 연계모델	• 가장 높은 평가. 기업-지자체 협력 돌봄정책의 필요성이 매우 높게 인식됨. ‘일-가정 양립’ 핵심 정책으로 실효성과 시급성 모두 높음.
2	방과후 AI 기반 순환버스 + 통합돌봄 시스템 연계	95.7	73.9	AI·IoT 기술을 활용해 방과후 아동의 이동·안전·돌봄을 통합 관리하는 스마트시스템 구축	• 혁신형 정책으로 주목. 기술접목에 대한 긍정평가가 많지만, 인프라·예산 부담으로 시급성은 다소 낮게 평가됨.
3	늘봄학교 초등 돌봄 시간 확대 운영	82.6	69.6	학교 내 돌봄교실 운영시간을 연장하고, 방학·야간 돌봄까지 확장	• 보완정책 성격. 돌봄수요는 높으나, 교육부 중심사업과의 중복 우려로 우선순위는 중간 수준.
4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 돌봄센터 확대 운영	91.3	78.3	지자체와 지역 돌봄기관이 연계하여, 생활권 중심의 돌봄센터를 확충	• 현장 실행력 높은 과제. 기존 인프라 활용이 가능, 실효성 높음.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도 긍정적
5	야간 휴일 등 틈새 돌봄 강화	95.7	87.0	야간, 주말, 공휴일에도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탄력적 돌봄체계 구축	• 핵심 실효정책.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평가. 특히 농촌·소도시에서 시급성 높음.
6	마을돌봄터 운영	73.9	60.9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어 아이 돌봄과 공동육아를 담당하는 마을단위 공간 조성	• 공동체 회복형 과제. 주민참여형으로 필요성은 인정되나, 운영주체와 지속성 확보가 과제로 지적됨.

항 목		필요도 (그렇다+ 매우그렇다)	시급성 (그렇다+ 매우그렇다)	정책 내용	정책 평가
7	돌봄센터 코디네이터 운영	82.6	69.6	전문 코디네이터를 배치해 돌봄서비스를 통합 연계하고, 민간자원과의 매칭 기능 강화	• 전문성 강화형 정책. 돌봄체계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필요하지만, 제도화와 인력예산이 병행되어야 함.
8	방문육아 코디네이터 운영	87.0	73.9	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직접 방문해 상담·심리지원·서비스 연계 수행	• 통합돌봄 확장형 모델. 돌봄과 심리·정서지원이 결합된 모델로 평가. 현장 적용성 높음.
9	아픈아이 병상돌봄 및 병원동행 서비스(아픈아이 긴급돌봄 서비스)	100	100	부모 근무시간 중 아픈 아이의 병원 이동 및 돌봄(긴급)지원 제공	• 필요성과 시급성 모두 최고. 돌봄 사각지대 중 가장 긴급한 영역으로 평가됨. 전국적 확산 필요성이 제기됨.

7) 문화·여가 정책

- 문화·여가 인프라 정책은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는 보조적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코워킹 스페이스 조성'은 기존 산업·창업정책과의 연계성이 높아 인구유입형 핵심정책으로 의미가 있음. 반면, 첨단기술 기반 문화공간(4번)은 실현 가능성과 지속성이 낮아 우선순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됨
- 문화·여가 영역에서는 '생활과 일의 경계가 흐려지는 디지털 시대의 지역정주 인프라' 구축을 핵심으로 보임. 특히 코워킹 스페이스는 청년·원격근무자 유입형 지역혁신 거점으로 평가되지만, 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통 인프라 개선도 함께 병행될 필요가 있음.
- 농촌 지역은 돌봄·문화·생활이 결합된 복합문화공간이 지속가능한 인구유입 기반이 될 수 있는 의미있는 정책으로 도출됨. 다만, 인구감소와 마을 소멸로 복합공간 조성이 한계가 있는 만큼 지속가능한 공간 조성을 위해 지역을 권역으로 재구조화 하여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단위: %)



[그림 4-23] 문화·여가 정책의 필요도 및 시급성

[표 4-23] 문화·여가 정책의 필요도 및 시급성

항 목		필요도 (그렇다+ 매우그렇다)	시급성 (그렇다+ 매우그렇다)	정책 내용	정책 평가
1	디지털 노마드들이 함께 모여 업무를 실행하고 네트워킹할 수 있는 공간인 '코워킹 스페이스' 조성	73.9	82.6	원격근무, 프리랜서, 창업형 인구를 위한 공동업무·교류공간 구축. 지역 내 외부 청년 유입과 정착 지원을 목표로 함	• 시급성이 가장 높게 평가. 재택·원격근무 확산에 따라 지역에서도 '일+여가'가 가능한 복합공간 수요가 급증. 젊은층 인구유입의 핵심 인프라로 인식됨
2	농어촌 거점 생활/돌봄/ 복합문화시설 조성	82.6	65.2	농촌 지역에 생활편의, 돌봄, 문화 기능을 결합한 복합공간 설치	• 필요성이 가장 높게 평가. 특히 인구감소 지역의 생활기반 유지를 위한 필수시설로 평가됨. 다만, 부지확보 및 재정지원 문제로 시급성은 중간 수준
3	다문화 아동의 적응과 문화통합 보육 환경의 질적 강화를 위해 '다문화통합 어린이집'운영	73.9	52.2	다문화가정 아동의 문화적 적응, 언어·정서발달 지원 및 지역 통합 유도형 어린이집 설립	• 사회통합형 과제. 다문화가정 증가에 따른 교육·보육 문제 해결 필요성 인정. 그러나 사업대상 제한성과 예산집중 문제로 시급성은 낮게 평가
4	AI/IoT 활용한 디지털 문화공간 조성	60.9	39.1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을 접목해 주민 참여형 전시·체험·교육공간 마련	• 혁신성이 높지만 실행가능성 낮음. 첨단기술 기반 문화공간은 상징적 효과는 크지만, 실제 정주·출산 인구유입과의 직접적 연계성이 약하다는 평가

4. 소결

- 전반적으로 국민 대다수가 프랑스의 저출산 정책 국내 도입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음. 특히 남성, 만 36~40세 연령대, 기혼자 및 동거 응답자, 학생 및 자영업자, 고학력자, 그리고 저소득층에서 높은 수용성을 보였음. 반면 젊은 연령층(20~25세), 여성, 자녀수가 많은 응답자, 그리고 고소득층에서는 상대적으로 수용도가 낮은 경향을 보였음
- 이러한 결과는 향후 저출산 대응 정책 수립 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함
- 해외 사례 도입의 긍정적 기반: 국민들의 해외 저출산 정책 도입에 대한 높은 수용성은 새로운 정책 시도에 대한 사회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음을 의미
- 성별/연령별/계층별 맞춤형 접근 필요: 프랑스 정책에 대한 인식 차이가 성별, 연령대, 소득, 직업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나타나므로, 일률적인 정책 도입보다는 사회 각 계층의 요구와 현실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 설계가 필수적. 특히 남성들이 프랑스 정책에 긍정적인 반면 여성들은 경력 단절 등 다른 현실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고려
- 다양한 가족 형태 고려: 동거 가구의 높은 정책 수용성은 전통적인 가족 형태를 넘어 다양한 가족 구성원을 포괄하는 정책 설계의 필요성을 강조
- 정책 효과의 현실적 체감 중요성: 자녀 수가 많을수록 정책 수용도가 낮아지는 경향은 실제 양육 현장에서 정책 혜택을 얼마나 체감할 수 있는지에 대한 현실적 고려가 중요함을 시사
- 결론적으로 프랑스 저출산 정책 도입에 대한 긍정적 여론은 새로운 정책 실험의 기회를 제공하지만, 성공적인 국내 적용을 위해서는 단순히 해외 모델을 이식하는 것을 넘어 한국 사회의 복합적인 특성과 각 계층의 현실적인 요구를 면밀히 반영한 정교하고 유연한 정책 설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출산에 대한 국민 인식은 점차 “개인의 선택”이라는 인식으로 전환되고 있음. 특히 여성, 고연령층, 저소득층에서 출산을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으며, 이는 향후 출산장려 정책의 방향이 단순한 출산 독려를 넘어, 개인의 삶의 질, 여성의 경력 지속, 경제적 부담 완화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을 병행해야 함을 시사함

제5장

정책 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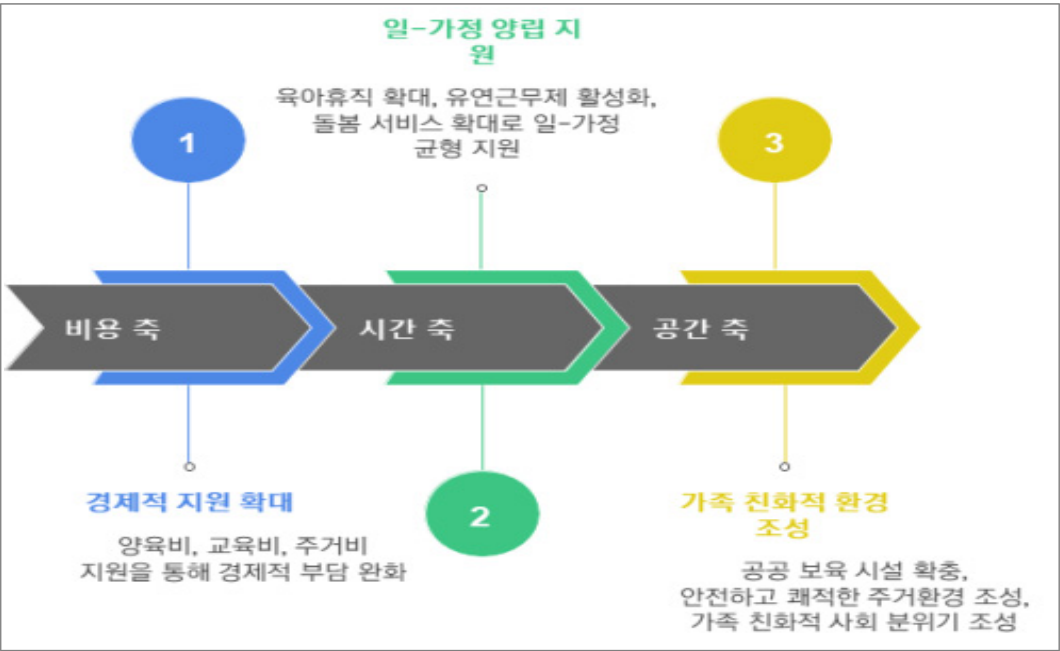
1. 저출산 인구정책 전략 프레임
2. 전략프레임 기반 핵심과제

제5장 정책 제언

1. 저출산 인구정책 전략 프레임

- 2025년 충남도민 440명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에 따르면, 도민들은 저출산의 심각성을 전반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세대·직업·가구 유형에 따라 체감 수준과 정책 요구가 다르게 나타났다. 특히 기혼자, 여성, 자녀 양육자, 정규직 근로자층에서는 돌봄과 일의 병행이 어렵다는 응답이 많았고, 일·가정 양립 제도 확대와 사회 인프라 구축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지목되었음
- 반면, 청년층과 미혼자는 결혼과 출산보다 경제적 기반 형성(일자리·소득)과 주거 안정을 우선시하였음. 이러한 인식은 충남 저출산 정책이 단순한 출산장려에서 벗어나, ‘경제적 안정 기반 → 돌봄 공공성 강화 → 지역 정착형 삶의 질 개선 → 가족문화 인식 전환’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프레임을 구축해야 함을 시사함.
- 즉, 저출산 현상은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구조적 환경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경제·주거·돌봄·문화가 통합적으로 작동하는 생애주기형 정책 설계가 필요함을 보여줌. 특히 충남 남부권에서 저출산 문제를 더 심각하게 인식한 결과는, 지역 불균형 해소와 농촌형 정착 지원 정책의 강화 필요성이 강조된 결과로 해석됨. 이에 충청남도 저출산 인구정책에 대한 도민 인식조사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저출산 인구정책 수립을 위한 전략 프레임은 비용·시간·공간 3축 병행으로 도출됨
- 첫째, 비용축(경제적 지원 확대)은 출산·양육에 드는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데 초점을 둬.
 - 도민들은 가장 시급한 정책으로 “주거 안정”과 “양육비·교육비 지원 확대”를 주목하였음. 특히 30~40대 기혼층에서 주거비·보육비 부담이 출산 기피의 핵심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농촌·남부권 응답자일수록 이러한 부담을 더 크게 체감하였음
 - 따라서 경제적 지원은 단발성 출산장려금이 아니라, 주거·보육·교육비의 장기적 경감체계로 발전되어야 함
- 둘째, 시간축(일·가정 양립 지원)은 일과 양육의 병행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여건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둬

- 조사에서 기혼 여성층과 정규직 근로자층이 공통적으로 “육아휴직 제도 활용의 어려움”과 “돌봄 공백 시간대의 부족”을 지적하였음. 이에, 유연근무제, 시간제 돌봄, 심야·휴일 돌봄 서비스 등 시간기반 정책의 강화가 필요함. 충남도가 추진 중인 ‘풀케어 돌봄체계(24시간 돌봄서비스)’는 이 축의 핵심 실천전략으로 기능할 수 있음



[그림 5-1] 충청남도 저출산 인구정책 전략 프레임

- 셋째, 공간축(가족친화적 환경 조성) 은 생활권 내에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주거·공동체 환경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함

[표 5-1] 충남도민 인식조사 결과 대응전략 프레임 및 정책적 시사점

인식조사 결과		대응 전략 프레임	정책적 시사점
청년층	경제·주거 불안, 혼인 기피	경제·주거 안정 프레임	청년 정착형 일자리·신혼부부 주거비 지원
기혼·여성	돌봄과 일 병행 어려움	돌봄 공공성 확장 프레임	풀케어 돌봄센터 확대, 가족돌봄 인프라 구축
남부권	저출산 심각성 인식 높음	지역균형 프레임	농촌 정착형 귀농·귀촌·주거복합 모델
전체	사회 인식 개선 필요	가족문화·인식 전환 프레임	도민 참여형 캠페인, 세대 통합형 가족정책

2. 전략프레임 기반 핵심과제

- 전문가 델파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략프레임별 추진정책을 필요도와 시급성이 높은 핵심추진군, 필요도는 높지만 시급성은 낮은 중기 개선군, 필요도는 낮지만 시급도는 높은 단기 보완군, 필요도와 시급성이 모두 낮은 장기 검토군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음

1) 필요도와 시급성이 높은 핵심추진 정책

- 정책에 대한 필요도와 시급도가 모두 높은 핵심추진군은 정책 효과성과 긴급성이 모두 높아 즉시 추진이 필요한 정책을 의미함. 비용축인 경제적 지원으로는 ‘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와 ‘청년 이전·이사비 지원’사업이 도출되었음. 시간축인 일-가정 양립지원으로는 ‘도-기업 연계형 돌봄 플랫폼 구축’, ‘야간·휴일 돌봄 서비스 확대’ 등의 사업이 주요 내용으로 도출됨. 마지막 공간축으로 가족친화적 환경조성으로는 ‘산모·소아 공공의료원 운영’과 ‘지역 정착형 일자리·주거 복합단지 조성’사업이 도출됨
- 경제적 지원으로 제시된 ‘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와 ‘청년 이전 이사비 지원’사업은 충남도에 정주하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삶의 기초적 안정과 출산 유인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임. 따라서 결혼과 출산을 결정하는 초기 단계에서 경제적 장벽을 완화하고 충남도에 정착할 수 있는 인구유인정책으로 적용 가능할 것으로 봄
-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으로 제안된 두 정책은 근로시간 구조적 개선과 돌봄 연계로 출산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데 의미가 있을 것으로 봄.
 - 목적: 일하는 부모가 돌봄 부담 없이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추진방향: 돌봄공백 감소를 통해 여성의 경력단절을 최소화 하며 중국에서 양질의 노동력 확보
- 마지막으로 공간-인프라 영역은 저출산 정책이 단순히 출산장려가 아닌 삶의 터전을 기반으로 한 인구정책을 지향함을 의미함. 주거와 의료, 돌봄, 일자리가 하나의 생활권역 내에서 통합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함.
 - 목적: 의료접근성 개선으로 충남도에 거주함으로 인해 발현될 수 있는 의료접근성의 불안요인을 감소시키고, 지역 정주여건 개선으로 청년과 신혼부부의 유입을 촉진시킴
 - 추진방향: 공공의료원은 보건과 돌봄+심리상담의 복합 기능으로 발전 되어야 하고, 복합단지는 “Work-Life-Care Village” 개념으로 확장하여 지역균형 발전의 거점화 추진되어야 함

[표 5-2] 델파이 조사 결과 도출된 전략프레임별 핵심추진 정책

구분	정책명	내용 요약	추진 방향
경제적 지원	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	주거·출산 통합 지원, 결혼비용 완화	도비+국비 결합형 단기 핵심사업
	청년이전·이사비 지원	귀향·이주 청년 정착 촉진	인구유입형 생활비 지원
일·가정 양립	도-기업 연계형 돌봄플랫폼 구축	기업-지자체 협약형 돌봄공유 모델	시간권 협약제, 기업인센티브 연계
	야간·휴일 돌봄 서비스 확대	맞벌이·한부모 가정 부담 경감	시군 통합 돌봄센터 확충
공간·인프라	산모·소아 공공의료원 운영	출산·양육 의료안전망 핵심시설	충남권 국립의료원형 모델 구축
	지역 정착형 일자리·주거 복합단지	일자리·주거 복합형 청년정착단지	도심형 시범 + 농촌형 시범 병행

- 이상과 같이 델파이 조사 결과 도출된 핵심추진 정책을 토대로 보다 실효성 있는 사업에 대해 각 영역별로 제안하고자 함. 해당 사업은 위에 도출된 정책을 기반으로 충남도에서 추진 가능한 정책으로 전환하여 제안됨

가. 경제적 지원: 청년·신혼부부 대출 실행 문턱 완화 '선이자보전 대출지원'

- '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와 '청년이사비 지원'의 정책을 현실가능한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현재 충남도에서 실행되는 이자지원 사업은 청년이 이자를 선납입 후 지원(30-50%)하는 방식으로 운영됨. 이는 현금유동성이 낮은 청년의 경우 이 사업을 이용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협약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청년이 대출 실행시점부터 '충남도 지원분'이 차감된 최종 이자율만 납부하도록 시스템을 변경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즉, 청년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충남도의 최종 지원 이자율이 이미 차감된 금리로 계약이 체결되기 때문에 종국에는 이자율 경감이라는 지역주도형 주거금융정책으로 정책으로 자리할 수 있음

[표 5-3] 충남형 청년주택 대출이자 선지원 사업

구분	내용	기대효과
은행협력'이자보전 선지원 확대	충남도 지원분이 차감된 최종 이자율만 납부하도록 시스템 변경	청년의 현금 부담 경감 및 정책 만족도 극대화

- 다만, 청년 신혼부부 주택대출 선이자지원사업은 이용자 측면에서 실효성이 높지만, 이자를 미상환하는 경우 금융기관과 충남도의 재정적 손실이 나타날 우려가 있음. 이는 지방재정법 제17조(보조금 지급 제한)에 저촉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도적 제어장치가 동반되어야 함

[표 5-4] 충남형 청년주택 대출이자 선지원 사업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리스크

구분	발생 가능한 문제	위험요소
대출실행의 시점	청년·신혼부부의 소득 증빙 부족, 과도한 대출 신청	금융기관 (신용평가 리스크)
선이자보전 지급 시점	도가 선납 후, 실제 상황 불이행 발생	도 재정(보전금 회수불가)
대출기간 중	중도 해지, 연체, 전출 등	금융기관·도 공동 리스크
사후 정산 시점	대출 목적 외 사용, 허위 서류 제출	행정적 부정수급

- 위와 같은 리스크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 책임’과 ‘도의 책임’, ‘수혜자의 책임’을 분리하여 통제장치를 마련해야 함. 알레로, ‘보증연계형 이자보전’사업을 추진하거나, ‘상환불이행시 공동분담 규정’을 금융기관과 협약에 명시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음
- 또한 ‘선이자 보전액 예치형 지급’을 통해 이자를 바로 지급하지 않고 대출계좌에 예치 후 월별 자동 차감되는 형식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고 고려할 수 있음
- ‘대출금 사용 목적 과 거주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해당 목적에 맞게 재원이 사용되고 있는지 감독이 필요함. 마지막으로 ‘재정상한 및 보전한도 설정’을 통해 재정 운영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음

[표 5-5] 충남형 청년주택 대출이자 선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제어장치(안)

구분	제어장치	조례 반영
보증연계형 이자보전 (금융책임 전가)	한국주택금융공사(HF)·신용보증재단 보증상품과 연계, 보증서 없는 대출은 지원 제외	(지원대상)에 “보증기관 보증서를 제출한 대출만 해당” 추가
상환불이행 시 공동분담 규정	연체·상환불능 시 손실액의 50% 금융기관 부담, 50% 도에서 회수조치	(협약)에 “금융기관의 손실공동부담 조항” 명기
선이자보전액 ‘예치형 지급’	이자를 바로 지급하지 않고, 대출계좌 내 예치 후 월별 자동차감(불이행 시 잔액 회수 가능)	시행규칙에서 정산방식 규정
대출금 사용목적·거주지 모니터링	도-금융기관 간 데이터 연계, 1년 단위 사용점검 및 거주확인(주민전입 유지)	(환수 및 중단)에 명시
재정상한 및 보전한도 설정	1인당 최대 1천만원 대출, 연 이자보전 한도 60만원(2년)	(재원조달) 하위 조항으로 명시

- 그러나 사업의 안정성을 위해 위와 같은 제어장치를 마련할 경우, 프리랜서나 플랫폼 종사자, 일용직 및 사회초년생 등은 해당 사업의 수혜를 받을 수 없는 한계가 있음. 이는 다시 주거지원 정책에 있어 취약계층 청년과 신혼부부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게 됨
- 이를 위해 ‘보증연계형’을 원칙으로 하되, 비보증대상자에 대해서는 ‘특례형 부분보전’제도를 두어 취약청년과 신혼부부의 접근성을 확보하고 재정안을 균형을 맞추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이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보증연계형’과 ‘비보증형’을 보완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표 5-6] 충남형 청년주택 대출이자 선지원 사업의 이중 트랙 설계방안

구분	보증연계형 (일반형)	비보증형 (취약청년대상 위험완화형)
대상	신용등급 4등급 이상 정규직 종사자	신용등급 5등급 이하 프리랜서, 사회초년생 등
이자보전율	최대 100% 보전	최대 30% 보전
제어장치	HF-신보 보증 의무	금융기관 심사 강화 상환능력 확인 후 지원 연체 시 즉시 중단

- 사업을 실제 운영할 때는 제어장치를 병행함으로써 리스크를 최소화 해야 함. 이를 위한 대안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음

[표 5-7] 충남형 청년주택 대출이자 선지원 사업 실제 운영시 제어장치

구분	제어장치
비보증형 상한 설정	지원총액의 20~30% 이내에서 비보증형 한도 제한
기금 기반 리스크 보완	선이자보전기금의 5%를 '손실충당계정'으로 적립
정기 모니터링	반기별로 연체·해지현황 점검 후 예산 조정
출산, 혼인 연계형 인센티브	일정 기간 내 결혼·출산 시 이자보전률 상향(예: 50%→80%)
협약기관 공동분담제	연체율 3% 초과 시 금융기관이 손실 30% 분담 조항 포함

- 충남형 청년주택 대출이자 선지원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조례제정이 선결되어야 함. 해당 조례는 지원대상과 지원구조 및 유형, 금융기관 및 보증기관과의 협약 등의 내용이 포함 되어야 하고, 지원중단 및 환수 등의 내용도 제시함으로써 부당이용에 따른 수혜자의 책 무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되어 조례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충청남도 청년·신혼부부 주택 대출이자 선지원 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며,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주거금융정책과 연계한 실효성 있는 이차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혼인·출산을 촉진하고 지역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 제1호에 따른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 중 미혼인 자 또는 신혼부부를 구성하는 자를 말한다. 2. “신혼부부”란 「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의 부부를 말한다. 3. “선이자보전”이란 대출 실행 시점에 충청남도 또는 시·군이 이자의 일부를 계산하여 참여금융기관에 선지급하고, 해당 금액을 대출계좌에 예치하여 월별 이자 납입 시 자동 상계 처리함으로써 대출자의 초기 이자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 4. “보증기관”이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충남신용보증재단 등 도지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대출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참여금융기관”이란 도지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본 사업의 대출 실행, 이자 선지급금 예치 및 정산 등의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6. “중복지원”이란 중앙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동일 목적의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본 조례에 따른 지원이 중복되는 경우를 말한다.

충청남도 청년·신혼부부 주택 대출이자 선지원 조례안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안정과 혼인·출산 장려를 위하여 이자 선지원 사업을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하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군, 참여금융기관 및 보증기관과의 상호 협약을 통하여 사업의 재정 안정성과 운영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사회보장제도의 중복 또는 과잉지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시·군과 협력하여 주거복지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원대상자 관리 및 중복확인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제4조 (지원대상)

- ①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 또는 신혼부부 가구로 한다.
1. 신청일 현재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대출 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전부터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이 유지된 자
 2. 참여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임차보증금 또는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받은 자
 3. 도지사가 고시하는 소득·자산 기준(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50%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특성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180%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에 해당하는 자
 4. 중앙정부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의 동일 목적 이자지원사업을 받지 아니한 자
-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우선지원 또는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1.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거나 해당 지역으로 전입하는 자
 2. 혼인·출산·다자녀 가구
 3. 충청남도 소재 직장 근무자 또는 도내 창업자
- ③ 도지사는 신청인의 중복지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금융기관·지자체 간 정보연계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구조 및 유형)

- ① 선이자보전은 대출의 성격 및 보증 여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2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1. 보증연계형 (표준형): 보증기관의 보증을 받은 대출에 대하여 이자율의 100분의 100 이내(전액) 또는 일정 비율을 선지원할 수 있다.
 2. 특례비보증형(취약계층형): 보증기관의 보증이 곤란한 보호종료 아동(청년), 프리랜서, 비정규직, 사회초년생 등 취약한 경제 주체를 대상으로 이자율의 100분의 50 이내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비율은 지원비율은 재정여건, 대상자별 주거비 부담 수준, 사업 연체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지사가 매년 고시한다.
- ③ 동일 대출 건에 대하여 제1항 제1호와 제2호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 ④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제6조 (지원내용 및 한도)

- ① 도는 대출 실행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된 이자를 참여금융기관에 선지급하고, 해당 금액은 대출계좌 내에 "선지급 이자보전 계정"으로 예치되어 월별 이자 납입 시 해당 계정에서 자동 차감하는 방식으로 정산한다.

충청남도 청년·신혼부부 주택 대출이자 선지원 조례안

- ② 선지원 이자의 한도는 대출 잔액 1억원당 연 6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자율 변동에 따른 지원금액의 변동은 제한할 수 있다.
- ③ 지원기간은 최초 2년으로 하되, 출산 또는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최대 2회까지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 ④ 지원금은 도비와 시·군비로 공동분담하며, 구체적인 분담비율과 부담방식은 도와 시·군 간의 협의 또는 시행규칙에서 정한다.

제7조 (금융기관 및 보증기관과의 협약)

- ① 도지사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재정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참여금융기관 및 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협약에는 다음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출 및 이자보전 절차, 선지원금의 예치·운용 및 정산 방식
 2. 지원 대상자의 연체 및 상환불이행 발생 시 손실분담 비율 및 책임 범위.
 3. 지원대상자의 자격검증, 중복지원 여부 확인, 개인정보 보호
 4. 지원금 환수 및 협약 위반 시 조치
 5. 선지급 이자보전금의 운용으로 발생한 이자의 처리기준
 6. 이자율 변동 시 정산 및 재산정 절차

제8조 (지원중단 및 환수)

-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대출 목적 외 사용,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대출 연체가 3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상환 불이행이 발생한 경우
 3. 지원이 개시된 후 1년 이내에 도내 거주요건을 상실한 경우 (타 시·도 전출 등)
 4. 지원요건 중 소득·자산 기준을 현저히 초과하게 된 경우
- ② 참여금융기관은 분기별로 지원대상자의 상환현황 및 연체 발생 현황을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도지사는 부정수급 또는 중복수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원금 전액을 환수하고 향후 3년간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④ 누구든지 부정수급 사실을 인지한 경우 신고할 수 있으며, 도는 신고자 보호 및 포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9조 (재원조달 및 손실충당계정)

- ① 본 사업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충청남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2. 「지방소멸대응기금」, 국고보조금 등 중앙재정 지원금
 3. 시·군 재원 및 민간출연금
- ② 도는 제1항의 재원 중 총 지원금의 5% 이내를 손실충당계정으로 적립하여 연체·상환 불이행 등에

충청남도 청년·신혼부부 주택 대출이자 선지원 조례안
대비한다. ③ 손실충당계정의 운용 및 정산기준은 도지사가 정한다. ④ 도는 매 회계연도 사업비 총액을 예산규모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성과평가 및 보고) ① 도지사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사업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혼인율, 출산율, 정주율, 연체율, 수혜자 만족도 등 핵심성과지표(KPI)를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군은 사업실적 및 환수결과를 분기별로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평가결과를 도 홈페이지 및 도보를 통해 공시하여야 한다. ④ 도의회는 행정사무감사 시 본 조례에 따른 사업의 집행실적을 포함하여 점검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시범사업) 도지사는 사업 안정성 및 효과 검증을 위해 3개 시·군을 선정하여 2026년까지 시범사업을 우선 실시할 수 있다. ③ (재검토) 도지사는 3년마다 이 조례의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제도개선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 「충청남도 청년·신혼부부 주택 대출이자 선지원 조례」는 재정 손실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7조에 손실 공동분담 규정을, 제9조에 손실충당계정 설치 근거를 명시하였음. 또한 정책의 형평성과 포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증연계형과 특례비보증형으로 사업 구조를 이원화하여, 보호종료아동 등 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층까지 포괄하도록 설계하였음
- 아울러 본 조례를 근거로 추진되는 사업은 「지방재정법」 제17조상 선지급·미상환 리스크를 보증연계, 손실공동분담, 예치형 정산, 환수체계 등을 통해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른 중앙정부 협의에서도 중복지원 방지, 정보연계, 평가·공시 등의 근거를 조례 및 시행규칙에 명시함으로써 제도적 타당성과 중앙협의 수용 가능성을 확보하였음

서울시 청년·신혼부부임차보증금 사업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의 경우, "본인부담금리 = 대출금리 - 서울시 지원금리(연 2.0%)" 로 계산됩니다. 이는 지자체의 지원금(2.0%)을 대출 계약 시점에 이미 반영하여, 신청자가 매월 은행에 내는 이자액 자체가 줄어드는 상태로 시작하게 합니다.

효과: 매월 납부하는 이자가 즉시 줄어들기 때문에, 신청자는 후이자 지원처럼 큰 목돈을 먼저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없습니다.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복합 마련이 어려운 근로청년 및 취업준비생의 소득에 높은 주거비용 부담완감을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을 지원 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아래 첨부된 공고문 및 [붙임] [신청방법] 근로 및 소득준입서류 등확인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신규 신청하기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현황 신청하기

주최서 전파확인

카드뉴스 보기

01 사업명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02 사업목적

복합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임차보증금 대출 및 이자를 지원함으로써 소득에 높은 주거비용의 부담완감

03 신청대상자

만19~39세 이하의 청년

04 용자용도

임차보증금

05 용자지원 조건

- 용자취급은행: 하나은행
- 용자취급대도: 최대 2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하)
- *2023.5.2 신규신청지역: 제철
- 서울시 지원 금리: 대출금의 연 2.0%
- 본인담보금리: 신안역 COP(96개월 기준금리) + 1.45%(가산금리) - 2%(서울시 지원금리) 예시) 2.3, 6.15 기준, 3.44% + 1.45% - 2% = 2.59%(6개월 변동)

06 대출 및 이자지원 기간

- 기간: 22.3.31.까지 대출 실행자: 만40세가 되는 날부터 이자지원이 중단됨
- 변동: 22.4.1 이후 대출 실행자: 만40세가 되는 날에 포함된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일(최대22년까지 이자지원)
-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60과 월당 6개월 - 2년
- *기간: 신청자의 경우 대출금 기준 상환자가 만 50세인 기간의 50%를 이상 납입한 이후 잔여기간을 임대차 계약 및 대출기간으로 하여 대출실행과 서울시 이자지원이 가능함
- 횟수: 제한 없이 대출기간 협산 최대 6년까지 주거연장 가능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신혼부부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더 나은 주거환경과 소득에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이탈 온 주의사항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은 신혼부부 1명에게 한해 최초 1회만 지원이 가능한 제도로 신청 또는 신청 후 원상 또는 신청이 가능하여 대출상환 후 전액상환 할 경우 복신청이 불가합니다.

공지사항 바로가기

신혼부부 용자신청서 신청하기

주최서 전파확인

카드뉴스 보기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바로가기

*이탈 전담을 하는 분들은 다시 주최서 신청을 할 필요 없이, 대출받은 은행 내방하여 상담받으면 됩니다. (해당 대출은 용자에 있지 않는 대출이므로, 대출 연장 시에도 문제 없습니다.)

01 사업명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02 사업목적

주거마련에 대한 부담 완화를 증진하기 위해 대출금과 이자 부담을 줄여주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성을 높여주는 데에 있다.

03 용자지원조건

용자취급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용자취급대도: 최대 3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하) *2023.5.2 신규신청지역: 제철

04 용자용도

임차보증금(전세 보증금)

나.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해 기업과 시간권 협약제 및 돌봄 인증제도 운영

- 충남도는 저출산 문제는 여성 경력단절과도 연결되어 있음. 즉,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재사회화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낮은 출생률과 인구감소는 해결되기 어려움. 그러나 도내 중소기업은 가족친화경영은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임
- 이에 공공·민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근로시간의 유연성 확보하며 돌봄 인프라 접근성 향상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형 일·가정 양립정책이 필요함. 이를 위해 근로시간 유연화와, 참여기업에 행·재정적 인센티브 제공, ‘민간기업 참여형 가족친화 제도 확산’이 요구됨.

[표 5-8] 시간권 협약제 및 기업 돌봄 인증제도 등에 대한 정책 제언

구분		내용
시간권 협약제 도입	개념	기업과 지방정부가 협약을 통해 근로자의 시간조정권을 보장하고, 근로시간 단축·시차출퇴근·재택근무 등을 제도화
	주요내용	① 참여기업은 시간권제 도입 시 도의 인증 획득 ② 근로자에게 일정 범위 내에서 '자율근무시간권' 부여 ③ 참여기업에는 세제·행정 인센티브 제공
	기대효과	- 근로시간 유연화로 출산·양육기 여성의 경제활동 지속 - 기업의 가족친화 이미지 제고 및 인력유지율 상승
기업 돌봄인증제 신설	개념	가족친화·돌봄친화 경영 실천 기업에 대해 지방정부가 인증을 부여하고, 공공조달·홍보·세제혜택 등 인센티브 제공
	인증기준	① 시간권제 도입 여부 ② 돌봄휴가 및 대체인력 지원 ③ 사내 보육공간 또는 돌봄 연계 서비스 운영 ④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
	추진방식	- 충남도 주관 인증제 운영, 고용노동부 가족친화인증제와 연계 - 시·군 단위의 참여기업 발굴 및 컨설팅 지원
	기대효과	- 민간의 자율적 참여 유도 - 일·가정 양립 문화의 확산 - 지역 내 가족친화기업 생태계 조성
AI기반 돌봄 예약·배정 시스템 구축	개념	AI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돌봄 수요(아동·노인·장애인 등)와 돌봄인력(요양보호사, 방문간호사 등)을 실시간 매칭
	기능구성	① 수요자 앱·웹 접수 ② AI 스케줄링 알고리즘에 의한 배정 ③ 서비스 제공 후 만족도·품질 피드백 반영
	연계방안	- 충남사회서비스원 돌봄인력DB 연동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용센터 등과 데이터 협약
	기대효과	- 행정 효율성 제고 및 인력낭비 최소화 - 긴급돌봄 대응 시간 단축(현재 평균 3일→1일 이내) - 돌봄서비스의 품질·접근성 향상

- ① 시간권 협약제 ×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인증(연계형)
- 이 사업은 근로시간 유연화(시차출퇴근·선택근로·재택·압축근무 등)와 돌봄 연계로 경력단절 감소, 출산 지속 가능성 제고를 목표로 추진됨
- 충남 소재 5인 이상 모든 민간사업장(우선: 중소·중견)을 대상으로 함
- (도) 시간권 협약제 운영지침 고시 → 우수기업 인증 항목에 '시간권 필수/가점 규정 신설
 - (기업) 내부규정 개정·협약 체결 → 근로자 개별 시간권 부여(월/주 단위 선택권)
-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인센티브 패키지는 다음과 같이 설계 가능함
- 중앙 연계(직접수혜): 고용노동부 유연근무 장려금 유형별 신청(기업이 수령)
 - 도 인센티브(매칭·가점)
 - 인증기업 도지사 표창/홍보, 도내 공모사업 가점, 컨설팅·교육 무상 제공
 - 육아휴직 대체인력 보조·돌봄바우처 가점(시군 사업과 연동)
 - 행정비용: 도비(소액)로 컨설팅·서식·점검 지원(기업 직접보조는 최소화해 지속가능성 확보)
- 이 사업 추진을 위해 조례(또는 규칙)이 제·개정되어야 하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목적조항: 일·가정 양립 촉진 및 저출산 대응
 - 정의조항: '시간권', '유연근무', '돌봄연계'
 - 인증·협약: 우수기업 인증 항목에 '시간권 운영률' 포함, 미준수 시 갱신 반려
 - 인센티브: 공공조달·도 공모사업 가점, 홍보·컨설팅 지원
 - 운영지침: 표준협약서(근무유형·대상·신청·승인·기록관리), 분쟁조정 절차, 실적보고·점검 체크리스트
- 사업 추진에 있어 리스크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유사사업 등 중복제도 피로감을 낮추기 위해 '중앙 가족친화인증과 상호가점·서식 호환' 하도록 하고, 형식적 운영 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 '무작위 점검+로그(근무이력·전자서명)' 등 모니터링이 진행되어야 하며, 영세기업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표준서식·컨설팅 무상, 복잡서류 최소화' 등의 요건이 필요함

다. 가족친화적 환경조성: 공간-인프라 구축 돌봄정책 '틈새·응급'우선전환

- 현재 충남도의 돌봄 정책은 시설 중심의 주간 돌봄에는 어느 정도 대응하고 있으나, 정규 시간 외(야간, 휴일)에 발생하는 아픈아이 긴급 의료 돌봄 공백에 취약함. 이는 일하는 부모의 업무 중단과 돌봄의 불안정성을 야기하는 저출산 문제의 핵심 '틈새'임. 현재 소아과 야간 및 휴일 진료는 대형 응급실에 집중되어 있음.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달빛병원'

이 운영되고 있지만, 이마저 천안에 두 곳, 아산과 공주 등 도시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농
어산촌 지역민의 접근성이 낮음

- 이에 일본의 보건소 중심 권역별 심야 소아과 운영 모델을 벤치마킹하여, 야간 및 휴일에
도 안정적으로 진료와 연계 돌봄을 제공하는 '아동 건강 돌봄 허브'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365일 24시간에 준하는 응급·틈새 의료 돌봄 공백 ZERO를 목표로 '돌봄정책 틈새·응급
우선전환'을 제안하고자 함. 일본은 보건소 기반 권역별 거점을 통해 지역 분산형 응급 대
응체계를 구축하였음. 이를 벤치마킹하여 충남형 '틈새·응급' 우선전환 돌봄시스템을 구축
할 필요가 있음
- 돌봄정책 '틈새·응급' 우선 전환 사업은 야간이나 휴일 아픈아이 돌봄을 위한 상시 시스템
을 구축하는 것으로 권역별 긴급돌봄 허브와 바우처 사업을 우선 시행할 수 있음. '긴급돌
봄 허브+바우처'는 풀케어 정책의 주요 내용인 24시간 돌봄, 틈새돌봄, 아픈아이 돌봄을
더욱 효율적이고 유연하게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 방안으로 충청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풀케어 정책과 연계될 수 있음

[표 5-9] 돌봄정책 '틈새·응급' 우선전환사업의 핵심전략 : 허브 & 바우처 연계모델

전략구분	정책목표	주요내용
의료거점 구축	권역별 야간·휴일 의료돌봄 허브 지정	• 보건소 주도 하에 지역 병·의원과 협력하여 심야 진료(24시까지) 전담 거점 확보.
돌봄연계 강화	긴급돌봄 패키지 바우처 신설	• 진료와 동시에 병원 동행 및 간병 돌봄이 가능한 전용 바우처를 제공하여 부모의 부담 즉시 해소

- 돌봄정책 '틈새·응급' 우선전환에 대한 타당성과 핵심 추진방안은 다음과 같음

[표 5-10] 돌봄정책 '틈새·응급' 우선전환사업의 타당성 및 핵심 추진방안

타당성	핵심추진방안
• 수요자 긴급성 충족: 정규 시간 외 돌봄(야간/휴일)과 예상치 못한 돌봄(아픈아이)은 돌봄 중단 가장 큰 원인. 이를 상시화하는 것은 필수적임 • 24시간 시설 vs. 허브+바우처: 24시간 시설은 비효율적이며 낮은 이용률로 비판받는 반면, '허브+바우처' 모델은 유연성과 효율성이 높음. • 지표 관리: 이용 대기시간 및 재이용률을 핵심성과지표(KPI)로 관리하여 정책 실효성을 담보.	• 권역별 긴급돌봄 허브 지정: 기존 지역아동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등 유휴 시설 중 거점 기능을 수행할 기관을 선정하고, 24시간 시설 신설 대신 '긴급돌봄 전문인력'을 배치 • 긴급 바우처 예산 확보: 병원동행/병상돌봄을 포함한 긴급 돌봄에 한해 사용 기한이 짧은 '긴급 돌봄 바우처'를 신설하여 신속한 이용을 유도 • KPI 관리 체계 구축: 긴급돌봄 허브 평가 시 대기 시간(최소화), 재이용률(만족도 반영)을 반영하고 우수 기관에 인센티브 부여.

- 긴급 돌봄 패키지 바우처 신설 및 연계하여 '병원 동행+바우처' 도입을 고려할 수 있음. 아동이 갑자기 아파 병원 진료가 필요할 때, 부모의 출근 및 업무를 위해 '긴급 돌봄 전용 바우처'를 신설하여 운영할 수 있음. 바우처는 병원 진료 동행, 투약 관리, 응급 간병 돌봄(집/병상) 등 의료 행위 외의 모든 긴급 돌봄 활동에 사용할 수 있음.
-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스톱 매칭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함. '아동 건강 돌봄 허브'를 방문하거나 전화·온라인으로 진료를 예약할 때, 동시에 긴급 돌봄 인력 매칭 시스템을 연계함. 이는 진료 후 즉시 돌봄 인력이 투입되어 부모는 안심하고 업무를 지속하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함
- 다만, 해당 사업은 충남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데 재정과 인력의 한계가 나타날 수 있음. 이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달빛병원'을 확대 운영하되, 바우처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응급 야간 소아병원 사례

일본 “어린이 심야병원 운영“

- 생후 1개월부터 6세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응급의료 안내 또는 응급대응 서비스 제공
- 어린이 응급 웹사이트를 운영, 소아 응급상황 시 대처방법이나 야간·휴일 진료소 정보를 안내, 상담전화 등



<https://kodomo-qq.jp/>

국내 “달빛 어린이병원“

-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달빛어린이병원은 평일 야간 및 주말/공휴일에도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진료
- 경증 소아 환자가 응급실 대신 방문하여 신속하고 전문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정된 곳
- 충남도는 천안(2곳), 아산(1곳), 공주(1곳)에 운영 중



<http://www.seoulpost.co.kr/news/30095>

2) 필요도는 높고 시급성은 낮은 중기 개선군

- 본 분석에서는 정책의 필요도는 높으나, 상대적으로 시급성이 낮은 과제군을 중심으로 도출하였음. 그 결과, 경제적 지원측에서는 ‘청년 임대주택 품질개선’과 ‘일·생활균형 인증제 도입’이, 일·가정 양립측에서는 ‘청년 인턴제·일경험 확대’와 ‘장애인·노인 방문건강관리’가, 공간·인프라 측에서는 ‘신생아 중증치료센터 설치’와 ‘농촌 청년창업 및 빈집활용’이 주요 정책으로 제시되었음
- 이 정책은 그 중요성이 낮다는 것으로 해석하기 보다, 정책 추진의 제도·행정적 기반이 충분하지 않은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됨. 이에 단기 성과주의 보다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제도 마련을 목표로 전략을 선회해야 함
- 충청남도는 이러한 과제들을 중기 핵심 개선군으로 설정하고, ① 관련 법·제도 정비, ② 민간 참여기반 확충, ③ 중앙정부 공모사업 연계 및 국비 확보를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함

[표 5-11] 충남도 저출산 인구정책의 필요도는 높으나 시급성은 낮은 중기개선 추진 정책

구분	정책명	내용 요약	추진 방향
경제적 지원	청년 임대주택 품질개선	주거 품질·관리 개선 중심	중기 예산 반영, 주거복지센터 연계
	일·생활균형 인증제 도입	기업참여형 가족친화 인증제	도-고용부 협력 인증제도 신설
일·가정 양립	청년 인턴제·일경험 확대	고용안정 및 경력단절 예방	도내 기업 협약형 일경험 트랙 구축
	장애인·노인 방문건강관리	가족돌봄 완화형 방문서비스	보건소-복지관 연계형 통합모델
공간·인프라	신생아중증치료센터 설치	고비용 의료시설 구축 필요	중앙정부 공모·국비 확보 필요
	농촌 청년창업 및 빈집활용	농촌정착 및 인구순환형 모델	농촌형 인구활력특화사업과 결합

가. 경제적 지원 사업

① 청년 임대주택 품질 개선사업

- 충남 지역 청년층의 주거안정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기존 공공임대주택은 노후화·편의시설 부족·관리 사각지대 등의 한계가 지적되고 있음. 특히 도심 외곽에 위치한 임대단지의 경우 입주율 저하와 주거만족도 하락이 확인되어, 단순 공급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품질과 관리 중심의 주거복지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임
- 이에 공공임대, 행복주택 등 청년 대상 임대주택의 품질 개선과 서비스 고도화가 요구됨. 주요 추진 내용으로는 시설 리모델링, 공용공간 개선, 주거복지센터와의 연계 강화를 통한 관리체계 혁신 등이 포함됨
- 다만, 사업 추진시 시설개선 중심에서 벗어나 입주민 서비스형 관리체계 병행 필요하고 시설 리모델링 시 도심·농촌형 구분에 따른 모듈형 개선표준안이 마련되어야 함

[표 5-12] 청년 임대주택 품질 개선사업 추진전략 및 효과

구분	내용
주요내용	• 노후주택 리모델링 및 에너지효율 개선 • 공용공간(세탁·스터디·커뮤니티) 리뉴얼 • 주거복지센터를 통한 입주민 상담·관리·생활지원 강화
추진전략	• 중기 예산 반영형으로 3년 단위 리모델링 로드맵 수립 • LH·충남개발공사 협약을 통한 공공·공기업 공동 관리체계 구축 • 주거복지센터 연계형 모델로 입주상담·이용자 관리·시설 유지관리 일원화

② 일·생활균형 인증제 도입

- 가족친화인증기업은 증가하고 있지만, 민간기업의 자발적 참여와 실효성은 여전히 미미함 실정임. 이에 기업의 일-생활 균형 환경조성을 위해 충남형 인증제도 도입을 고려할 수 있음. 기업문화 전반에 가족친화적 가치와 유연근무 제도를 확산시킴으로써 기업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환경을 조성해야 함
- 다만,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정부에서 추진되는 가족친화인증제와 중복되지 않도록 항목을 조정하고, 가점 부여 및 통합심사체계를 유지하여 제도의 효율성을 높여야 함

[표 5-13] 일-생활 균형 인증제 추진전략 및 효과

구분	내용
주요내용	• '충남형 일·생활균형 인증제' 신설 • 고용노동부 가족친화인증제와 연계 • 시간권 협약제·유연근무제·육아휴직 활용도 등 항목화
추진전략	• 도-고용노동부 협력형 인증제도 신설, 중앙 인증과 상호가점 구조 설계 • 인증기업에 공공조달·도비사업 가점, 세제·홍보 인센티브 부여 • 컨설팅·교육 지원으로 중소기업 참여 진입장벽 완화 • 매년 우수기업 사례 발표·포상으로 정책 인식 확산
기대효과	• 기업 내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 및 여성고용 유지율 향상 • 도내 청년·신혼부부의 지역 내 근속률·정착률 개선 • 민간주도 저출산 대응체계 확립

- 사업추진 과정에서 인증제 설계 시 유연근무·육아휴직 등의 항목을 구체화해야 하고, 중앙 인증제도 항목을 참조하되 지역 특성에 맞게 보완할 필요가 있음. 또한 기업 참여 유인책이 중요한데, 중앙 제도처럼 금융·세제 혜택을 연계하거나 지역사업 참여 가점을 제공하는 방식이 효과적임
- 제도 신뢰성 확보를 위해 인증 유효기간·갱신주기·심사절차 등을 제시 하고, 인증 이후 기업의 실천을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함

나. 일-가정 양립 지원 사업

① 청년 인턴제·일경험 확대 사업

- 충남 지역의 청년고용률은 전국 평균보다 낮고, 경력단절 및 지역이탈률이 높은 상황임. 특히 일경험의 기회 부족이 지역 청년들의 정착 실패와 직업탐색의 한계로 이어지고 있어, '청년 인턴제·일경험 확대 사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본 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지역 내에서 다양한 경력 형성의 기회를 얻고, 지역 기업과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지역 정착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임
- 특히 지역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도내 기업·대학·청년 간 매칭형 인턴제를 확대 운영하는 것이 중요함
- 다만, 중앙정부의 유사 청년고용사업(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과의 중복을 방지하고, 예산 투입 시 단기적인 수당 보조 중심이 아니라 채용연계 및 멘토링 중심의 구조로 설계해야

함. 이를 통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청년 고용의 질적 성과와 장기적 정착 효과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임

[표 5-14] 청년 인턴제·일경험 사업 추진전략 및 효과

구분	내용
주요내용	• 도내 공공·민간기업 연계형 인턴십 및 일경험 프로그램 운영 • 산업단지·지식산업센터 등과 협약하여 청년 인턴 트랙 구축
추진전략	• 충남형 인턴제 통합플랫폼 운영(고용센터+청년정책과+시군 일자리센터 연계) • 기업-청년 매칭형 프로그램 설계, 인턴 수당 일부 도비 보조 • 도내 산업단지·지역기업 중심 현장형 직무훈련+채용연계형 인턴 모델 운영 • 성과형 보조금(정규직 전환율 연동) 적용
기대효과	• 청년층 경력단절 완화, 지역 내 고용유입 강화 • 지역기업 인력난 해소 및 장기근속 유도

② 임신·출산기 개인 맞춤형 지원 정책 ‘맘&대디 코치 1:1 맞춤지원’

- 정부는 방문 건강관리(생애초기) + 산모신생아서비스 + 바우처(국민행복카드) + 현금급여(부모급여)”의 기반을 제공하고 있음. 현행 임신·출산 지원은 다양한 서비스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정보의 파편화와 담당 주체 간의 단절로 인해 '고위험군 연계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특히 산모의 정신 건강(산후우울)은 고위험군 조기 발견 및 치료 연계가 취약함

[표 5-15] 중앙정부의 산모 신생아 관련 유사 사업

사업명	내용	비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 출산가정 대상 방문서비스·바우처 제공	보건복지부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 임신부~만2세 영아 가정 방문·상담·발달 지원	가정방문 간호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 임신 1회당 100만 원(유산·사산 포함) 건강보험 이용권 제공	국민행복카드
부모급여(0~1세)	• 2025년에도 0~1세 영유아 양육 지원(지급방식·금액 공고, 소득요건 無)	현금/바우처
산후우울 선별·관리체계	• 모자보건법 이후 국가·지자체 차원의 분만 전·후 우울 선별(EPDS) 제도화	-

- '맘·대디 코치'는 단순한 정보 제공자를 넘어, 고위험군을 발견하고 의료-상담 기관으로 연계하는 '휴먼 브릿지(Human Bridge)' 역할을 수행함. 이 정책은 현재 충청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플케어 모듈을 반영하여 임신초기부터 산후 6개월 까지 최소 3-5회 대면 또는 비대면 코칭을 제공, 산후우울 선별 검사 및 결과 상담을 추진하는 사업임
- 지역사회 고위험 산모의 치료 연계율은 8.1%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됨(Ro et al., 2021). 또한 산후우울 경험률(68.5%) 및 진단율(6.8%)에 비해 실제 치료 연계율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보고됨에 따라(보건복지부, 2021), 본 사업의 산후우울 고위험 연계율을 핵심 성과 지표로 설정하도록 함
- 보건소·의료원·상담기관 연계하여 맘&대디 지원사업으로 기획하거나, 가족센터에서 제공하는 온가족 보듬상담 사업과 연계, 가정방문·심리상담을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다. 가족친화적 환경조성: 공간-인프라 구축

① 신생아 중증치료센터 설치

- 충남 지역의 고위험 산모 및 신생아의 의료 접근성 문제는 심각함. 도내 권역별 NICU(신생아중환자실) 병상 수가 보건복지부 권고 기준보다 미미하고, 전문의·간호사 부족은 신생아가 다른 지역으로 전원되는 사례만 높이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출산·양육 안전망 확보를 위한 공공의료 기반 강화는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저출산 대응정책은 단순히 출생아 수를 늘리는 접근에서 벗어나, 태어난 아이와 산모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으로 전환되어야 함. 이에 충청남도는 도내 권역별로 신생아 중증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모자보건 안전망을 강화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체계적 지원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다만, NICU(신생아중환자실) 설치사업은 재원마련의 어려움이 있는 만큼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 국비와 도비, 시군비를 비롯하여 민간 자원을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표 5-16] 신생아 중증치료센터 설치의 추진전략과 기대효과

구분	내용
주요내용	• 도내 공공병원 내 NICU 병상 증설 및 전문의 인력 배치 • 산모·신생아 응급이송·회송체계 구축
추진전략	• 중앙정부(보건복지부) 권역·지역센터 공모사업 참여로 국비 확보 • 대학병원·의료원 협력, NICU 의료인력 순환근무체계 마련 • 산부인과·소아과 전문의 확보 및 원격협진시스템 구축 • 출산취약지역 응급후송체계 및 24시간 모니터링센터 운영
기대효과	• 고위험 분만 사망률 감소, 신생아 생존율 향상 • 출산 불안요소 완화 및 도민 의료접근성 개선 • 공공의료 인프라 강화 및 지역균형 의료체계 확립

- 국내에서는 을지대학교병원(대전)이 2015년 권역 신생아중환자실(Neonatal Intensive Care Regional Center)로 선정, 2016년 4월 개원 후 병상 수를 확대하여 충남·세종권역 고위험 신생아 치료 수요 해소에 기여하고 있음
- 해외 연구들을 보면, 초저체중출생아(VLBW) 치료를 위해 병원 간 전원 네트워크 분석 연구에서 고위험 신생아 치료는 단일 병원 설비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권역 내 전원·협진 체계가 중요하다는 시사점을 제공함에 따라 신생아 중증치료센터는 병원 단독 보다 권역센터와 협진 등의 중요성이 부각됨
- 이에 권역형 설치 모델을 추진할 경우, 국내외 모두 한 병원 단독보다는 권역센터 + 협진·회송 네트워크 방식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됨.
- 재원구조 및 인력체계는 순환근무·컨설팅 체계 등 인력·운영 부분이 취약하면 효과가 떨어진다는 연구가 다수 발견됨에 따라 시설 구축뿐 아니라 전문의·간호사 확보가 중요함. 마지막으로 접근성·사망률·전원률 등 객관적 지표에 대한 데이터확보 및 성과분석도 병행되어야 함

참고문헌

- 고용노동부. (2025.2.24.). '지난해 육아휴직 132.535명으로 역대 최고, 남성 사용 비율 최초로 30% 넘어.' 보도자료.
- 국토교통부. (2024). 주거복지로드맵 및 신혼희망타운 조성계획. 국토교통부. <https://www.molit.go.kr>
- 국회예산정책처. (2023).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재정분석 보고서. 국회예산정책처. <https://www.nabo.go.kr>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2022). 법률안 검토보고서 [전자자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 김천신문. (2025, February). 기사: 김천의료원 분만산부인과 운영 재개 및 첫 출생아 사례. 김천신문.
- 부산광역시 서구청. (n.d.). 공공예식장 작은 결혼식 지원 안내. 부산광역시 서구청. https://www.bsseogu.go.kr/board/view.bsseogu?boardId=BBS_0000039&menuCd=DOM_000000103001012000&dataSid=261665
- 대구광역시. (n.d.). 출생축하금 지원 안내. 대구광역시.
- 대전일보/데일리한국 등. (2024-2025). 대전시 인구감소 대응 공모사업 관련 보도. 데일리한국. <https://daily.hankooki.com>
- 대한민국정부. (2006).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
- 대한민국정부. (2011).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새로마지플랜 2015).
- 대한민국정부. (2016).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브릿지 플랜 2020).
- 대한민국정부. (2021).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 대통령직속 균형발전위원회. (2022). (자료 제목 불명).
- 데일리한국. (2024). 저출산 대응 관련 보도자료. <https://daily.hankooki.com>
- 변수정, 엄다원, 안문희. (2023). 한국의 비혼 동거 특성과 정책적 함의.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변수정, 황남희. (2018).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 보건복지포럼, 제 258호, 41-61.
- 법제처. (2025).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25. 7. 14. 자료 인출).
- 법제처. (2025).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25. 7. 14. 자료 인출).
- 보건복지부. (2017. 12. 26.). '보육·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2018~2022) 발표. 보도자료.
- 보건복지부. (2024).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제4차). 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kr>
- 부산광역시 서구청. (2024). 서구 인구정책 및 가족정책 안내. <https://www.bsseogu.go.kr>

- 서울특별시. (n.d.). '미리내집' 공공임대주택 사업 안내.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 (n.d.). 산후조리 경비(바우처) 지원 안내.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n.d.). '더 아름다운 결혼식' 지원 사업. 서울특별시. <https://wedding.seoulwomen.or.kr/>
- 성남시. (n.d.). '솔로몬의 선택' 만남 주선 사업 안내. 성남시.
- 세종특별자치시. (n.d.). '나만의 결혼식' 사업 공고. 세종특별자치시.
- 여성가족부. (2024). 가족정책 기본계획(2024-2028). 여성가족부. <https://www.mogef.go.kr>
- 우해봉. (2018). 저출산 시대의 인구정책: 평가와 향후 방향. 한국인구학, 41(2), 31-59.
- 인구정책 50년사 편찬위원회. (2016). 출산억제에서 출산장려로 : 한국 인구정책 50년.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인천광역시. (n.d.). '천원주택' 공공임대주택 사업 안내. 인천광역시.
- 인천광역시. (n.d.). 1억+드림(아동·청소년 양육지원 통합 패키지). 인천광역시. <https://www.incheon.go.kr/welfare/WE020418>
- 조선일보. (2023, July 11). 기사: 성남시 '솔로몬의 선택' 만남 주선 관련 보도.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3/07/11/AAUAIKGTTRHKZFQCBQIL3JZU7S4/
- 지자체. (2025).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현황(2025.5 기준). 각 지자체 홈페이지.
- 최 유. (2021). 인구구조의 변화 대응을 위한 법제 연구 [연구보고서]. 한국법제연구원.
- 충청남도청. (2024). 충청남도 인구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충청남도청.
- 충청남도청. (2024). 충청남도 시군별 인구현황 자료. 충청남도청.
- 충남고용정보원. (2023). 지역소멸위험지수 분석 보고서. 충남고용정보원.
- 통계청. (2022, September 5).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 [보도자료].
- 통계청. (2023). 외국인 주민 현황 통계.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https://kosis.kr>
- 통계청. (2023). 장래인구추계.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https://kosis.kr>
- 통계청. (2024). 인구동향조사(연간 출생통계).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https://kosis.kr>
- 통계청. (2025). 국내인구이동통계(연령별 인구이동).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https://kosis.kr>
- 통계청. (2025). 2023년 시도 합계출산율(모의 연령별 출산율).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 통계청. (2025a). 2024년 인구이동 통계 보도자료. 통계청. <https://kostat.go.kr>
- 통계청. (2025b). 2025년 5월 국내인구이동통계.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 통계청. (2025c). 국내인구이동통계(연령별 인구이동).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 통계청. (2025d). 국내인구이동통계(시군구별 순이동률).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 통계청. (2025e). 주민등록 인구(시도).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https://kosis.kr>
- 평택시. (2025). 평택시 지역특화 인구정책 공모사업 안내 [블로그 게시]. 평택시 공식 블로그. https://blog.naver.com/PostView.nhn?blogId=pt_story&logNo=223764977853
- 한겨레. (2024). 전라남도 출생기본수당 관련 보도.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area/honam/1180064.html>
- Ro, Y. J., Oh, M. S., Kim, Y. H., & Kim, M. A. (2021). Current Status of Using the Edinburgh Postnatal Depression Scale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64(10), 699–710.

기본연구 | 2025-4

충청남도 저출산 인구정책 수립 기초연구

발행자 : 김 영 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발행일 : 2025년 12월 12일

발행처 : 충남사회서비스원

32560

충청남도 공주시 우금티로 753

공주대학교 옥룡캠퍼스 유아교육관 4층

ISBN : 979-11-92866-83-3

전 화 : 041-400-7285

인 쇄 : 경성문화사(044-868-3537)



충남사회서비스원
Chungnam Public Agency for Social Service